이 과제는 2010년 고용노동부의 학술연구용역사업의 일환으로 연구되었음

정부정책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및 평가(Ⅰ)

-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 -

2010. 08.

연구기관: 한국고용정보원

고 용 노 동 부

본 보고서는 고용노동부 용역과제로 한국고용정보원(총괄연구책임자: 주무현)에서 2010년 수행한 연구 결과입니다.

제 출 문

고용노동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고용노동부의 수탁연구과제 『정부정책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및 평가 -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0. 08.

연구진

총괄연구책임자: 주무현(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
연구책임자: 이해춘(성균관대학교 연구교수)
참여연구자: 윤석천(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
이상돈(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
안경애(순천향대학교 전임강사)
남기성(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
홍현균(한국고용정보원 연구원)
이재원(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
김정홍(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연구보조원: 윤 민(성균관대학교 석사과정)

목 차

제1장 연구목적 및 배경 ····· 1
제1절 연구목적 및 필요성 ····· 1
제2절 연구방법 및 구성 ····· 2

제2장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의 현황 ····· 4
제1절 사업의 법적근거 및 추진배경 ····· 4
제2절 지원 현황 및 성과 ····· 6
제3절 사업의 주요 내용 ····· 10

제3장 고용영향평가 모형 ····· 29
제1절 고용영향평가 모형의 구성 요소 ····· 29
제2절 고용영향평가 모형의 구조 ····· 31

제4장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의 고용영향 평가 실태조사 ····· 34
제1절 조사방법 ····· 34
제2절 사업체 고용영향 평가 실태조사 결과 ····· 37
제3절 주관기관 고용영향 평가 심층면접조사 결과 ····· 74

제5장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의 고용효과 분석 ····· 90
제1절 산업연관 고용효과 ····· 90
제2절 미시적 고용효과 ····· 107

제6장 평가 결과와 정책 제언 ····· 124
제1절 평가 결과의 종합 ····· 124
제2절 고용효과제고를 위한 정책 제언 ····· 129

부록: 고용영향평가 설문지(실태조사 및 심층조사) ····· 133

표 목 차

<표 2-1> 지역산업진흥사업 지원 현황('99~'08) ····· 6
<표 2-2> 지역산업진흥사업의 유형별 지원내역('99~'08) ····· 7
<표 2-3> 지역별 지역산업진흥사업 총사업비('08~'12) ····· 8
<표 2-4> 지역산업진흥사업의 사업의 조정 내역 ····· 8
<표 2-5> 지역산업진흥사업의 사업별 2009년 예산 ····· 8
<표 2-6> 4개 지역산업진흥사업으로 구축된 인프라 사업 현황('99~'08) ····· 13
<표 2-7> 9개 지역산업진흥사업으로 구축된 인프라 사업 현황('99~'08) ····· 14
<표 2-8> 지역혁신기반구축사업으로 추진 중인 인프라 사업 현황('99~'08) ····· 15
<표 2-9> 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 프로그램 개편 방향 ····· 17
<표 2-10> 지역산업진흥사업내 지역인력양성사업 참여주체 구성과 역할 ····· 20
<표 2-11> 지역산업진흥사업내 지역인력양성사업 추진주체의 세부 운영방안 ····· 21
<표 2-12> 지역인력양성사업 2단계 사업유형과 3단계 사업유형의 차이 ····· 22
<표 2-13> 지역인력양성사업 3단계 세부 유형 및 유형별 내용 ····· 23
<표 2-14> 지역산업진흥사업 평가관리체계 개편(안) ····· 28
<표 3-1> 평가항목과 평가지표 ····· 30
<표 4-1> 조사표본 현황 ····· 35
<표 4-2> 응답자 특성 ····· 39
<표 4-3> 창업년도 ····· 40
<표 4-4> 총종업원 현황 ····· 40
<표 4-5> 사업목표의 적합도-지역전략산업의 성장 부합정도 ····· 41
<표 4-6> 사업목표의 적합도-고용창출 제고에 부합정도 ····· 42
<표 4-7> 지역전략산업 사업계획 또는 목표의 고용효과 고려도 ····· 43
<표 4-8> 정책추진체계의 사업목적 적합도 ····· 44
<표 4-9> 사업 지원요건의 적절성 ····· 45
<표 4-10> 고용효과제고 위한 실천적 방안 마련 정도 ····· 46
<표 4-11> 사업의 집행정도 ····· 47
<표 4-12> 사업 집행체계의 적절성 ····· 48
<표 4-13> 정책집행과정의 고용효과제고 방안 마련 정도 ····· 49
<표 4-14> 특허권 해당 유무 ····· 50

<표 4-15> 특허권-고용에 미친 영향 ····· 51
<표 4-16> 공정의 개선-해당유무 ····· 52
<표 4-17> 공정의 개선-고용에 미친 영향 ····· 52
<표 4-18> 신제품의 개발-해당유무 ····· 54
<표 4-19> 신제품의 개발-고용에 미친 영향 ····· 55
<표 4-20> 매출의 증대-해당유무 ····· 56
<표 4-21> 매출의 증대-고용에 미친 영향 ····· 57
<표 4-22> 창업-해당유무 ····· 58
<표 4-23> 창업-고용에 미친 영향 ····· 58
<표 4-24> 인력양성사업 분야 참여구분 ····· 59
<표 4-25> 신규채용인력 ····· 59
<표 4-26> 재직자 훈련 인원수 ····· 60
<표 4-27> 직무능력 향상도 ····· 60
<표 4-28> 충분한 신규인력 공급정도 ····· 61
<표 4-29> 인력양성사업의 전반적인 성과정도 ····· 62
<표 4-30> 향후 인력양성계획 방식 ····· 62
<표 4-31> 지역전략산업의 성과관리 이행도 ····· 63
<표 4-32> 지역전략산업 성과관리의 고용효과 고려여부 ····· 64
<표 4-33> 지역전략산업의 사후관리 및 책임관리체계 이행도 ····· 65
<표 4-34> 지역전략 사후관리 및 책임관리체계의 고용효과 고려여부 ····· 66
<표 4-35> 사업의 종합 평가 - 지역산업의 경쟁력 제고 ····· 67
<표 4-36> 사업의 종합 평가 - 일자리 창출 기여도 ····· 68
<표 4-37> 고용창출 증가수준 ····· 69
<표 4-38> 사업참여 후 고용관련 애로 사항 - 인력양성사업 제외(복수응답) ····· 70
<표 4-39> 사업참여 후 고용관련 애로 사항 - 인력양성사업 (복수응답) ····· 71
<표 4-40> 고용효과제고를 위한개선방안 - 인력양성사업 제외(복수응답) ····· 72
<표 4-41> 고용효과제고를 위한개선방안 - 인력양성사업 (복수응답) ····· 74
<표 4-42>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이 목표 설정의 산업 성장과 고용효과제고에 부합성(수행기관심층조사) ····· 75
<표 4-43>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이 사업계획 또는 목표에 지역(기업)의 고용효과 고려정도(수행기관심층조사) ····· 75

<표 4-44>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의 목표에 고용효과를 고려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성 여부(수행기관심층조사) ····· 76
<표 4-45>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의 정책추진체계 적절성(수행기관심층조사) ····· 77
<표 4-46>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 추진체계 내의 고용 효과 고려 정도 ····· 79
<표 4-47>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의 추진체계에 고용효과를 고려의 타당성 ····· 80
<표 4-48>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의 지원형태, 지원방식, 지원기간, 지원자격의 적절성 ···· 82
<표 4-49>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의 성과관리의 적절성 ····· 85
<표 4-50>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의 성과관리에 고용효과를 고려여부 ····· 86
<표 4-51>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이 전반적으로 지역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고용효과제고에 기여여부 ····· 86
<표 4-52> 고용효과를 제고하도록 사업내용이 개선된다면, 현재에 비해 고용창출이 증가정도예상 ····· 86
<표 5-1> 산업연관구조 형식 ····· 93
<표 5-2> 생산유발계수표 ····· 93
<표 5-3> 사업유형별 지원 현황 ····· 94
<표 5-4> 유형별 과제 건 수 ····· 94
<표 5-5> 기반구축과 기술개발 유형의 조사자료 건 수 ····· 95
<표 5-6> 총사업비 구분과 직접 고용자 수 ····· 96
<표 5-7> 인프라사업의 사업비 구분과 직접 고용자 수 ····· 97
<표 5-8> 기술개발 사업의 사업비 구분과 직접 고용자 수 ····· 98
<표 5-9> 사업의 고용유발효과와 취업유발효과(총괄) ····· 99
<표 5-10> 사업비 대비 고용유발효과와 취업유발효과 ····· 100
<표 5-11> 사업의 부문별 고용유발효과 ····· 101
<표 5-12> 사업의 부문별 취업유발효과 ····· 102
<표 5-13> 사업유형별 고용유발효과 및 취업유발효과 ····· 103
<표 5-14> 사업비 단위당 사업유형별 고용효과 ····· 104
<표 5-15> 지역 내 취업유발효과 ····· 104
<표 5-16> 지역별 사업비 ····· 105
<표 5-17> 사업비 단위(10억원)당 지역 내 취업유발효과 ····· 105
<표 5-18> 전국 파급 취업유발효과 ····· 106
<표 5-19> 사업비 단위(10억원)당 전국 파급 취업유발효과 ····· 106

<표 5-20> 고용효과가 높은 사업 지역 ····· 107
<표 5-21> 상시근로자수·일자리창출·일자리소멸·순일자리창출 추이(2004~2009년) ··· 112
<표 5-22> 상시근로자수에 대한 분석결과 1(N = 6,500(그룹), 26,000(표본수)) ··· 115
<표 5-23> 상시근로자수에 대한 분석결과 2(N = 6,500(그룹), 26,000(표본수)) ··· 116
<표 5-24> 일자리창출량에 대한 분석결과 1(N = 6,500(그룹), 26,000(표본수)) ····· 117
<표 5-25> 일자리창출량에 대한 분석결과 2(N = 6,500(그룹), 26,000(표본수)) ····· 118
<표 5-26> 일자리소멸량에 대한 분석결과 1(N = 6,500(그룹), 26,000(표본수)) ····· 119
<표 5-27> 일자리소멸량에 대한 분석결과 2(N = 6,500(그룹), 26,000(표본수)) ····· 120
<표 5-28> 순일자리창출량에 대한 분석결과 1(N = 6,500(그룹), 26,000(표본수)) ·· 121
<표 5-29> 순일자리창출량에 대한 분석결과 2(N = 6,500(그룹), 26,000(표본수)) ·· 122
<표 6-1> 심층면접조사 결과의 종합 ····· 129

<부록 Ⅰ>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 고용영향평가조사 ····· 133
<부록 Ⅱ> 지역전략산업육성사업 고용영향평가조사 ····· 139

그 림 목 차

[그림 2-1] 지역산업진흥사업내 지역인력양성사업 추진체계 ····· 19
[그림 2-2] 지역산업인력양성사업의 교육프로그램 도출단계 및 결과 ····· 21
[그림 2-3] 지역산업인력양성사업의 교육프로그램 도출단계 및 결과 ····· 24
[그림 3-1] 평가모형의 구조 ····· 31
[그림 5-1] 산업연관 고용효과 분석 모형 ····· 91

【 요 약 】

제1장 연구 배경 및 목적

○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근거에 의해 1999년부터 지식경제부가 주관하는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은 지역전략산업의 기반 확충 및 경쟁력 제고를 주된 목표로 수행

- 이 사업은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3개 시·도(4+9)를 대상으로 공동인프라, 기술개발, 인력양성, 마케팅지원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패키지방식으로 지원

○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은 그 동안 지역산업의 발전 및 고용창출에 기여하여 온 것으로 평가되어 왔으나, 기 구축된 고가 장비의 활용이 부족하고 성과평가체계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미흡한 측면이 지적

○ 본 연구는 이와 같이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지역전략진흥사업의 고용영향평가를 통해 고용효과성을 분석하고 동 사업이 보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특히 동 사업이 지역고용 및 인적자원개발정책과의 상호연계성이 강화될 수 있는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사업의 효과성 및 일자리 창출 파급효과를 제고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음

제2장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의 현황

○ (목적) 지역전략산업*의 기반 확충 및 경쟁력 제고

- 부산(물류, 신발, 기계부품, 해양생물), 대구(소프트웨어, 섬유, 메카트로닉스, 모바일, 생물), 광주(광, 전자부품, 자동차부품), 경남(기계, 지능형 홈, 생물, 항공), 대전(생물의화학, 정보통신), 경북(전자정보, 생물, 소재부품, 자동차부품), 충북(전자정보, 보건의료), 전남(생물농업, 소재), 충남(자동차부품, 전자정보, 생물), 전북(생물, 자동차부품, 기계, 소재), 울산(자동차, 정밀화학), 강원(생물, 의료기기, 신소재, 방재), 제주(생물)

○ (내용)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3개 시·도에 인프라구축, 기술개발, 인력양성, 기업지원 등을 패키지 방식으로 지원('99~)

- ('99~'08)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09)지역전략산업육성사업→('10)지역산업진흥사업

【 요 약 】

세부 사업	내용
기반구축	전략산업 관련 연구 및 기업지원의 기반이 되는 지역특화센터 설립 및 장비지원 * 전북자동차기술원의 부품시험장비 및 창업보육시설, 대구테크노파크의 대구바이오산업지원센터 건립 등
기술개발	지역내 벤처기업 및 중소기업에 맞춤형·실용화 R&D과제 지원
기업지원	기술이전, 품질인증, 마케팅 및 컨설팅 지원
인력양성	전략산업 분야 현장인력 양성 및 취업 지원. 지역별 인력양성협의체 통한 공동 수요조사, 교재개발 등 추진

○ (추진체계) 지식경제부 주관으로 지자체와 협력하여 사업 추진

– 총괄 대행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별 사업 추진·평가·관리는 지역별 테크노파크*가 수행

* 13개 지역에 있는 재단법인으로 기존의 전략산업기획단, 지역특화센터 등이 통합된 조직

○ 평가항목의 개요 사업유형별 지원현황('05∽'09) (단위: 억원, %)

		2005	2006	2007	2008	2009	계	연평균 증감률
기반 구축	국비	1,808.0	1,938.0	1,500.5	1,022.2	941.3	7,210.0	−15.1
	지방비	943.6	776.0	670.7	601.4	1,021.4	4,013.1	2.0
	계	2,751.6	2,714.0	2,171.2	1,623.6	1,962.7	11,223.1	−8.1
	(비중)	(59.8)	(59.1)	(53.1)	(38.8)	(44.4)	(51.3)	
기술 개발	국비	1,427.3	1,479.3	1,477.6	1,773.4	1,354.1	7,511.7	−1.3
	지방비	113.3	121.0	97.0	103.4	132.9	567.6	4.1
	계	1,540.6	1,600.3	1,574.6	1,876.8	1,487.0	8,079.3	−0.9
	(비중)	(33.5)	(34.8)	(38.5)	(44.8)	(33.6)	(36.9)	
기업 지원	국비	134.1	114.0	144.7	251.2	297.8	941.8	22.1
	지방비	63.2	70.5	74.0	168.9	282.0	658.6	45.3
	계	197.3	184.5	218.7	420.1	579.8	1,600.4	30.9
	(비중)	(4.3)	(4.0)	(5.3)	(10.0)	(13.1)	(7.3)	
인력 양성	국비	85.0	65.0	104.3	193.3	277.3	724.9	34.4
	지방비	29.3	28.6	22.5	72.3	114.6	267.3	40.6
	계	114.3	93.6	126.8	265.6	391.9	992.2	36.1
	(비중)	(2.5)	(2.0)	(3.1)	(6.3)	(8.9)	(4.5)	
계	국비	3,454.4	3,596.3	3,227.1	3,240.1	2,870.5	16,388.4	−4.5
	지방비	1,149.4	996.1	864.2	946.0	1,550.9	5,506.6	7.8
	계	4,603.8	4,592.4	4,091.3	4,186.1	4,421.4	21,895.0	−1.0
	(비중)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요 약 】

- 기반구축 11,223억원(51.3%), 기술개발 8,079억원(36.9%), 기업지원 1,600억원(7.3%), 인력양성 992억원(4.5%)

제3장 고용영향 평가모형

○ 정책의 고유목표 달성도와 고용연계성 평가

- 사업목표의 적합성 및 실현가능성 평가
- 사업추진체계의 합리성 평가
- 사업집행의 적절성 평가
- 사업목표 달성도 평가
- 사업목표의 고용과 연계가능성
- 사업집행과 고용 연계성

○ 평가항목의 개요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방법
정책의 고유목표 달성도	· 사업목표의 적합성 및 실현가능성 · 사업추진체계의 합리성 · 사업집행의 적절성 · 사업 목표 달성도	정성평가 정성평가 정성평가 정성·정량평가
정책의 고용연계성	· 사업목표의 고용과 연계가능성 · 사업집행과 고용 연계성	정성평가 정성평가
고용영향 분석·평가	· 정책으로 인해 창출되는 최대 일자리의 양 · 정책 시행에 따라 창출된 일자리의 양	(거시적분석) (미시적분석)

주: 노동부, 고용영향평가 시행매뉴얼(2010.2)을 참조.

○ 사업의 고용효과에 대한 거시적 평가

- 거시적분석이 가능한 사업 유형은 지역산업기반구축, 지역산업기술개발 등 2가지 유형의 사업에 대해 일자리창출의 직·간접효과를 분석
- 전국산업연관표 및 지역산업연관표를 이용한 산업연관고용영향 평가

○ 사업의 고용효과에 대한 미시적 평가

- 지역전략진흥사업 중 지역산업기술개발 사업의 유형은 수혜기업의 고용변동 및 고용효과 분석하고, 인력양성사업은 교육수혜 자의 고용효과 및 고용안정성에 관해 미시적분석 실시

【 요 약 】

- 사업의 수혜기업 자료와 고용보험 DB원자료와의 결합 및 관련 경영정보 등을 이용하여 직종별, 연령 및 성별 등 인적특성별 고용효과를 분석

제4장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의 고용영향 평가 실태조사 결과

○ 고용영향 평가매뉴얼에 입각하여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에 대한 실태조사 및 심층조사를 수행하고 이를 통해 정책시사점을 도출하였음

- 실태조사(474개 기업 응답): 기반구축사업 84개(17.7%), 기술개발사업 199개(42.0%), 기업지원사업 100개(21.1%), 인력양성사업 91개(19.2%)
- 심층면담조사: 사업유형별 사업 주관기관 리스트 279개 중 58개 기관

○ 전국 단위의 사업에서 배제되던 지역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 기업들의 기술혁신 역량이 제고

- 동 사업으로 지원받은 기업 중 대부분(88.6%)이 전국단위 기술개발사업*에서 탈락하였으나, 지원 결과 높은 사업화 성공률 보임
- 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의 사업화 성공률 47.8%, 전국단위 기술개발사업의 평균 성공률 42.2% ('07년) [출처: 산업연구원, 삼성경제연구소,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한국산업기술재단 (2008.9), 13개 시·도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 타당성 조사]

  · 지식경제부의 전국단위 기술개발사업의 예: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 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 지식경제프론티어기술개발사업 등

○ 설문조사 응답자 대부분이 동 사업을 통해 지역산업의 경쟁력이 제고된 것으로 평가(응답자 81.4% '긍정적')

- 부문별로는 신제품개발(79.4%), 매출증가(64%), 공정개선(56.7%), 특허권(51.2%)에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남

○ 최근 테크노파크로 거점기관을 일원화하는 과정에서 실행 주체 간 갈등 발생, 테크노파크 역량 미흡 등 추진체계 효율성 문제 지적

- 기업수요에 대응한 기술개발·인력양성·마케팅·컨설팅 체계가 연계되지 못할 것을 우려
- 주요 대규모 사업의 경우 중앙에서 평가·관리함에 따라 지역기업의 수요와 괴리된 지원정책 추진

【 요 약 】

○ 기반구축사업, 기술개발사업 통해서 직접 고용창출 가능

- 지역특화센터에 석·박사 학위 소지자나 기업의 현장경험 풍부한 고급 기술인력 총 1,057명(박사 259, 석사 329, 학사 469) 종사

○ 인력양성사업은 일부 지역·분야(부산 신발, 대구 섬유·생물, 경남 기계)에서만 추진되다가 최근 전국으로 확대

- 전략산업 분야 현장인력 및 취업연계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영함으로써 지역산업 인력의 고급화 및 지역 정착 유도

○ 설문조사 결과 동 사업수행 시 고용효과를 고려*하고 있음

- 연구원 채용시 인건비 지원, 사업평가시 우대, 중소기업 신규인력 채용시 연구원 인건비 지원 등
- 단계별로는 정책목표설정(85.4%)·사업자선정(79.7%) 단계보다 성과관리(59.5%)·책임관리(57%) 단계에서 고용효과를 덜 고려[()는 사업수행단계 중 고용효과를 고려하고 있다고 답한 비율]

○ FGI 결과 동 사업 주관기관은 고용에 대한 중요성 인지하고, 성과지표에 고용효과가 반영되도록 하고 있다고 응답

- 사업 주관기관 80% 이상이 정책 수립 시 고용효과를 고려해야한다고 응답
- 성과지표로 '고용증가' 항목 설정, 사업(중간)결과 평가기준으로 '고용현황의 개선' 등을 활용
- 고용에 대한 정량적 성과지표가 없어 실제 사업 추진에 반영 미흡

제5장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의 고용효과

○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의 실증적 고용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산업연관분석방법을 이용

- 정부투자사업 사업비의 산업부문별 지출액을 추계하여 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하면, 사업비 지출증가 → 국내 최종수요 증가 → 파급과정을 거친 산업부문별 생산 증가 → 고용 증가의 경로로 고용효과 파악
- 자료: 한국은행 전국산업연관표(2005년, 2007년), 지역산업연관표(2005년), 산업별 고용자 수, 산업별 취업자 수,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의 사업비, 사업시행의 고용자 수 등

【 요 약 】

○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의 사업비(기반구축사업, 기술개발사업, 기업지원사업 및 인력양성사업)는 2005년~2009년 기간 중 2조1,895억원(국비 1조6,388억원, 지방비 5,507억원) 지원

- 사업비 지출내역은 일반기계(511,771백만원, 사업비 중 23.4%), 정밀기계(355,476백만원, 16.3%) 등의 제조업 부문과, 건설(191,964백만원, 8.8%), 교육서비스(39,195백만원, 1.8%) 사업서비스(57,974백만원, 2.7%) 등에 지출

○ 2005년~2009년 기간 중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의 수행으로 발생한 직접 고용자 수 14,152명, 유발고용자 수 26,553명으로 고용유발효과는 40,705명

○ 동 기간 중 직접고용자 수(14,152명)에 유발취업자 수(33,249명)를 포함하여 취업유발효과는 47,402명

○ 사업의 고용유발효과와 취업유발효과(총괄)(단위: 명)

		2005	2006	2007	2008	2009	계
	직접고용자 수(A)	1,656	2,375	1,858	4,453	3,810	14,152
	유발고용자 수(B)	5,810	6,056	4,923	4,740	5,024	26,553
고용유발효과(C=A+B)		7,466	8,431	6,781	9,193	8,834	40,705
	직접고용자 수(A)	1,656	2,375	1,858	4,453	3,810	14,152
	유발취업자 수(D)	7,198	7,464	6,114	6,006	6,467	33,249
취업유발효과(E=A+D)		8,854	9,839	7,972	10,459	10,277	47,402

○ 2005년~2009년 기간 중 단위 사업비(10억원)당 고용유발효과는 18.6명, 취업유발효과는 21.6명

- 사업의 고용유발효과 및 취업유발효과는 산업평균에 비해 높은 편
- 최종수요 10억원당 산업전체의 평균적 고용유발효과(2007년 기준) 12.5명, 취업유발효과 19.6명

○ 사업비 대비 고용유발효과와 취업유발효과 (단위: 억원, 명/10억원)

	2005	2006	2007	2008	2009	계
총사업비(W) (억원)	4603.8	4,592.4	4091.3	4186.1	4421.4	21,895
고용유발효과 (C/W) (명/10억원)	16.2	18.4	16.6	22.0	20.0	18.6
취업유발효과(D/W) (명/10억원)	19.2	21.4	19.5	25.0	23.2	21.6

【 요 약 】

○ 2005~2009년 기간 중 사업의 유형별 고용효과(고용유발효과 및 취업유발효과)를 보면 기술개발사업과 기반구축사업이 높음

–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의 1,2차 실행 중 기반구축사업과 기술개발사업이 주력으로 일반기계, 정밀기계, 건설 등에 대한 지출이 규모면에서 큰 것에 기인

○ 사업 유형별 고용유발효과와 취업유발효과 (단위: 명)

		2005	2006	2007	2008	2009	계
고용유발효과	기반구축	4,251 (15.4)	4,427 (16.3)	3,246 (15.1)	2,765 (17.2)	3,214 (16.2)	17,903 (16.0)
	기술개발	2,794 (18.1)	3,608 (22.5)	3,080 (19.6)	5,501 (29.3)	4,296 (28.9)	19,280 (23.9)
	기업지원	210 (10.6)	212 (11.5)	233 (11.0)	462 (11.0)	637 (11.0)	1,754 (11.0)
	인력양성	211 (18.5)	183 (19.6)	222 (17.5)	465 (17.5)	686 (17.5)	1,767 (17.8)
	계	7,466 (16.2)	8,430 (18.4)	6,781 (16.6)	9,193 (22.0)	8,833 (20.0)	40,705 (18.6)
취업유발효과	기반구축	5,058 (18.4)	5,253 (19.4)	3,866 (17.9)	3,249 (20.2)	3,820 (19.3)	21,246 (19.0)
	기술개발	3,294 (21.4)	4,118 (25.7)	3,565 (22.6)	6,107 (32.5)	4,882 (32.8)	21,966 (27.2)
	기업지원	253 (12.8)	253 (13.7)	278 (13.1)	551 (13.1)	760 (13.1)	2,095 (13.1)
	인력양성	249 (21.8)	215 (23.0)	264 (20.8)	552 (20.8)	815 (20.8)	2,095 (21.1)
	계	8,854 (19.2)	9,839 (21.4)	7,973 (19.6)	10,459 (25.1)	10,277 (23.2)	47,402 (21.7)

○ 사업비 단위(10억원)당 고용효과를 파악하면, 기술개발사업과 인력양성사업의 고용측면 효율성이 높음

– 기술개발사업은 사업비 단위당 고용유발효과가 23.9명/10억원, 취업유발효과가 27.2명/10억원이며 인력양성사업은 고용유발효과가 17.8명/10억원, 취업유발효과가 21.1명/10억원

– 기술개발사업의 사업비 대비 고용효과가 높은 것은 단기간에 다수의 기업(혹은 기관)에게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생산 효율성이 상대적으로 높은데 기인

– 인력양성사업의 고용측면 사업효율성이 높은 것은 사업내용이 주로 교육과 훈련에 집중되어 있어 교육서비스의 고용파급효과가 높은데 기인

【 요 약 】

○ 사업지역별로는 대구, 광주, 강원, 제주의 취업유발효과가 상대적으로 높음

- 대구, 광주는 지역 내 취업유발 및 전국 취업유발효과가 높고, 강원·제주는 전국취업유발효과가 높음
- 대구, 광주는 조기시행('99년~)으로 동 사업이 정착되었으며, 대구는 취업유발계수가 높은 지역적 특성, 광주는 사업내용이 취업유발계수가 높은 정밀기계(한국은행, 정밀기기 취업유발계수 광주: 17.0, 전국평균: 12.0)에 대한 투자비중(전체 투자비의 40%)이 높은 데 기인한 것으로 보임
- 한국은행 지역산업연관표의 최종수요 10억원당 취업유발계수('05년): 대구<12.2명>, 광주<9.6명>, 강원<13.0명>, 제주<14.7명>, 전국평균<9.4명>
- 강원, 제주는 지역특성상 취업유발계수가 높은 지역임. 제주는 사업내용에서 IT 서비스 지원, 모바일통신방송 등 파급효과 높은 부문 지원으로 취업유발효과가 크게 나타난 것으로 보임

○ 지역별 취업유발효과('05~'09) (단위: 명, 억원)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충남	강원	제주	계
지역 내 취업유발	3,580	3,507	4,571	3,413	1,225	945	1,288	761	19,290
	(9.4)	(14.2)	(17.1)	(12.4)	(11.2)	(7.7)	(12.5)	(15.8)	(12.4)
전국 취업유발	6,549	5,574	6,548	5,194	2,178	1,959	2,212	1,059	31,272
	(17.1)	(22.6)	(24.6)	(18.9)	(19.9)	(15.9)	(21.5)	(21.9)	(20.1)
사업비	3,818.7	2,467.6	2,666.0	2,746.7	1,093.1	1,228.5	1,027.4	483.0	15,530.8

주: * ()는 사업비 10억원당 취업유발계수

○ 고용보험 DB에서 분석에 필요한 사업체의 2004~2009년 정보를 이용하여 지역산업진흥사업의 고용효과를 추정하게 되므로 여기에서는 패널회귀모형을 분석방법으로 채택함

○ 패널데이터는 시계열의 특성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시간에 걸친 관성(inertia)을 가질 수 있음

- 이처럼 변수가 시간에 따라 관성이 나타나는 경우는 아래와 같이 표현됨

○ $y_{i,t} = \beta y_{i,t-1} + \gamma D_{i,t} + \delta X_{i.t} + \zeta_t + \eta_i + u_{i,t}$

- $D_{i,t}$는 지역산업진흥사업에 참여하였는지를 나타내는 변수로 참여한 사업체는 1의 값을, 참여하지 않은 사업체는 0의 값을 가지게 됨. 따라서 γ가 지역산업진흥사업의 고용효과를 나타내게 됨

【 요 약 】

- $X_{i,t}$는 $y_{i,t}$를 결정하는 설명변수 벡터, ζ_t는 시간에 걸쳐 변화하되 개별 사업체 $i(=1,\cdots,I)$ 모두에게 나타나는 효과
- 오차항 $u_{i,t}$는 $u_{i,t}=\pi u_{i,t-1}+\nu_{i,t}$로 오차항에서도 시간에 걸친 관성이 나타나며, $\nu_{i,t}$는 $IID(0,\ \sigma_\nu)$

○ η_i는 관찰되지 않는 오차항이므로 일종의 내생성(endogeneity)을 가지게 됨. 따라서 이를 제거하여야 하는데 1차 차분(first-difference)이나 준차분(quasi-difference)을 이용

○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에 참여한 사업체(처리집단, treatment group)가 고용에서 어떠한 변화를 보이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지역산업진흥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사업체(통제집단, control group)와 비교

- 참여 사업체와 비참여 사업체가 임의적으로(randomly) 선정되지 않았다는 점임. 따라서 최대한 두 집단의 특성이 가깝도록 함으로써 지역산업진흥사업의 참여가 가지는 고용효과를 측정

○ 성향 점수 짝짓기(propensity score matching) 방법으로 분석 대상을 추출

○ 지역산업진흥사업에 참여한 사업체 정보로부터 지역산업진흥사업에 참여한 사업체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10개 업종을 선정

○ 고용보험 DB로부터 해당 업종의 2004~2009년 사업체 정보를 얻고, 6년간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여 성향점수를 추정하고, 이로부터 분석 대상을 결정

- 성향점수 추정은 처리집단을 1, 통제집단을 0으로 하는 종속변수에 대하여 2004년의 사업체 규모(상시근로자수 0명, 1~4명, 5~9명, 10~29명, 30~49명, 50~99명, 100~299명, 300~499명, 500~999명, 1,000명 이상), 2004~2009년 고용안정지원금액 총액(자연대수치), 사업서비스업(= 1)을 설명변수로 포함

○ 성향 점수 추정을 통하여 유사한 속성을 가진 것으로 분류되는 사업체 3,678개소에 대하여 패널임의효과(panel random-effect) 회귀분석을 실시

- 피설명변수는 상시근로자수(자연대수치), 창출된 연간 일자리 수, 소멸된 연간 일자리 수, 창출된 순일자리 수(= 창출된 일자리 수 - 소멸된 일자리 수)

【 요 약 】

- 설명변수는 지역산업진흥사업 참여 여부(참여 = 1, 비참여 = 0), 전년도 상시근로자수(자연대수치), 전전년도 상시근로자수(자연대수치), 고용보험 성립기간, 연간 더미변수, 지역 더미변수(16개 지역), 산업 더미변수(중분류) (※ 창출(소멸)된 (순)일자리 수의 경우는 전년도, 전전년도의 창출된(소멸)된 (순)일자리 수를 설명변수에 포함)

○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의 참여는 상시근로자수의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상시근로자수의 변화로 고용효과를 추정하는 경우에는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이 고용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진다고 할 수 있음

○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의 고용효과는 지역간에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 1차 사업에 참여한 지역(4개 지역)인 부산, 대구, 광주, 경남 지역과 여타 9개 지역간을 비교할 때, 고용효과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사업참여와 고용효과의 분석 결과

피설명변수 / 설명변수	상시근로자수	일자리 창출량	일자리 소멸량	순일자리 창출량
사업참여(D)	0.051***	0.654	1.687	1.833
사업참여(D)*사업서비스업	−0.050	9.261**	3.168	3.502
사업참여(D)*4개 지역(1차 지역)	−0.014	−0.842	−1.198	−1.101
고용안정지원금수급액(자연대수치)	0.002***	−0.028	0.127***	−0.073***
사업참여(D)*고용안정지원금수급액	−0.001	−0.009	−0.107	−0.007

○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은 상시근로자수의 증가에 기여(계수값: 0.051)하고 있음

- 그러나 사업참여는 일시적으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지만, 사업기간이 짧을 경우 일자리 소멸을 유도하여 순고용효과는 크지 않음

제6장 고용효과제고를 위한 정책제언

○ 고용영향 측면에서 기반구축사업은 주로 시설과 장비구축사업으로 고용효과가 상대적으로 작으므로 고용창출을 위해서는 기술개발사업 및 인력양성사업의 확대 필요

【 요 약 】

– 기반구축사업의 활용성 제고 필요성: 기존에 구축된 시설 및 장비의 활용도 제고를 통해 고용효과를 창출할 필요성이 있음. 구체적으로 인큐베이팅 기능 강화, 구축된 장비·시설을 이용한 기업지원 서비스 강화 및 인력양성 및 창출기능 강화, 시설을 이용한 생산기능 강화 등이 요구

– 기술개발사업의 지원기간 조정 필요성: 지원건수가 많은 기술개발사업은 지원기간이 비교적 짧아 순고용창출효과가 적은 편임. 지역의 경제적 환경과 여건에 맞게 조정하여 핵심기술 개발사업의 지원기간을 조정함으로써 참여인력의 고용안정성에 기여할 필요가 있음

– 인력양성사업의 확대 필요성: 인력양성사업은 고용효과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므로 확대 개편할 필요

○ 사업의 고용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업지역 간 고용효과 편차를 축소할 필요성이 제기됨

– 지역의 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여 사업지역 간 사업비의 조정지원

– 지역 내 고용영향 효과 및 전국파급 고용영향 효과가 상대적으로 큰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여 고용효과 제고

– 지역에 따라 사업유형별로 사업비당 고용효과가 차이가 나므로 지역여건에 따라 고용효과가 큰 사업유형을 적극적으로 지원

○ 사업계획 당시부터 고용영향 평가용 예산을 이용하여 사전적 고용영향을 평가하여 고용친화적 사업으로 유도

– 고용영향 평가용 예산: 사업비 지출계획에서 집행할 사업비를 표준산업분류(혹은 산업연관표 대분류(중분류 등)로 구분한 예산서

– 실증적으로 이용 가능한 IO고용영향 평가모형으로 계획된 사업의 고용효과를 점검하여 사업조정을 유도. 동일유형의 사업에서도 세부적인 사업유형별 사전고용영향평가를 통해 조정 가능

– 지역별, 사업유형별(세부사업 포함) 고용영향 효과를 파악하여 사업조정을 유도

– 사전고용영향평가 도입하여 고용효과 높은 사업 우선 선정

【 요 약 】

○ 목표설정에 고용효과를 구체적으로 고려: 고용효과와 관련된 세부 목표를 설정하게끔 유도하고 평가에 그 사항에 대한 배점을 하여 고용창출효과가 제고되도록 사업과정 시스템 구축

– 사업의 정량적 및 정성적 목표에 고용창출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따른 구체적 실천 계획을 포함시켜 성과 제고

○ 사업선정시 고용효과 지표 반영: 고용효과 등의 사항을 사업선정 평가지표에 반영하여 사업공고시 반영하도록 함

– 사업 선정시 고용유발효과를 반영하여 평가하고 있으나, 이를 정량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지표가 별로 없음. 사업선정 평가시 고용의 직, 간접적 효과를 수치화 한 지표를 개발하여 객관적·정량적 평가가 가능토록 해야 할 것임

○ 고용효과는 지역의 산업구조와 산업성숙 정도 및 기업의 규모 등에 의해 지역간 격차가 큰 편임. 고용효과의 정량적 평가지표 개발시 지역여건에 따라 성과 판단 기준을 어떻게 해야 할 지 고려해야 함

제1장 연구목적 및 배경

제1절 연구목적 및 필요성

가. 연구의 배경

○ 지식정보화 및 기술진보, 산업구조 고도화 등의 빠른 진전에 따라 경제성장의 고용창출력이 과거에 비해 크게 저하되는 환경 변화에 대응, 적극적인 고용전략 수립, 고용친화적 경제·산업정책 추진, 일자리창출을 저해하는 규제·제도 개선이 시급한 과제로 제기

- 특히 고용창출력 제고라는 관점에서 경제·산업정책, 각종 규제·제도가 일자리 창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고, 이들 정책·제도가 고용친화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효과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

○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근거에 의해 1999년부터 지식경제부가 주관하는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은 지역전략산업의 기반 확충 및 경쟁력 제고를 주된 목표로 수행

- 이 사업은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3개 시·도(4+9)를 대상으로 공동인프라, 기술개발, 인력양성, 마케팅지원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패키지방식으로 지원

○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은 그 동안 지역산업의 발전 및 고용창출에 기여하여 온 것으로 평가되어 왔으나, 기 구축된 고가 장비의 활용이 부족하고 성과평가체계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미흡한 측면이 지적

나. 연구의 목적

○ 본 연구는 이와 같이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지역전략진흥사업의 고용영향평가

를 통해 고용효과성을 분석하고 동 사업이 보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특히 동 사업이 지역고용 및 인적자원개발정책과의 상호연계성이 강화될 수 있는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사업의 효과성 및 일자리 창출 파급효과를 제고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음

제2절 연구방법 및 구성

가. 연구방법

○ 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전략산업진흥 사업의 고용영향 평가에 초점을 맞추고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연구내용도 사업전반에 걸친 평가가 아닌 고용영향의 효율성 제고관점에서 평가 수행

- 고용영향평가 연구는 노동부의 고용영향평가 매뉴얼(2010년 2월)의 내용에 입각하여 실시함과 동시에 사업의 고용영향에 관한 정책제언을 할 수 있도록 실시

○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구성

- 정책의 고유목표 달성도 평가
- 정책의 고용연계성 평가
- 고용영향 분석 및 평가

○ 본 연구의 방법은 평가모형의 정립, 실태조사, 계량분석 등을 통해 정성적·정량적 평가를 실행

- 고용영향 평가모형의 정립: 평가지표의 개발을 통한 평가모형의 구축
- 실태조사 및 심층면접(FGI) 실시
- 산업연관모형을 통한 고용파급효과 측정 및 계량분석(PSM) 실시

나. 연구의 구성

○ 본 연구의 구성을 보면,

-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의 법적 근거와 현황 파악 및 향후 계획 점검
- 노동부 매뉴얼에 입각한 평가모형의 정립
- 조사 표본을 구성하여 고용영향평가 실태조사와 심층면접조사 및 FGI 실시
- 고용영향 분석·평가를 위한 자료 구축
- 전국산업연관표와 지역산업연관표를 이용한 산업연관 고용영향 분석
- 고용보험 DB를 이용한 계량분석(PSM)
- 정성적 평가와 정량적 평가를 결합한 고용영향 평가의 종합
- 고용친화적 사업조정을 위한 정책제언 등

제2장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의 현황

제1절 사업의 법적근거 및 추진배경

가. 법적근거

⑴ 법적근거

○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의 주관부서는 지식경제부

– 법적근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조 및 10조

· 「산업발전법」 제8조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조, 제3조의 2, 제22조의 3 및 동 법시행령 제7조의 3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 1항 3호, 제11조 1항 8호

나. 추진배경

⑴ 동 사업의 추진배경

○ 1990년대 말 들어 글로벌 경제의 심화와 함께 경쟁단위가 국가간 경쟁에서 지역간 경쟁으로 변모하고, 지역혁신을 통한 산업클러스터의 활성화가 주요 이슈로 등장함

– 지역경제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산업의 문제」이며, 지역산업 활성화가 지방의 구조불황을 극복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안으로 인식

– 당시 국내산업은 기존 주력산업이 침체된 반면, 지방의 기술 및 혁신기반이 취약하여 이를 대체할 지식기반 신산업이 부재하였음

· 경남·울산지역: 전국 생산의 10%이상 점유하는 3~4개 산업 존재

· 전북·강원·제주: 기술혁신, 산업인력양성 등 자생적인 산업혁신 기반이 미흡하여 기업의 창업 및 이전을 유인할만한 여건이 미비

○ 이에 따라 1990년대 후반부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별 전략산업을 육성하는 지역산업진흥정책을 적극 추진하였음. 1999년 4개 지역사업 시작이 후, 2002년부터는 9개 지역사업을 통해 지원대상을 비수도권 전체로 확대함

– 4개 지역 1단계 사업('99~'03년): 대구, 부산, 광주, 경남

– 9개 지역 1단계 사업('02~'07년): 울산·경북·강원, 대전·충남·충북, 전남·전북·제주

○ 참여정부기간 동안,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을 통해 전략산업 선정, 균특회계 등을 제도화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정책의 틀 속에서 지역전략산업에 대해 지속 지원(4개 지역 2단계 사업 추진) 및 지원규모 확대함

○ 지역산업진흥정책에 대한 10년간의 지원을 통해 지역산업 성장을 위한 기반은 마련되고 있으나, 지역의 자생적 경쟁력 확보는 아직도 미흡한 편이며 수도권의 인구증가는 지속되는 반면, 지방은 인구 감소가 지속되고 있음

– 권역별 인구 비중

· 수도권: 2000년에는 46.3%이고, 2007년에는 49%로 7년 동안 약 3%의 인구가 증가함

· 호남권: 2000년에는 11.4%이고 2007년에는 10.3%로, 7년 동안 수도권에 비해 약 1%의 인구가 감소함

○ 지역내총생산(GRDP)도 충청권, 대경권을 제외하고는 전국 평균 GDP의 연평균 증가율보다 저조하였음

– 2000~2006년간 GRDP 연평균증가율

· 수도권은 4.96%, 충청권 5.9%, 동남권 4.58%, 호남권 3.62%, 대경권 5.24%, 강원 3.03%, 제주 3.80%(동기간 GDP는 연평균4.63% 성장)

○ '강한 지방'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지역산업 성장을 위한 국가의 지속적인 지원 필요함

- 이를 위해 2008년 신규 예산 1,200억원(9개 지역)을 토대로 4+9사업에 이은 새로운 지역산업진흥사업('08～'12년)을 추진하고 있음

제2절 지원 현황 및 성과

가. 지원 현황

(1) 지원 현황

○ 우리나라는 1999년부터 2008년까지 비수도권 13개 시·도의 전략산업 지원을 위해 총 2조 6,146억원을 투입하였음(국비 출연금, 보조금 기준)

- 전체 국비 중 4개 지역에 1조7,096억원(65.4%), 9개 지역에 9,050억원(34.6%)을 지원하였음
- 부산, 대구 등 4개 지역에 전체 국비의 60% 이상을 지원하였음

<표 2-1> 지역산업진흥사업 지원 현황('99～'08)

구분		대상지역	지원대상 및 내용	국비 (억원)
4개 지역사업	1단계 ('99～'03)	대구, 부산, 경남, 광주	·섬유, 신발, 기계, 光 ·인프라, R&D, 인력양성	7,023
	2단계 ('04～'08)		·시도별 전략산업(2～3개) ·인프라, R&D, 기업지원, 인력양성	9,496
9개 지역사업 ('02～'07)		4개 지역 제외 비수도권 9개 지역	·시도별 전략산업(2～3개) ·인프라, R&D	7,407
지역혁신산업기반 구축사업('05～)		비수도권 13개 지역	·시도별 전략산업(2～3개) ·4+9사업을 보완하여 인프라, R&D, 기업지원, 인력양성 지원	2,220

○ 인프라 구축, 기술개발(R&D), 기업지원, 인력양성 등 지역전략산업의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을 실시하였음

- 특히, 산업발전 기반 마련을 위해 인프라 구축에 많은 재원 투입함

○ 2008～2012년간 13개 지역에 국비 총 1조 3,553억원 수준으로 지원 예정임 그리고 2009년 이후 투자계획은 매년 예산심의 결과 등에 따라 변동이 가능함

13개 시도에 4~5년간 지역별 평균 873억원 수준으로 지원하였음

- 지역의 경제규모, 기업 수 등을 고려하여 설정된 지역별 지원규모안을 토대로 지역이 수립한 사업계획에 대한 조정을 거쳐 결정된 것임
- 그간 추진된 사업의 평균 지원규모는 9개 지역 823억원이고, 4개 지역 2단계 2,374억원이었음

○ 사업유형별로는 H/W적 인프라 구축보다는 기술개발, 기업지원 서비스 등 S/W 사업에 집중 투입하였음

- 세부 유형별: 기술개발 5,527억원(48.7%), 인프라 구축 2,773억원(24.4%), 기업지원 서비스 1,379.3억원(12.1%), 전략산업 기획 540억원(4.8%) 등임
- 기존 사업의 국비 중 인프라사업 비중: 9개 지역 1단계(70%), 4개 지역 2단계(32%)임

<표 2-2> 지역산업진흥사업의 유형별 지원내역('99~'08)

(단위: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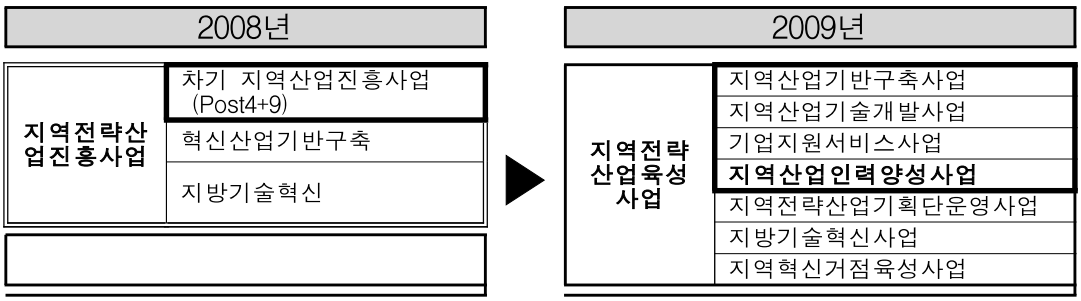
구 분	4개 지역		9개 지역 ('02~'07)	혁신산업 기반구축 ('05~'08)	합 계
	1단계 ('99~'03)	2단계 ('04~'08)			
총 지원국비	7,023	9,496	7,407	2,220	26,146
[인프라 구축] 전략산업 관련 연구 및 기업지원의 기반이 되는 센터설립과 장비구축	3,302 (47.0%)	3,045 (33.2%)	5,193 (70.1%)	1,725 (77.7%)	13,265 (50.7%)
[기술개발] 전략산업 성장을 위한 R&D과제 지원	1,930 (27.5%)	5,136 (54.1%)	1,761 (23.8%)	403 (18.2%)	9,230 (35.3%)
[기업지원서비스] 전략산업 관련 기업의 역량강화를 위해 기술지원, 신기술 보육, 애로기술 해결, 인력양성, 해외마케팅 지원	1,791 (25.5%)	1,087 (10.9%)	-	92 (4.1%)	2,970 (11.4%)
[전략산업기획단] 전략산업 성장을 위한 기획·평가조직운영	-	167 (1.8%)	426 (5.7%)	-	593 (2.3%)
[기타] 인센티브, 중앙직접사업 등	-	61 (0.6%)	27 (0.4%)	-	88 (0.3%)

<표 2-3> 지역별 지역산업진흥사업 총사업비('08～'12)

(단위: 억원)

지 역	합계	국비	지방비	민자
대 전	1,453.2	886.0	388.8	178.4
충 남	1,625.2	1,001.0	400.9	223.3
충 북	1,571.3	935.1	452.6	183.7
광 주	1,433.2	782.0	391.5	259.7
전 남	1,574.0	946.0	411.2	216.9
전 북	1,522.5	919.0	378.4	225.1
부 산	1,423.6	851.4	397.6	174.6
울 산	1,918.3	955.4	637.8	325.2
경 남	1,907.2	903.0	745.2	259.0
대 구	1,473.9	811.5	435.3	227.1
경 북	1,741.0	1,024.2	484.9	231.9
강원	1,554.8	878.5	508.2	168.1
제 주	825.0	460.3	271.9	92.8
합 계	20,023.1	11,353.3	5,904.2	2,765.7

<표 2-4> 지역산업진흥사업의 사업의 조정 내역



<표 2-5> 지역산업진흥사업의 사업별 2009년 예산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08 예산	2009 예산	증감액
지역산업진흥사업	지역산업기반구축사업	102,220	90,133	△12,087
	지역혁신산업기반구축사업	55,000	37,432	△17,568
	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	178,784	140,209	△38,575
	기업지원서비스사업	25,128	29,775	4,647
	지역산업인력양성사업	19,317	27,734	8,417
	지역전략산업기획단운영사업	11,251	11,700	449
	지방기술혁신사업	26,100	21,100	△5,000
	중앙정부직접사업	3,700	-	△3,700
	지역혁신거점육성사업	19,000	17,508	△1,492
계		440,500	375,591	△64,909

나. 지원성과

⑴ 지역전략산업의 하드웨어적 혁신인프라 구축 완료

○ 동 사업을 통해 지역전략산업의 발전 및 기업지원의 기초가 되는 H/W적 혁신 인프라를 전국에 광범위하게 구축하였음

- 2003~08년 간 82개의 인프라 구축사업 추진
  · 9개 지역: 26개, 4개 2단계: 26개, 혁신기반구축: 30개
- 장비 2,900건 구축(3,842억원 규모), 창업보육공간 134,578㎡ 확보
- 이런 하드웨어는 대부분 산업이 집적된 지역에 설치되어 클러스터 형성을 위한 구심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음

⑵ 지역기업의 수요를 현장밀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전문인력 확보

○ 지역특화센터에 우수한 전문인력을 구축

- 총 1,057명(박사 259, 석사 329, 학사 469)에 달함
  · 대부분 석·박사급이거나 기업의 현장경험 풍부한 고급 기술인력
  · 공동장비의 운영, 공동기술개발사업 참여, 지역기업의 현장애로기술 지원, 기술지도·자문, 기술인력의 양성 등을 수행하고 있음
- 이들은 다년간 기업지원 경험이 축적되고 학습효과가 발현됨에 따라, 기업 수요에 부응하는 착근형 지원인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⑶ 기업지원의 허브기관 형성으로 산업클러스터 발전에 기여

○ 향후 지역특화센터는 지역전략산업 부문의 기업지원을 위한 허브기관으로서의 역할이 기대됨

- 기획단-특화센터-기술개발의 패키지형 지원체계의 거점기관으로서 지역전략산업 육성에서 핵심적 역할 수행하고 있고, 앞으로 그 역할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됨
- 특히 산업낙후지역인 강원, 전남, 전북 등에서 전략산업 클러스터 형성 및 발전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실질적인 육성 주체로 부상함으로써 전략산업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고 있음

⑷ 지역에 대한 R&D 지원을 통해 기술혁신의 저변 확대

○ 그 간 중앙단위의 사업에서 배제되던 지역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 기업들의 기술혁신 역량이 제고되고 있음

- 지역산업 기술개발사업으로 지원된 총 과제수의 88.6%가 전국단위 기술개발사업에서 한 번도 지원받지 못한 기업에 지원되었음
- 지원 결과, 전국단위사업에 비해 높은 수준의 사업화 성공률을 달성함
  · 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의 사업화 성공률 47.8%, 전국단위 기술개발사업의 평균 성공률인 42.2%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음('07.10 ITEP)

제3절 사업의 주요 내용

가. 개요

⑴ 개요

○ 지역경제의 근간인 전략산업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해야 함. 또한 전략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한 R&D 및 구축된 인프라를 활용한 기업지원 등 S/W적인 사업을 강화해야 함

- 그 간에는 지역산업 발전의 기반 확보를 위해 인프라 구축 사업을 중심으로 지원하였으나, 이번 사업부터는 인프라사업의 비중을 축소하고 S/W사업 중심으로 지원되고 있음

○ 지역산업진흥사업에서는 특히 기획-집행-평가 등 사업추진 전 과정에서 지역의 자율과 책임을 강화해 나가고 있음

- 지역별 산업발전 비전과 전략을 제시한 지역산업발전로드맵('07.10)을 바탕으로, 지역이 자율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 중앙은 국가적인 산업정책과의 부합성, 지역간 중복성, 광역경제권 등을 고려하여 지역이 수립한 사업계획을 조정·보완하며, 사업추진 및 평가시 거점기관인 테크노파크(TP)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고 사업비 구성에 있어서의 지방비 대응비율을 확대하고 있음. 또한 4개 지역과 9개 지역의 구분을 없애고 비수도권 전 지역에 대해 통합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 이에 따라 2009년부터는 4개 지역과 9개 지역 사업이 통합적으로 운영 되고 있음

○ 지역산업진흥사업에서는 성과평가 시스템 등 사업의 효율성, 공정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을 실시해 나가고 있음

– 지역: 단위사업의 추진성과에 대해서 자체 평가

– 중앙

· 지역 평가에 기초하여 지역별 사업 전체에 대해 총괄 평가

· 지역별 평가 결과에 따라 매년 예산을 차등 지원

· 사업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한 효율성 제고

· 외부기관의 지적·권고사항 반영

나. 4대 주요 프로그램의 추진

(1) 지역산업기반구축(H/W)

○ 지역산업진흥사업에서는 지역전략산업의 성장기반 확충을 위한 기반 정비, 신규 지역특화센터 설립 등을 통해 기술혁신 인프라를 확충하고 있음. 기 구축된 혁신기관들에 대한 역량분석을 바탕으로, 지역별 비전과 전략을 달성하기 위해 필수적인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고 있음

– 인프라 구축시에는 전략산업과 관련된 지역의 전체 인프라를 분석하여, 보완이 필요한 분야에 지원하고 있음

– 4개 지역 2단계사업, 9개 지역 1단계사업 등을 통해 많은 인프라가 구축된 점을 감안하여, 전체 국비 지원규모의 30% 이내로 지원하고 있음

– 그동안 지원된 인프라 사업의 지원 비중은 9개 지역 1단계사업의 70%, 4개 지역 2단계사업의 32%임

○ 동 사업에서는 지역 내 거점기관인 TP 등 기 구축 기관들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음. 지역산업지원을 위한 통합적 거버넌스 차원에서 TP 또는 기존의 지역사업 관련 재단법인[1]이 추진하는 것을원칙으로 함. 새로운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1) 예: (재)대구기계부품연구원, (재)전주기계산업리서치센터, (재)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재)강릉과학산업진흥원 등

형태의 사업은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음. 또한 재원 조달 및 기 구축 인프라 운영에 있어서의 지역의 부담을 강화하고 있음. 이에 따라 부지 전액, 건축비의 60~70%, 장비비의 20~30%는 지방비로 조달함

- 이와 함께, 그 동안 구축된 지역특화센터 운영에 대한 지역의 책임성을 강화
- 특히 사업기간 및 성과활용기간에 대한 운영비는 지자체가 책임지고 확보(지원조례 정비 등)

○ 지역산업진흥사업으로 총 82개의 지역특화센터를 비롯하여 전국에 90개의 인프라 구축사업을 추진함

- 대규모 시설과 장비를 구축함으로써 전략산업의 성장을 위한 구심점을 마련하고 현장에서 밀착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함
- 4개 지역 총 37개 사업에 5,286억원을 투자함
  · 1단계사업: 12개 사업에 국비 2,260억원을 투자
  · 2단계사업: 25개 사업에 국비 3,026억원을 투자
- 9개 지역 사업으로 24개 사업에 국비 5,016억원을 투자함

○ 이번 사업에서는 기 구축된 인프라를 활용한 S/W사업에 중점을 두기 위해 인프라구축사업은 가급적 지양하고 있음

- 기반구축사업은 총 국비지원 금액의 30% 정도로 제한(4개 지역의 경우에는 20% 내외)
- 지역별로 전략산업의 발전단계, 인프라 구축현황 등 지역별 특성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 국비 비중을 30~40%로 추진

<표 2-6> 4개 지역산업진흥사업으로 구축된 인프라 사업 현황('99～'08)

(단위: 억원)

지역	전략산업	사업명(지역특화센터)	국비(억원)
부산	신발(1)	신발종합지원센터	45
		시제품개발지원센터	118
		디자인개발지원센터	33
	신발(2)	신발산업 혁신기반 구축	50
	기계부품(2)	MEMS/NANO부품 생산기반 구축	95
		선박용 전자장비 시험 인증센터	102
		기계부품 /소재 기술지원센터	211
		자동차부품 기술지원센터	110
		해양레저장비 개발 센터	99
		디지털생산기술혁신센터	235
		조선기자재검사물류센터	40
	해양생물(2)	해양생물산업육성센터	115
대구	섬유(1)	신제품개발지원센터	170
		염색디자인실용화센터	170
		니트시제품공장 설치	100
		패션디자인개발지원센터	133
	섬유(2)	화섬산지의 체질강화를 위한 기반구축사업	30
		염색환경기술개발지원기반구축사업	40
		염색가공공정 첨단화기반구축사업	71
	메카트로닉스(2)	메카트로닉스 부품산업화 센터	200
		나노부품실용화센터구축	188
	모바일(2)	모바일단말상용화센터	120
	생물(2)	전통생물소재산업화센터	107
광주	광(1)	한국광기술원 건립	1120
		광통신기기 시험시스템	77
	광(2)	광통신 부품/서브시스템 시제품생산지원	162
		반도체 광원 시험생산지원	189
		LED신호/조명사업	41
		광부품 시험/인증/신뢰성 평가기반구축	125
	전자부품(2)	디지털컨버전스센터	243
경남	기계(1)	기계기술종합지원센터	150
		경남첨단신소재개발지원센터	44
		경남지역특화TIC	100
	기계(2)	신지식기계산업특화기술기반구축	132
		경남거점로봇센터 구축	84
	지능형 홈(2)	지능형홈산업화연구센터 설립	164
	생물(2)	바이오벤처프라자건립	73
1단계 소계		12개 사업	2,260
2단계 소계		25개 사업	3,026
합 계		37개 사업	5,286

주 1) 전략산업 명칭 뒤의 (1)은 1단계 사업, (2)는 2단계 사업을 의미

2) 1단계사업에서 내용상 지역특화센터와 연관성이 낮은 사업은 제외

<표 2-7> 9개 지역산업진흥사업으로 구축된 인프라 사업 현황('99~'08)

지역	전략산업	사업명(지역특화센터)	국비(억원)
대전	생물의화학	바이오벤처타운	261
	정보통신	고주파 부품 지원센터	151
		지능로봇 산업화 지원센터	208
충북	전자정보	반도체장비·부품 공동테스트 센터	353
		전자정보부품산업 지원센터	107
	보건의료	의료보건산업 종합지원센터	106
		전통의약품 개발지원센터	98
충남	전자정보	전자·정보/디스플레이산업 지원센터	342
		영상미디어 산업 사업화 센터	257
	생물	동물자원 사업화 지원센터	48
전북	자동차부품	자동차부품산업 혁신센터	348
	기계	기계산업리서치센터	236
전남	생물농업	생물식품사업화지원센터	304
		생물농업 산학공동 연구센터	174
	소재	신소재 기술 산업화 센터	167
제주	생물	바이오 사이언스 파크	211
울산	자동차	오토밸리	463
	정밀화학	정밀화학 종합지원센터	194
경북	전자정보	구미 디지털전자·정보기술단지	298
	생물	생물건강산업 사업화 지원센터	137
		해양생명·환경산업 지원센터	80
강원	생물	춘천 바이오 타운	172
	의료기기	원주 의료기기 테크노밸리	168
	생물	강릉 해양생물산업지원센터	135
합 계		24개 사업	5,016

주: 27개 사업이 인프라사업으로 추진되었으나, 3개 사업은 내용적으로 인프라사업이 아니므로 제외

<표 2-8> 지역혁신기반구축사업으로 추진 중인 인프라 사업 현황('99~'08)

지역	전략산업	사업명(지역특화센터)	국비(억원)
부산	물류	**종합물류경영기술지원센터설립사업	65
대구	소프트웨어	게임 S/W산업 R&D 기반 구축	31
	섬유	의류산업 유연생산시스템 구축	30
	모바일	*모바일 소프트웨어 집적단지 조성·운영	35
	메카트로닉스	**차세대금형기술혁신기반구축	65
		**ITS기반지능형자동차부품시험장건립	120
광주	자동차부품	금형 Try-Out 센터	60
		**차세대자동차기능부품제조기반구축	95
대전	전자정보	**정보전자부품소재기술혁신센터구축	102
울산	화학	**신화학물질규제대응근접지원센터구축	30
강원	신소재	세라믹 신소재 산업 클러스터 조성	110
	방재	*방재산업 테크노밸리 인프라 구축	40
	신소재	**전자빔종합이용센터조성및운영사업	120
충북	전자정보	*차세대반도체 임베디드시스템 지원센터	58
충남	자동차부품	자동차 첨단부품 R&D 집적화 센터	112
전북	생물	바이오파크 인프라 구축	85
	기계	첨단기계산업 R&D 자원 집적화	25
		*핵심기능 기계부품·소재 실용화사업	77
	자동차부품	**산업기반기술혁신시스템구축지원사업	220
	소재	**고기능복합섬유원천소재기반구축사업	166
전남	생물	독감백신원료 생산기반 구축	130
		*친환경생물산업클러스터(생물방제, 나노생물)	130
		**지역특산자원산업화기반구축사업	151
경북	소재부품	하이브리드 신소재 기술혁신센터	98
		*Steel 표면가공 통합기술지원센터	70
	생물	**포항테크노(바이오)정보지원센터건립	100
	자동차부품	**차량용임베디드기술혁신센터	117
경남	생물	차세대 의생명산업지원센터	75
	항공	**항공구조물선진조립기술지원사업	37
합계		29개 사업	2,554

주: *는 2006년, **는 2007년 신규 사업으로 선정

⑵ 지역전략산업 기술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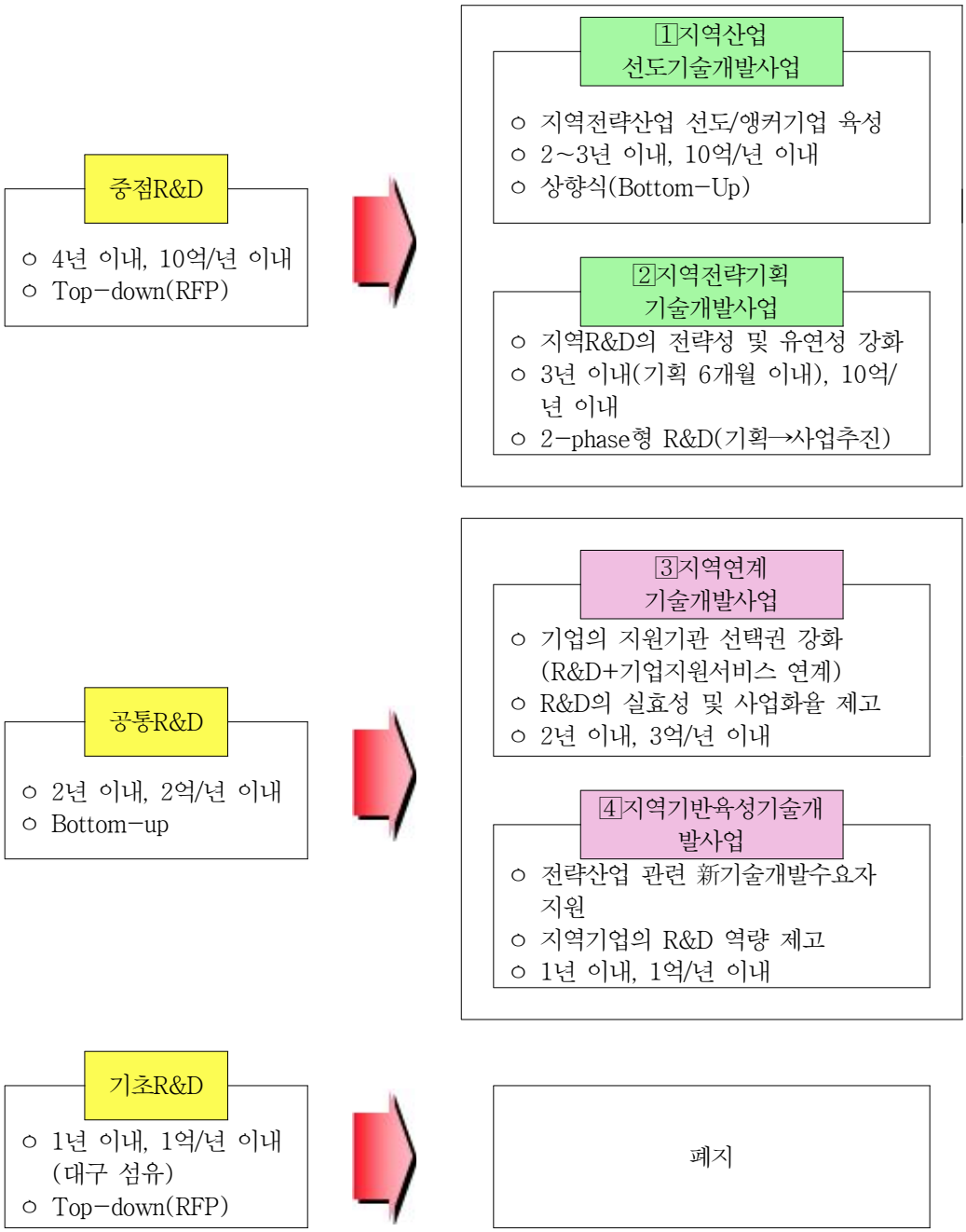
○ 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에서는 지역전략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R&D 지원을 추진하고 있음. 이를 통해 지역 내 혁신지향형 기업의 기술개발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지역특화센터와 전략산업기획단 등의 기술개발 지원기능을 강화하고 있음

- 9개 지역 신규 기술개발 예산(600억원)과 4개 지역 2단계사업의 기술개발 예산의 일부(200억원)를 활용하여 2008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이를 위해 전략산업의 여건에 맞는 차별화된 지원이 가능하도록 사업 프로그램을 개편하였음

○ 또한 기존 산학연관의 형식적 연계를 타파하고 수요자인 지역기업 주도형-지원기관 연계 R&D를 추진하고, 전체 국비지원액의 50% 수준으로 확대·투자하였음
- 지원정책의 대상을 원천기술개발보다는 사업화(산업화) 지향적인 실용화 기술개발(사업화 3년 내외 과제를 집중지원)에 선택·집중하였음

○ 지역전략산업 육성측면에서 산업을 주도할 우수기업 육성, 지역 내 벤처기업 및 중소기업 등 영세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정책을 통하여 지역의 경쟁력을 제고하였음
- 지역R&D 지원정책은 강점분야인 사업화를 위한 실용화R&D에 집중하여, 특화분야 중심의 사업화 1∽2년前 기술을 타겟으로 선택·집중하고 있음
- 이를 위해 지역의 상대적 기술열위 등을 고려하여 사업화를 위한 '실용화 R&D에 집중지원'하고, 사업화 유도차원에서 지원액은 증액하되 사업기간은 단축하는 형태로 전환하였음

<표 2-9> 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 프로그램 개편 방향



○ 지역산업선도기술개발사업의 지원

– 목적: 혁신역량이 우수한 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여 지역전략산업 선도기업의 전략적 육성 및 지역산업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임

– 지원내용

· 전략산업별로 5개 이내(광역시도별 5개/년 이내) 지원함

· 사업기간은 2~3년 이내이며, 사업비는 10억원/년 이내임

· 지원과제 수는 수요분석에 기초한 예상과제수로 변경 가능함

◇ **(지원목적)** 혁신역량이 우수한 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여 **지역전략산업 선도기업의 전략적 육성 및 지역산업경쟁력 확보**

◇ **(지원내용) 전략산업별 5개 이내**(광역시도별 5개/년 이내) **지원, 사업기간 2-3년 이내, 사업비 10억/년 이내**

* 지원과제 수는 수요분석에 기초한 예상과제수로 변경가능

* (9개 지역) '08년-'10년, 10개 이내, (4개 지역) '09-'10년, 10개 이내

○ 지역전략기획기술개발사업의 지원

– 목적: 지역에 배양된 기술기획 역량을 활용하고, 고부가가치 핵심 복합기술 개발을 통하여 전략기획-기술개발의 2-phase형 기술혁신체계를 강화하는 것임

– 지원내용

· 지역전략산업별 6개 이내로 지원

· 사업기간은 최대 3년이며(기획기간 6개월 이내), 사업비는 10억원/년·과제 이내임

◇ (지원목적) 지역에 배양된 기술기획 역량을 활용, 고부가가치 핵심 복합기술 개발을 통하여 전략기획-기술개발의 2-phase형 기술혁신체계 강화

◇ (지원내용) 지역전략산업별 6개 이내 지원, 사업기간 최대 3년(기획기간 6개월 이내), 사업비 10억/년 · 과제 이내

○ 지역연계기술개발사업의 지원

– 목적: 지역내 기업지원기관과 연계된 기업주도의 기술개발(요소기술, 핵심애로기술, 부품소재, 신기술사업화 등)을 지원하여 지역혁신체계의 구축을 촉진하는 것임

– 지원내용: 사업기간은 최대 2년이고 사업비는 3억/년·과제 이내임

○ 지역기반육성기술개발사업의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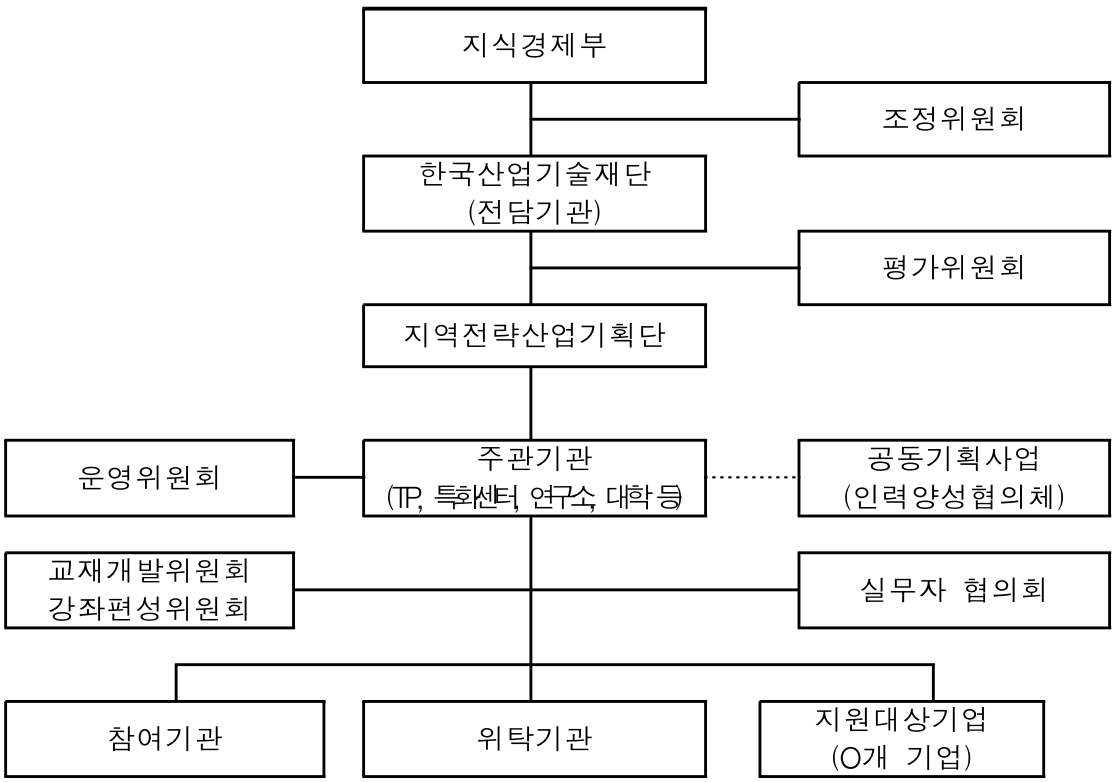
- 목적: 정부기술개발지원의 틈새영역(단기간(1년 이내)의 시제품 개발 또는 공정혁신 등 필요분야)인 新기술개발수요자에 대한 지원으로 全방위적 혁신 창출임. 창업 후 7년 이내에 기업으로 권고하되, 지역에 자율성을 부여함
- 지원내용: 사업기간은 최대 1년이고 사업비는 1억원 이내임

⑶ 지역전략산업 인력양성사업

○ 지역산업인력양성은 일부 지역[2]에서만 추진되었으나, 최근 전국으로 확대하였음

- 전략산업 분야 현장인력 및 취업연계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영함으로써 지역산업 인력의 고급화 및 지역 정착을 유도하였음
- 이를 통해 지역과 중앙이 공동으로 해당 지역전략산업의 인력수급 불일치를 해소하고 고용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최적의 사업을 도출하였음

[그림 2-1] 지역산업진흥사업 내 지역인력양성사업 추진체계



2) 부산 신발, 대구 섬유생물, 경남 기계 등

○ 동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성과제고를 위해 지역별 인력양성협의체 운영 및 광역경제권 단위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인력양성협의체를 통해 공동수요 조사, 교재개발 등을 실시
- 한편, 광역경제권내 연관성이 높은 전략산업은 공동 사업으로 추진
  · 바이오(충청권)
  · 조선(동남권, 호남권)
- 사업 성과제고를 위해 위탁기관 체계 및 경쟁체제를 도입하였음. 주관·참여기관 위주의 체계에서 벗어나, 전문기관을 위탁기관[3]으로 참여하게 하여 실질적 교육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있음

○ 동 사업에서는 지자체 및 인력양성사업의 수혜기업의 출자하는 현금비율을 확대해 나가고 있음

- 국비는 70% 이하로 지원하고 지자체 및 민간의 현금 출자를 30% 이상으로 조정하여 실질적 사업수행에 필요한 현금을 확보하고 있음
- 기존의 인력양성사업에서 민간은 현금보다는 현물중심으로 사업비를 충당하였고 지원방식은 지자체 경상보조이며, 사업비 대응비율은 국비 70%, 지방비 30%임

<표 2-10> 지역산업진흥사업 내 지역인력양성사업 참여주체 구성과 역할

참여주체	역할분담
주관기관	- 주관 및 참여기관별 사업추진전략 기획, 관리, 조정, 사업비 배분, 자체 평가, 강좌운영, 각종 위원회, 및 사후 관리 등 수행
참여기관	- 교육운영(인력수준별 교육), 강사 지원, 기자재 공동활용, 현장실습장 제공, 수요조사 및 홍보, 업체 지원, 워크샵, 세미나 등
위탁기관	- 주관·참여기관 이외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 사업일부를 위탁 - 교육운영, 수요조사 등 지원
지원대상기업	- 현장실습 및 강사 지원 - 현장실습장 제공, 수요조사, 맞춤교육 등 지원

3) 정부출연연, 지역특화센터, 표준·능률협회, 기술거래소 등

<표 2-11> 지역산업진흥사업 내 지역인력양성사업 추진주체의 세부 운영방안

구 분	세부 추진내용	비고
추진체계	○2단계: 전담기관–주관기관–참여기관 ○3단계: 전담기관–주관기관–참여·위탁기관 * 지원대상기업 확보를 통한 사업 운영 ○참여주체: 대학 중심 → 기업지원기관 중심으로 사업추진 체계 개선 – 본 사업의 본질적 취지인 산업현장인력 위주 교육사업 활성화 및 현장부합성 제고 차원	○사업의 효율성 제고 및 실질 사업수행 능력 고를 위해 추진 ○타 인력양성사업 대비 차별성 확보 및 지역산업 대상 사업의 특성 반영
주관·참여 기관 선정기준	○사업수행을 위한 전문인력, 교육장 등 인프라를 확보하고 있는 기관 * 지역특화센터 또는 TP사업단 우선 고려 ○지역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시된 수행기관을 우선적으로 고려 ○제시된 수행기관의 전문성 및 인프라 등 검토를 위해 필요시 현장실태조사를 수행하고, 최종선정은 조정위원회를 통해 확정 ○기업과의 지리적 접근성 고려	○대학의 주관기관화는 가급적 배제 ○공급자 편의주의식 사고방식 배제 ○ 역할분담에 대한 적정성 및 명확성 확보 ○인력양성협의체 운영을 통한 사업효율성 극대화
위탁기관의 기능 및 역할	○주관·참여기관 이외에 전문성을 갖고 있는 기관에 사업의 일부를 위탁수행	○사업의 효율적 수행 가능 ○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
지원대상 기업참여 활성화	○지역산업의 기여도, 참여도, 만족도 등을 비롯해 인력수급 실태 파악 ○각종 협의체 참여 확대를 통한 현장적합형 의견 적극 반영 –사업기획(수요조사 등), 교보재 개발 등에 참여 ○고용연계시스템 확보	○성과평가시 인지도, 반응도 제고 ○CEO의 마인드 향상 ○기업변화 추이 확보

[그림 2-2] 지역산업인력양성사업의 교육프로그램 도출단계 및 결과



<표 2-12> 지역인력양성사업 2단계 사업유형과 3단계 사업유형의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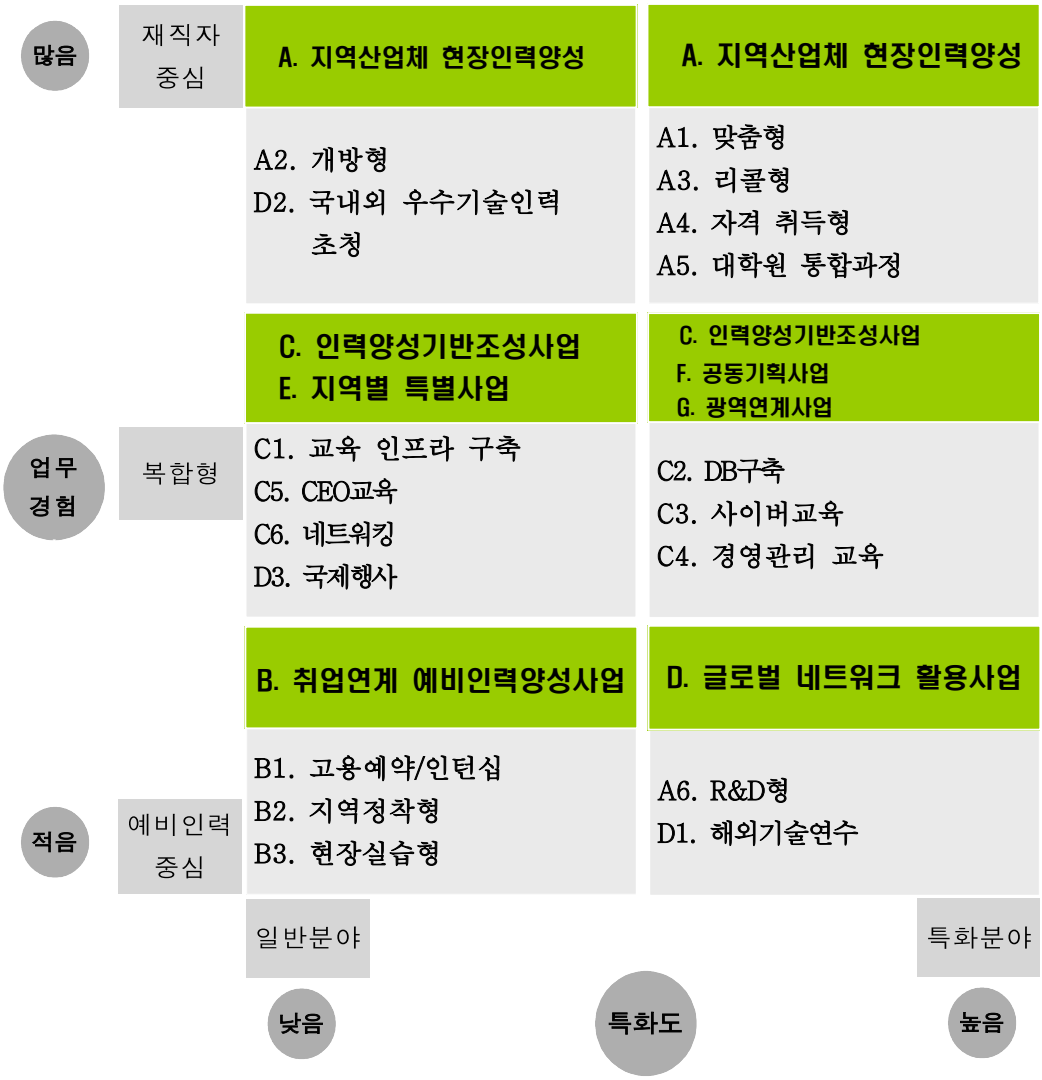
2단계 유형
A형 해외 및 역외 우수연구자 지역정착유도사업
B형 산학연 연계 학점인정 인력양성사업
C형 산학연 연계 One-stop 현장인력재교육사업
D형 혁신형 대학원 통합과정 개설지원사업
E형 광역연계형 지역간 연계인력양성사업
기타

3단계 유형	
대분류	중분류
A형 지역산업체 현장인력 양성	A1형 (맞춤형)
	A2형 (개방형)
	A3형 (기술자격 취득 지원사업)
	A4형 (리콜형)
	A5형 (대학원 통합과정)
	A6형 (R&D형)
B형 취업연계 예비인력 양성사업	B1형 (고용예약/인턴십)
	B2형 (지역정착형)
	B3형 (현장실습형)
C형 인력양성 기반조성사업	C1형 (교육인프라구축)
	C2형 (DB구축)
	C3형 (사이버 교육)
	C4형 (경영관리 교육)
	C5형 (CEO교육)
	C6형 (네트워킹)
D형 글로벌네트워크 활용사업	D1형 (해외 기술연수)
	D2형 (국내외 우수기술인력 초청)
	D3형(국제행사)
E형 지역별특별사업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기획된 사업
F형 공동기획사업 (인력양성협의체)	효율성 확보를 위한 공동사업
G형 광역연계사업	2개 이상의 지역이 수행하는 광역사업

<표 2-13> 지역인력양성사업 3단계 세부 유형 및 유형별 내용

대분류	중분류	세부 유형별 내용
A형 지역산업체 현장인력 양성	A1	◆맞춤형: 기업의 수요를 받아 기업이원하는 강사와 커리큘럼, 교재 등으로 현장적합형으로 수행하는 교육
	A2	◆개방형: 전략산업별 강좌를 개설하고 수강생을 모집하여 이론 및 실습교육(장비활용)을 실시하는 교육으로서 인력별 기술수준을 고려 필요
	A3	◆리콜형: 취업 후 일정한 시간이 지난 현장인력들의 기술 수준 향상을 위해 대학에서 재교육을 실시
	A4	◆자격 취득형: 기술 및 연구개발인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다양한 기술 관련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A5	◆대학원 통합과정: 일정수준 이상 기술수준, 학력, 경력이 있는 현장인력을 대상으로 대학원 통합과정 형태의 심화 전문화된 장기 교육
	A6	◆R&D형: 기업과 대학이 R&D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수행하면서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고 양성된 인력을 해당기업으로 취업시키는 형태
B형 취업연계 예비인력 양성사업	B1	◆고용예약/인턴십: 전문학사, 학사, 석·박사 과정을 대상으로 기업과 계약을 맺고 일정기간 인턴으로 근무하면서 현장실무능력을 습득하고 취업으로 연계
	B2	◆지역정착형: 해당 지역에서 배출된 기술인력의 지역 내 취업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는 유형
	B3	◆현장실습형: 지역 내 예비인력을 대상으로 현장실습을 통해 기업근무경험을 쌓도록 하고 학점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유형
C형 인력양성 기반조성사업	C1	◆교육인프라 구축: 교육에 필요한 기자재 및 교육장비를 구축하거나 교육장을 준비하고 관리하는 사업
	C2	◆DB구축: 교육, 장비, 교재, 강사, 프로그램 등에 대한 DB를 구축하여 강좌관리, 수강생 관리 등 체계적인 관리체계 구축
	C3	◆사이버 교육: 기술교육의 접근성, 이용자 편의성, 교육 반복성 등을 위한 온라인 교육 콘텐츠 제작·제공
	C4	◆경영관리 교육: 마케팅, 품질관리, R&D방법론, 인력양성 등 기업의 경영과 관련된 교육
	C5	◆CEO 교육: 기업체 CEO 대상 교육
	C6	◆네트워킹: 첨단기술동향 및 업계 정보,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네트워킹 활성화를 위한 포럼, 세미나, 발표회, 토론회 지원
D형 글로벌 네트워크 활용사업	D1	◆해외 기술연수: 해외 연수기관과 인력양성 주관기관 등이 교육프로그램에 합의한 뒤 연수협약을 맺고 6개월 이하의 기술연수를 추진 시 일부 지원
	D2	◆국내외 우수기술인력 초청: 국내외 우수 기술전문가를 초청, 지역에 정착시켜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과 기업체 기술지도 등을 추진
	D3	◆국제행사: 국제심포지움, 세미나 등 기술인력의 글로벌 마인드 향상에 도움이 되는 행사 개최 시 일부 지원
E형 지역별특별사업	E	◆상기 유형 이외에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기획된 사업
F형 공동기획사업 (인력양성협의체)	F	◆전략산업별 인력양성사업 간 효율성 확보를 위해 공동 수요조사, 기자재 공동활용, 중복성 제거, 신규 사업 발굴 등 산업체 전문가를 포함 10인 내외의 협의체 구성·운영(지역별 대표 인력양성사업 내에서 세부프로그램 형태로 운영)
G형 광역연계사업	G	◆2개 이상의 지역이 유사·연계성이 높은 전략산업을 대상으로 통합 교육 추진

[그림 2-3] 지역산업인력양성사업의 교육프로그램 도출단계 및 결과



○ 향후 추진방향

– 예비인력을 대상으로 한 이론중심의 교육보다는 현장실습 교육에 중점을 두고, 예비인력 양성사업은 반드시 취업으로 연계되는 것을 전제로 함

– 3단계에는 전적으로 예비인력을 대상으로 B형(취업연계 예비인력 양성사업)으로 세분화하여 수행

· 고용예약 / 인턴십

· 지역정착형

· 현장실습형

- 교육인프라구축, DB 구축, 사이버 교육, 경영관리 교육, CEO 교육, 네트워킹 등의 사업은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전략적으로 추진
- 전략산업별 인력양성사업 간 효율성 확보를 위해 공동기획사업(인력양성협의체)을 추진함. TP사업단 또는 기획단에서 추진·운영하며, 지역 내 기관별로 구축된 인프라(H/W, S/W)와 개별 인력양성사업에 대한 정보공유 등을 통해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허브역할을 담당
- 그 외에도 지역 전략산업 공동 수요조사, 기자재 공동활용, 중복성 검토, 신규사업 발굴, 성과조사 및 분석, 사후관리시스템 등의 역할 수행

⑷ 기업지원 서비스

○ 지역산업진흥사업에서는 전략산업 관련 기업들의 애로기술 해결, 시험·검사, 품질인증, 마케팅 등 기업활동 전주기에 걸친 다양한 S/W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음
- 이를 위해 4+9개 지역사업 등을 통해 구축된 지역특화센터들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음. 특히, 지식서비스산업 육성전략과 연계하여 전략산업의 성장과 밀접한 지식서비스산업의 연계발전을 도모하고 있음

○ 지역의 여건 및 전략산업의 특성에 따라 지역기업들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첫째, 지역산업기술지원으로서 전략산업 관련 기업에 대한 기술지도 및 자문을 통해 기술개발, 품질인증, 기술이전 등을 지원하고 있음. 전략산업 육성 구심체로서의 특화센터의 역할 제고를 위해 회원사 제도 형태로 운영하고 있음 (국비는 직접사업비, 지방비는 운영비로 지원함)
- 둘째, 전략산업마케팅 활성화로서 지역의 전략산업 관련 마케팅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기반구축, 시장 및 판로 개척, 전시회 개최 및 참가 지원, 브랜드 창출 및 홍보 등을 지원하고 있음. 지역산업마케팅사업(균특회계지역개발계정), 해외마케팅사업(일반회계)과의 중복성을 사전에 배제하고 연계성을 강화하고 있음
- 셋째, 전략산업 연계 지식서비스산업 지원으로서 제조업 중심의 지역전략산업과 지역의 지식서비스산업의 동반성장을 지원하고 있음. 다양한 지식서비스에

대한 수요충족과 지식서비스산업의 초기 시장 창출을 위해 지식서비스바우처 제도를 도입하였음

1) 기술지원

○ 사업목적 및 내용: 기 구축된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여 기업에 보다 실질적인 기술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업과 기업지원기관 간 산학연 네트워크를 활성화하는 프로그램을 개발·지원함

- 첫째, 기술개발지원으로, 신상품개발지원, 설계 및 역설계지도, 시제품개발지원, Scale up 검증지원, 신공정개발지원, 제품고급화 기술지원, 디자인개발지원을 포함
- 둘째, 분석·제작지원으로, 시설 및 장비활용지원, 고가시험분석지원, 시제품제작지원, 현장기술지도 및 자문, 자동화시스템구축 지도 등이 있음
- 셋째, 특허·인증지원으로, 특허출원등록지원, 규격획득 및 인증지원, 제품안정 및 효능평가, 표준제정 및 규격보급지원, 국제상호인증 컨설팅이 있음
- 넷째, 정보제공인데, 신기술 및 시장정보제공, 품질관리 및 보증지원, 생산혁신 및 관리지도, 기술관리 및 지도, 기술경영 지원 등이 포함된다. 그 외에도 기술이전·확산을 위한 기술이전 지원, 기술마케팅 지원 등이 있음

2) 마케팅지원

○ 사업목적 및 내용: 마케팅의 전문화, 분업화를 통한 지역 전략산업의 수출을 촉진시킴

- 마케팅 기반 구축, 시장 및 판로 개척, 전시회 개최 및 참가 지원, 지역 브랜드 창출 등이 있음
- 사업기간은 최대 5년, 국비지원은 과제당 연간 5억원 이내임
- 마케팅: 민간분야의 비즈니스 활동 영역과 중첩되는 부분이 많으므로 국비 비중을 40% 이내로 제한함(국비 對 지방비 = 4: 6을 유지)
- 추진체계: 특화센터의 마케팅 지원 담당으로 인한 전문기관이나 업체 대비 비교우위 확보 어려움 및 시장 교란 우려를 지양하기 위해 협회 및 조합, 특화센터 등이 주관하되 수요기업과 마케팅 전문가(기업, 기관, 대학 등)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추진체계로 구축

3) 지식서비스지원

○ 사업목적 및 내용: 지역전략산업 기업의 지식서비스 아웃소싱 소요비용을 '지식서비스바우처' 발급을 통해 지원함으로써 지역전략산업 경쟁력 향상과 지식서비스 시장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임

- 지원방법: 지역전략산업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지식서비스 아웃소싱에 소요되는 비용을 바우처*를 통해 보전함
  · 바우처(voucher): 증서 또는 상품권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바우처제도는 정부가 개인이 교육, 주택, 의료 등의 복지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도록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상품권 형태의 지원을 뜻함
- 지원 분야: 지역 제조업과의 연계성이 높고 부가가치 유발도가 높은 디자인, 이러닝, IT서비스, 시험·분석, 컨설팅 등 5개 지식서비스 분야*를 우선 지원하되, 기업당 1개 분야만 지원함
- 지원형태: 지자체 경상 보조금
- 지원 방식: 국비, 민간부담금 대응자금 방식(국비 70: 민간 30)

다. 사업의 평가체계 개편

○ 사업전반에 대한 지역과 중앙의 유기적인 협조 하에서 지역주도형 사업관리체계로 전환함

- 지역은 지역산업육성계획을 지자체 및 지역거점기관 등과 공동 기획하여 추진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강화함
- 매년 말 지역주도로 연차별 투자계획 조정(안) 수립→지경부 검토 및 확정

○ 중앙은 프로그램 평가 및 지역단위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예산지원과 연계하고 제도수정·보완 및 성과제고 정책을 시행함

- 인프라, 중대형 R&D 등 중앙정책과의 정합성이 필요한 사업은 중앙주도로 추진함

○ 전주기적·종합적 평가프레임워크를 구축함으로써 프로그램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평가의 객관화 및 정책환류성을 강화함

– 기존 과제 단위의 실적 위주 평가에서 프로그램 및 정책 단위의 성과 중심의 평가로 전환함

– 지역산업종합정보망(RIS-Net)개편[4]*을 통해 지역과 연동을 강화하고 실질적 성과평가가 가능하도록 개선함

<표 2-14> 지역산업진흥사업 평가관리체계 개편(안)

	개편 前		개편 後
평가대상	과제단위	⇒	과제·프로그램·정책 (지역, 전략산업발전단계)
평가주체	중앙주도 (단, 지역산업R&D→지역)	⇒	지역주도/사업특성별 평가 중앙: 대형·중장기 사업 (인프라, 중장기R&D) 지역: 기업중심형 사업(기업지원, 단기R&D)
평가범위	투입(Input)→실적(Output)	⇒	사업추진단계별* (투입(Input)→실적(Output)→성과(Outcome)→파급효과(Impact))
평가체계	단편적 평가체계	⇒	전주기적·종합적 평가체계 (사업추진단계별, 전략산업발전단계 등)
조정·연계	평가의 정책개선 및 상호연계 미흡	⇒	평가 결과가 예산 및 프로그램 조정·연동

4) 성과를 관리·평가·추적할 수 있도록 세부 프로그램(과제)별 성과(평가)지표 관리·등록·통계처리, 지역혁신사업 관련 사이트(e-R&D, Intranet 등)와 연동

제3장 고용영향평가 모형

제1절 고용영향평가 모형의 구성 요소

가. 주요 평가항목과 평가지표

○ 사업목표의 적합성 및 실현가능성 평가

- 사업목표가 현실에 얼마나 적합한가, 정책이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고용 관련 계획 포함)을 반영하고 있는가, 목표가 실현가능한 수준에서 적극적으로 설정되어 있는가 등의 기조를 중심으로
- 사업의 목표가 고용 및 노동시장에 대하여 고려를 포함하고 있는가, 제시된 고용 관련 목표는 실현가능하고 바람직한가, 예상되는 경제·사회적 환경 변화를 정책에 반영하고 있는가 등을 평가
- 구체적으로 지역전략산업 진흥 사업의 구성 요소의 본래의 목표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각 사업의 목표 내에 구체적으로 고용창출이나 혹은 고용파급효과 그리고 맞춤형 인적자원양성에 따른 사업의 효율성제고 방안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이러한 계획이 타당한지를 점검 및 평가

○ 사업추진체계의 합리성 평가

- 사업의 추진체계가 사업목적 달성에 적합하게 구성되어 있는가, 개별 사업추진 단위간 협의·연계가 잘 이뤄지고 있는가 등의 기조 하에
- 사업집행시 창출되는 일자리에 대한 사업추진주체와 인력양성 주체간 협의·연계체계가 있는가, 정책으로 인해 창출되는 일자리에 필요한 인력양성과 관련된 DB 등 자료를 작성·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등을 점검
- 고용영향을 고려하여 사업의 추진체계 내에 인력양성이나 인적자원개발과 관련된 협력체계가 구축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협력체계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평가함으로써 고용파급효과 제고를 위한 추진체계의 효율화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

○ 사업집행의 적절성 평가

- 사업이 계획대로 집행되고 있는가, 사업비용의 집행체계는 적절한가, 사업에 대한 사후관리·책임관리체계는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는가, 사업성과의 활용 및 확산이 잘 이뤄지고 있는가 등의 기조 하에
- 각 사업분야인 인프라, 기술개발, 인력양성, 기술지원 사업의 집행과정에서 고용효과제고를 위한 집행과정, 즉, 지원요건, 지원대상의 선정, 비용수준의 적정성, 고용파급효과 제고를 위한 사업의 성과관리의 효율화 방안을 점검 및 평가

○ 사업목표 달성도 평가

- 사업 수행이 성과목표에 달성한 정도를 나타내는 사업목표 달성도 등
- 동 사업의 목표는 다양한 파급효과를 야기하며 지역산업진흥에 매우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고용효과면에서는 그 동안 직접인력양성사업을 제외하고는 관심이 크지 않았던 것으로 평가되어 왔음
- 따라서 동 사업이 추구하고 있는 목표를 고용과 산업진흥과의 win-win이라는 관점에서 고용파급효과의 달성도를 정량 및 정성적 방법으로 평가를 수행하고 고용성과 제고방안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

<표 3-1> 평가항목과 평가지표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방법
정책의 고유목표 달성도	· 사업목표의 적합성 및 실현가능성 · 사업추진체계의 합리성 · 사업집행의 적절성 · 사업 목표 달성도	정성평가 정성평가 정성평가 정성·정량평가
정책의 고용연계성	· 사업목표의 고용과 연계가능성 · 사업집행과 고용 연계성	정성평가 정성평가
고용영향 분석·평가	· 정책으로 인해 창출되는 최대 일자리의 양 · 정책 시행에 따라 창출된 일자리의 양	(거시적분석) (미시적분석)

주: 노동부, 고용영향평가 시행 매뉴얼(2010.2)을 참조

나. 사업의 고용영향 분석

○ 사업의 고용효과에 대한 거시적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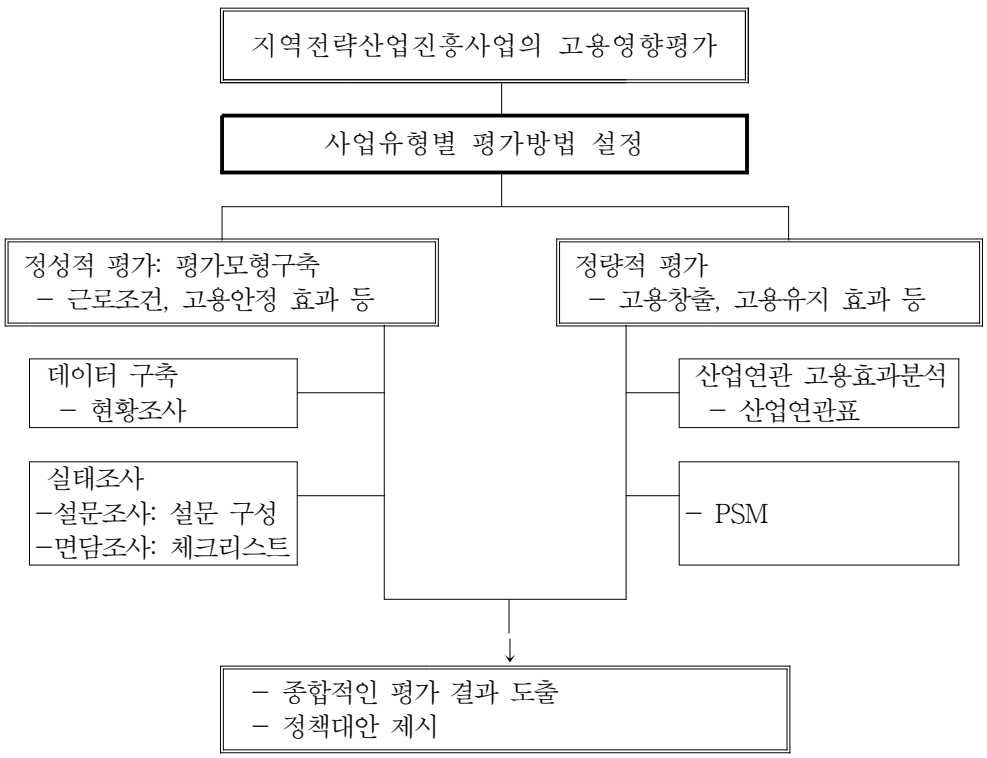
- 거시적분석이 가능한 사업 유형은 지역산업기반구축, 지역산업기술개발 등 2가지 유형의 사업에 대해 일자리창출의 직·간접효과를 분석
- 전국산업연관표 및 지역산업연관표를 이용한 산업연관고용영향 평가

○ 사업의 고용효과에 대한 미시적 평가
- 지역전략진흥사업 중 지역산업기술개발 사업의 유형은 수혜기업의 고용변동 및 고용효과 분석하고, 인력양성사업은 교육수혜 자의 고용효과 및 고용안정성에 관해 미시적분석 실시
- 사업의 수혜기업 자료와 고용보험 DB원자료와의 결합 및 관련 경영정보 등을 이용하여 직종별, 연령 및 성별 등 인적특성별 고용효과를 분석

제2절 고용영향평가 모형의 구조

가. 고용영향 평가모형의 구조

[그림 3-1] 평가모형의 구조



나. 고용영향 평가의 과정

(1) 고용영향 실태조사

○ 사업목표의 고용영향 고려여부 및 타당성 평가
- 사업의 목표가 고용 및 노동시장에 대하여 고려를 포함하고 있는가
- 제시된 고용 관련 목표는 실현가능하고 바람직한가,
- 각 사업의 목표 내에 구체적으로 고용창출이나 혹은 고용파급효과 그리고 맞춤형 인인적자원양성에 따른 사업의 효율성제고 방안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이러한 계획이 타당한지를 점검 및 평가

○ 사업추진체계의 합리성 평가
- 고용영향을 고려하여 사업의 추진체계 내에 인력양성이나 인적자원개발과 관련된 협력체계가 구축되어 있는가?
- 협력체계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 협력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다면 그 원인은 무엇인가?
- 인력양성이나 인적자원 개발 및 고용영향 제고를 위한 협력체계의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 사업집행과정의 적절성 평가
- 각 사업분야인 인프라, 기술개발, 인력양성, 기술지원 사업의 집행과정에서 고용효과제고를 위한 집행과정, 즉, 지원요건, 지원대상의 선정, 비용수준의 적정성, 고용파급효과 제고를 위한 사업의 성과관리가 효율적으로 작동되고 있는가?
- 고용영향 파급효과 제고를 위한 사업의 집행과정의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 사업의 고용성과 평가
- 사업추진 주체들은 사업의 고용성과에 대한 평가는 어떠한가?
- 사업의 고용성과 달성을 위한 애로사항은 무엇인가?
- 사업수혜자들의 고용성과에 대한 만족도는 어떠한가?
- 사업의 고용성과 달성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은 무엇이며 이러한 제도 개선방안을 통해 고용성과가 어느 정도 확대될 수 있을 것인가?

⑵고용영향 심층면접조사(FGI)

○ 수행된 현장점검 및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각 사업추진주체 및 담당자 관련 기관과의 심층면담조사 실시

- 사업의 고용영향과 관련한 문제점, 애로사항 및 제도 개선방안을 위한 심층논의
- 사업의 고용영향성과 제고방안의 실천 가능한 모델의 설계 및 이의 타당성을 논의

⑶ 고용효과 정량적 평가

○ 정량적 평가는 다음의 두 가지 방안을 토대로 수행

- 사업의 실시에 따른 고용파급효과를 I-O 분석모형을 이용한 적절한 방법으로 분석
- 사업수혜(교육훈련) 인력의 고용관련 정보를 이용하여 회귀분석을 수행

⑷ 제도 개선 방안

○ 정성분석과 정량분석을 기초로 제도 개선 방안 제시

제4장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의 고용영향평가 실태조사

제1절 조사방법

가. 조사개요

⑴ 조사목적

○ 본 조사의 목적은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의 고용영향을 분석·평가하여 향후 해당 사업이 고유 목적의 달성뿐 아니라 보다 고용친화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⑵ 대상, 조사방법 및 기간

○ 조사방법 및 대상
- 기업체 실태조사: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참여 사업체(기관) 담당자 대상으로 실시. 조사는 팩스/이메일로 진행
- 주관기관 심층조사 및 FGI: 체크리스트를 이용하여 주관기관(기업)의 담당자를 대상으로 방문 면담 조사 와 FGI 병행

○ 조사기간: 2010년 5월 10일~ 6월 7일(4주)

⑶ 유효표본

○ 참여사업체 조사는 2,722개 리스트 중에서 유효표본이 474개로 회수율은 17.4%로 나타났으며, 주관기관 방문면담조사는 279개 리스트 중에서 유효표본이 58개로 20.8%로 나타남

<표 4-1> 조사표본 현황

구분	세부사업	리스트수	컨택	회수	유효표본
기업체 실태조사	1. 지역산업기반구축사업	160	102	84	84
	2. 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	1,982	789	203	199
	3. 기업지원서비스 사업	394	304	102	100
	4. 지역산업인력양성사업	186	142	92	91
	합계	2,722	1,346	479	474
주관기관 심층조사	1. 지역산업기반구축사업	56	15	15	15
	2. 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	66	20	19	19
	3. 기업지원서비스 사업	97	15	15	15
	4. 지역산업인력양성사업	60	10	9	9
	합계	279	60	58	58

나. 연구내용과 방법

(1) 연구내용

○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의 고용영향 평가를 위해 고용영향 평가매뉴얼의 내용을 토대로 설문내용을 구성하고 이를 토대로 고용영향 평가를 수행하였으며 주요 평가틀은 다음과 같음

1)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 목표의 적합성 및 실현가능성

○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의 지역전략사업과 성장의 고용효과(인적자원개발, 인력양성, 고용유지 및 창출)제고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평가

○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의 사업계획 또는 목표에 지역(또는 기업)의 고용효과(인적자원개발, 인력양성, 고용유지 및 창출)를 고려하고 있는지를 평가

2)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의 정책추진체계의 효율성 평가

○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의 정책추진체계인 사업신청-심사-계약체결-사업시행-성과평가 과정이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적합한지를 평가

○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의 지원형태, 지원방식, 지원기간, 지원자격의 적절성 평

가

○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의 추진체계 내에 고용효과(인적자원개발, 인력양성, 고용유지 및 창출)를 제고하기 위한 실천적인 방안의 마련 여부

3)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 집행의 적절성 평가

○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이 계획대로 잘 집행되고 있는가?

○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의 집행체계가 적절한가?

○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의 집행과정에 고용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가?

4)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의 성과관리 및 사후관리 평가

○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의 성과는 무엇인가?

○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의 성과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의 성과관리에서 고용효과를 고려하고 있는가?

○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의 사후관리 및 책임관리체계가 효과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 한편 심층평가에서는 고용영향을 고려하도록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경우 고용효과가 얼마나 증가할 것인가를 추가적으로 질문하였음

⑵ 연구방법

○ (설문 및 심층조사를 위한 연구방향 설정) 각 지역 테크노파크 담당자, 전문가, 기업 등을 방문하여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의 고용영향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 및 설문방향을 설정

○ (설문조사)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평가지표를 통해 설문조사를 수행

- 설문조사는 지역산업기반구축사업, 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 기업지원서비스업, 지역산업인력양성사업 4개 분야로 구분하여 이를 업종 및 지역별로 적절히 할당하여 조사를 수행
- 최종 회수된 설문지는 474개이며 이를 사업유형별로 보면 지역산업기반구축사업 84개, 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 199개, 기업지원서비스업 100개, 지역산업인력양성사업 91개 임

○ (심층면접 실시)

- 테크노파크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의 고용영향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에 관한 심층면접을 수행하였으며 조사대상자는 모두 48개 기관임

제2절 사업체 고용영향 평가 실태조사 결과

가. 조사개요 및 응답업체 특성

(1) 조사개요

○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의 고용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에 참여한 기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

- 참여 유형은 크게 지역산업기반구축사업, 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 기업지원서비스사업, 지역산업인력양성사업으로 구분되며 이 중 중복수혜기업이 있기 때문에 대표참여 사업을 중심으로 응답토록 하였음
- 사업의 성격상 앞의 세 사업은 하나의 설문군으로 묶었으며, 지역산업인력 양성사업은 분리하여 조사를 수행
- 설문조사는 2010년 5월 중에 이루어졌으며 전문조사회사에서 담당

○ 설문조사의 내용은 지역산업기반구축사업, 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 기업지원서비스사업은 공통문항으로 조사를 수행하였으며 지역산업인력 양성사업의 경우 앞

의 공통 문항 외에 인력양성사업의 특성에 적합한 문항을 추가적으로 조사하였으며 주요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음

○ 조사대상 기업의 일반 현황

○ 지역전략산업육성사업 목표의 적합성 및 실현가능성 평가
-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의 목표의 성장 및 고용창출 부합성 평가
-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의 고용영향 고려 여부 평가

○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의 정책추진체계의 효율성 평가
- 정책추진체계와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 사업 요건의 적절성 평가
- 사업 추진체계 내에 고용영향 고려여부

○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 집행의 적절성 평가
- 계획대비 집행성과
- 집행체계의 적절성
- 정책집행과정에 고용영향 제고방안 고려여부

○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의 성과관리 및 사후관리 평가
- 사업참여에 따른 성과평가
- 사업의 성과관리 평가
- 성과관리에서 고용영향 고려여부
- 사업의 사후관리 및 책임관리체계 평가
- 사후관리 및 책임관리체계에서 고용영향 고려여부

※ 한편, 인력양성 사업의 경우 성과측면에서 인력채용현황, 교육훈련자수, 사업주관기관평가, 교육프로그램 평가 등을 추가적으로 조사

○ 고용영향에 대한 종합의견
- 경쟁력 제고 및 일자리 창출 기여여부
-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 참여로 인한 고용창출 효과

⑵ 응답업체의 특성

○ 응답업체별 특성을 살펴보면 지역산업기반구축사업이 84개(17.7%), 지역산업기술개발 사업 199개(42.0%), 기업지원서비스업 100개(21.1%), 지역산업인력양성사업 91개(19.2%)임

– 생산분야별로 보면 지식기반 제조업 245개(51.7%), 지식기반 서비스업 31개(6.5%) 그리고 기간산업 및 기타산업 198개(41.8%)로 나타남

<표 4-2> 응답자 특성

(단위: 명, %)

		인원	비중
전체		474	100.0
생산분야	지식기반 제조업	245	51.7
	지식기반 서비스업	31	6.5
	기간산업 및 기타	198	41.8
참여한 대표적 사업	지역산업기반구축사업	84	17.7
	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	199	42.0
	기업지원서비스사업	100	21.1
	지역산업인력양성사업	91	19.2
2009년 종업원 규모별	10인 미만	111	23.4
	30인 미만	137	28.9
	100인 미만	133	28.1
	300인 미만	62	13.1
	300인 이상	25	5.3
	모름/무응답	6	1.3
2009년 매출 규모별	10억 미만	106	22.4
	50억 미만	127	26.8
	100억 미만	71	15.0
	1000억 미만	134	28.3
	1000억 이상	28	5.9
	모름/무응답	8	1.7

○ 조사대상 업체의 설립년도를 보면 절반가량인 51.7%가 2000년대에 창업한 것으로 조사됨

<표 4-3> 창업년도

		사례수	%
설립년도	2000년대	245	51.7%
	1990년대	144	30.4%
	1980년대	41	8.6%
	1970년대	29	6.1%
	1960년 이전	13	2.7%
	모름/무응답	2	0.4%
계		474	100.0%

○ 조사대상 업체의 평균 종업원 수 변동을 보면 2006년말 96.1명에서 2007년말에는 97.24명으로 약간 증가하였다가 2008년말에는 93.79명으로 줄어들었으며 2009년말에는 100.91명으로 조사됨

- 매년 표본이 다소 달라지기 때문에 이를 통해 종업원 변동을 파악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

<표 4-4> 총종업원 현황

		사례수	2006년 말		2007년 말		2008년 말		2009년 말	
			사례수	평균: 명	사례수	평균: 명	사례수	평균: 명	사례수	평균: 명
전체		474	393	96.09	416	97.24	453	93.79	468	100.91
생산 분야	지식기반 제조업	245	191	57.61	205	59.97	229	57.47	242	76.58
	지식기반 서비스업	31	24	43.29	25	46.72	30	39.43	30	41.83
	기간산업 및 기타	198	178	144.49	186	145.12	194	145.08	196	139.99
참여한 대표적 사업	지역산업 기반구축사업	84	77	53.31	80	56.59	82	60.73	84	61.73
	지역산업 기술개발사업	199	177	109.25	185	112.91	194	111.57	198	113.28
	기업지원 서비스사업	100	72	61.53	80	58.20	96	51.57	100	50.68
	지역산업 인력양성사업	91	67	147.61	71	146.21	81	134.73	86	169.10
2009년 종업원 규모별	10인 미만	111	69	4.25	81	4.78	104	5.03	111	5.59
	30인 미만	137	118	15.03	125	16.20	133	16.97	137	18.21
	100인 미만	133	124	45.01	127	47.60	132	50.14	133	52.71
	300인 미만	62	60	147.13	61	157.72	61	171.07	62	169.76
	300인 이상	25	21	1,003.81	22	1,017.05	23	985.04	25	1,062.96
	모름/무응답	6	1	206.00	0	·	0	·	0	·
2009년 매출 규모별	10억 미만	106	61	7.97	72	8.21	95	7.76	104	8.60
	50억 미만	127	111	16.34	118	16.66	126	17.31	126	18.88
	100억 미만	71	65	37.71	68	41.57	68	43.74	71	47.01
	1000억 미만	134	127	94.20	128	100.09	133	105.29	133	107.40
	1000억 이상	28	24	874.96	25	888.48	26	867.23	27	948.48
	모름/무응답	8	5	9.80	5	9.00	5	9.20	7	103.00

나.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 목표의 적합성 및 고용영향 고려여부

⑴ 목표의 적합성

○ <표 4-5>는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이 지역전략산업의 성장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5점척도로 질문한 결과로 그렇다는 의견이 전체의 85.0%로 나타나 매우 높은 점수를 보여주고 있음

- 이를 유형별로 보면 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의 평점이 4.32점으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지역인력양성사업과 지역산업기반 구축사업이 각각 4.12점과 4.11점으로 나타났으며 기업지원서비스 사업은 3.98점으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표 4-5> 사업목표의 적합도-지역전략산업의 성장에 부합 정도

(단위: 명, %)

		사례수	전혀 그렇지않다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다소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점)
전체		474	2	0.4	10	2.1	59	12.4	236	49.8	167	35.2	4.17
생산 분야	지식기반 제조업	245	2	0.8	5	2.0	26	10.6	117	47.8	95	38.8	4.22
	지식기반 서비스업	31	0	0.0	1	3.2	5	16.1	17	54.8	8	25.8	4.03
	기간산업 및 기타	198	0	0.0	4	2.0	28	14.1	102	51.5	64	32.3	4.14
참여한 대표적 사업	지역산업 기반구축사업	84	0	0.0	3	3.6	15	17.9	36	42.9	30	35.7	4.11
	지역산업 기술개발사업	199	0	0.0	2	1.0	14	7.0	101	50.8	82	41.2	4.32
	기업지원 서비스사업	100	2	2.0	4	4.0	17	17.0	48	48.0	29	29.0	3.98
	지역산업 인력양성사업	91	0	0.0	1	1.1	13	14.3	51	56.0	26	28.6	4.12
2009년 종업원 규모별	10인 미만	111	1	0.9	3	2.7	13	11.7	50	45.0	44	39.6	4.20
	30인 미만	137	1	0.7	3	2.2	25	18.2	56	40.9	52	38.0	4.13
	100인 미만	133	0	0.0	3	2.3	12	9.0	76	57.1	42	31.6	4.18
	300인 미만	62	0	0.0	1	1.6	6	9.7	35	56.5	20	32.3	4.19
	300인 이상	25	0	0.0	0	0.0	2	8.0	15	60.0	8	32.0	4.24
	모름/무응답	6	0	0.0	0	0.0	1	16.7	4	66.7	1	16.7	4.00

○ 다음으로 <표 4-6>는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이 고용효과(인적자원개발, 인력양성, 고용유지 및 창출)제고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5점척도로 질문한 결과 평점이 3.99점으로 지역전략산업의 육성에 부합한다는 의견에 대한 평점(4.17점)에 비해 다소 낮게 나타남

<표 4-6> 사업목표의 적합도-고용창출 제고에 부합정도

(단위: 명, %)

		사례수	전혀 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그저그렇다		다소그렇다		매우그렇다		평균 (점)
[전체]		474	2	0.4	11	2.3	103	21.7	232	48.9	126	26.6	3.99
생산 분야	지식기반 제조업	245	2	0.8	6	2.4	46	18.8	120	49.0	71	29.0	4.03
	지식기반 서비스업	31	0	0.0	2	6.5	4	12.9	19	61.3	6	19.4	3.94
	기간산업 및 기타	198	0	0.0	3	1.5	53	26.8	93	47.0	49	24.7	3.95
참여한 대표적 사업	지역산업 기반구축사업	84	0	0.0	2	2.4	19	22.6	38	45.2	25	29.8	4.02
	지역산업 기술개발사업	199	0	0.0	4	2.0	34	17.1	102	51.3	59	29.6	4.09
	기업지원 서비스사업	100	2	2.0	2	2.0	31	31.0	41	41.0	24	24.0	3.83
	지역산업 인력양성사업	91	0	0.0	3	3.3	19	20.9	51	56.0	18	19.8	3.92
2009년 종업원 규모별	10인 미만	111	1	0.9	2	1.8	21	18.9	52	46.8	35	31.5	4.06
	30인 미만	137	1	0.7	4	2.9	32	23.4	59	43.1	41	29.9	3.99
	100인 미만	133	0	0.0	3	2.3	30	22.6	74	55.6	26	19.5	3.92
	300인 미만	62	0	0.0	1	1.6	13	21.0	31	50.0	17	27.4	4.03
	300인 이상	25	0	0.0	0	0.0	5	20.0	14	56.0	6	24.0	4.04
	모름/무응답	6	0	0.0	1	16.7	2	33.3	2	33.3	1	16.7	3.50

- 이를 유형별로 보면 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의 평점이 4.09점으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지역산업기반 구축사업 4.02점, 지역인력양성사업 3.92점이며 기업지원서비스 사업은 3.83점으로 나타남

나. 지역전략 산업 육성사업 목표의 고용영향 고려여부

○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의 사업계획 또는 목표에 지역(또는 기업)의 고용효과를 고려하고 있는지를 질문한 결과(4점척도) '다소 고려하고 있다'는 의견이 57.6%이고, '매우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의견이 27.8%로 나타나 전체 응답자의 57.4%가 고려하고 있다고 응답(4점척도 기준 평점 3.18점)

- 이를 사업유형별로 보면 지역산업기반구축사업과 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이 각각 평점 3.21점으로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기업지원서비스 사업은 3.15점, 그리고 지역산업인력양성사업은 평점 3.10점으로 조사됨

<표 4-7> 지역전략산업 사업계획 또는 목표의 고용효과 고려도

(단위: 명, %)

		사례수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		제대로 고려하고 있지 않다		다소 고려하고 있는 편이다		매우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잘 모르겠다		평균 (점)
전체		474	4	0.8	44	9.3	273	57.6	132	27.8	21	4.4	3.18
생산 분야	지식기반 제조업	245	2	0.8	18	7.3	138	56.3	77	31.4	10	4.1	3.23
	지식기반 서비스업	31	0	0.0	5	16.1	19	61.3	6	19.4	1	3.2	3.03
	기간산업 및 기타	198	2	1.0	21	10.6	116	58.6	49	24.7	10	5.1	3.13
참여한 대표적 사업	지역산업 기반구축사업	84	2	2.4	6	7.1	46	54.8	27	32.1	3	3.6	3.21
	지역산업 기술개발사업	199	0	0.0	18	9.0	117	58.8	58	29.1	6	3.0	3.21
	기업지원 서비스사업	100	1	1.0	9	9.0	58	58.0	25	25.0	7	7.0	3.15
	지역산업 인력양성사업	91	1	1.1	11	12.1	52	57.1	22	24.2	5	5.5	3.10
2009년 종업원 규모별	10인 미만	111	2	1.8	10	9.0	56	50.5	37	33.3	6	5.4	3.22
	30인 미만	137	0	0.0	15	10.9	68	49.6	48	35.0	6	4.4	3.25
	100인 미만	133	2	1.5	9	6.8	91	68.4	25	18.8	6	4.5	3.09
	300인 미만	62	0	0.0	6	9.7	38	61.3	17	27.4	1	1.6	3.18
	300인 이상	25	0	0.0	1	4.0	18	72.0	4	16.0	2	8.0	3.13
	모름/무응답	6	0	0.0	3	50.0	2	33.3	1	16.7	0	0.0	2.67

다.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의 정책추진체계의 효율성

(1) 정책추진 체계의 적합성

○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의 정책추진체계는 사업신청-심사-계약체결-사업시행-성과평가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러한 정책추진체계가 사업목적으로 달성하는데 적합한지에 대해 '매우 적합하다' 5점 '다소 적합하다' 4점, '그저 그렇다' 3점, '적합하지 않다' 2점, '전혀 적합하지 않다' 1점으로 하여 조사를 수행

- 전체적으로 보면 사업시행이 4.06점으로 가장 높고 나머지 항목들은 3.97점과 3.98점 범위에 놓여 있어 대부분 적합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됨
- 사업유형별로 보면 평균적으로 지역산업기술개발 사업이 정책추진 체계의 사업목적 적합도에서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고, 상대적으로 기업지원서비스 사업의 평가가 낮았음

<표 4-8> 정책추진체계의 사업목적 적합도

		사례수	사업의신청	심사	계약체결	사업시행	성과평가 과정
			평균: 점	평균: 점	평균: 점	평균: 점	평균: 점
전체		474	3.98	3.97	3.99	4.06	3.99
생산 분야	지식기반 제조업	245	4.05	4.02	4.06	4.11	4.05
	지식기반 서비스업	31	3.90	3.90	3.87	4.00	3.77
	기간산업 및 기타	198	3.92	3.92	3.93	4.02	3.94
참여한 대표적 사업	지역산업기반구축사업	84	3.93	3.93	4.00	4.05	4.02
	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	199	4.07	4.06	4.07	4.16	4.07
	기업지원서비스사업	100	3.81	3.83	3.82	3.87	3.85
	지역산업인력양성사업	91	4.04	3.98	4.01	4.07	3.93
2009년 종업원 규모별	10인 미만	111	4.05	4.04	4.10	4.15	4.06
	30인 미만	137	3.96	3.92	4.02	4.02	4.00
	100인 미만	133	3.98	4.02	3.98	4.10	4.00
	300인 미만	62	4.00	3.98	3.90	4.00	3.89
	300인 이상	25	3.84	3.76	3.84	3.92	3.92
	모름/무응답	6	3.83	3.50	3.33	3.83	3.33
2009년 매출 규모별	10억 미만	106	4.08	4.03	4.08	4.11	4.02
	50억 미만	127	3.98	4.00	4.06	4.12	4.09
	100억 미만	71	4.03	3.97	4.03	4.06	4.06
	1000억 미만	134	3.92	3.95	3.90	4.00	3.91
	1000억 이상	28	3.93	3.75	3.79	3.96	3.82
	모름/무응답	8	3.75	3.88	3.75	3.88	3.25

⑵ 지원요건의 적절성

○ <표 4-9>는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의 지원형태, 지원방식, 지원기간, 지원자격요건의 적절성을 5점척도로 평가한 결과 지원형태는 3.93점, 지원방식 3.88점, 지원자격요건 3.82점 그리고 지원기간이 3.67점으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지원요건에 대한 평가는 앞의 정책추진체계에 대한 평가보다 상대적으로 점수가 약간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사업유형별로 보면 지역산업기술개발 사업에 대한 평가가 가장 좋고 기업지원서비스사업에 대한 평가가 상대적으로 낮으나 그 편차는 크지 않음

<표 4-9> 사업 지원요건의 적절성

		사례수	지원형태	지원방식	지원기간	지원자격요건
			평균: 점	평균: 점	평균: 점	평균: 점
[전체]		474	3.93	3.88	3.67	3.82
생산분야	지식기반 제조업	245	3.99	3.93	3.73	3.89
	지식기반 서비스업	31	3.77	3.71	3.61	3.71
	기간산업 및 기타	198	3.88	3.85	3.62	3.77
참여한 대표적 사업	지역산업기반구축사업	84	4.00	3.94	3.86	3.96
	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	199	4.05	4.00	3.72	3.93
	기업지원서비스사업	100	3.72	3.71	3.53	3.61
	지역산업인력양성사업	91	3.84	3.77	3.56	3.69
2009년 종업원 규모별	10인 미만	111	3.90	3.86	3.68	3.77
	30인 미만	137	3.93	3.85	3.73	3.82
	100인 미만	133	3.98	3.89	3.74	3.87
	300인 미만	62	4.00	4.05	3.56	3.95
	300인 이상	25	3.72	3.80	3.32	3.60
	모름/무응답	6	3.50	3.50	3.33	3.33
2009년 매출 규모별	10억 미만	106	3.86	3.83	3.66	3.73
	50억 미만	127	4.02	3.91	3.75	3.88
	100억 미만	71	3.97	4.00	3.85	3.85
	1000억 미만	134	3.93	3.88	3.62	3.90
	1000억 이상	28	3.71	3.75	3.29	3.46
	모름/무응답	8	3.88	3.75	3.38	3.88

⑶ 추진체계의 고용효과 고려여부

○ <표 4-10>는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의 추진체계 내에 고용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실천적인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를 평가한 결과로 다소 고려하고 있는 편이다가 전체 응답자의 616%를 차지하며 18.1%는 매우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응답(4점척도 기준으로 3.02점을 기록)

- 사업유형별로 보면 지역산업기술개발 사업이 3.11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나머지 세 사업은 2.94~2.96점 범위에 놓여 있으며 편차가 거의 없음

<표 4-10> 고용효과제고 위한 실천적 방안 마련 정도

(단위: 명, %)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		제대로 고려하고 있지 않다		다소 고려하고 있는 편이다		매우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잘모르겠다		평균 (점)
전체		5	1.1	67	14.1	292	61.6	86	18.1	24	5.1	3.02
생산 분야	지식기반 제조업	3	1.2	29	11.8	145	59.2	53	21.6	15	6.1	3.08
	지식기반 서비스업	1	3.2	6	19.4	21	67.7	3	9.7	0	0.0	2.84
	기간산업 및 기타	1	0.5	32	16.2	126	63.6	30	15.2	9	4.5	2.98
참여한 대표적 사업	지역산업 기반구축사업	1	1.2	14	16.7	52	61.9	13	15.5	4	4.8	2.96
	지역산업 기술개발사업	2	1.0	15	7.5	130	65.3	40	20.1	12	6.0	3.11
	기업지원 서비스 사업	1	1.0	19	19.0	59	59.0	17	17.0	4	4.0	2.96
	지역산업 인력양성사업	1	1.1	19	20.9	51	56.0	16	17.6	4	4.4	2.94
2009년 종업원 규모별	10인 미만	3	2.7	16	14.4	67	60.4	20	18.0	5	4.5	2.98
	30인 미만	1	0.7	19	13.9	75	54.7	33	24.1	9	6.6	3.09
	100인 미만	1	0.8	17	12.8	89	66.9	19	14.3	7	5.3	3.00
	300인 미만	0	0.0	10	16.1	41	66.1	10	16.1	1	1.6	3.00
	300인 이상	0	0.0	2	8.0	17	68.0	4	16.0	2	8.0	3.09
	모름/무응답	0	0.0	3	50.0	3	50.0	0	0.0	0	0.0	2.50

라.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 집행의 적절성

⑴ 사업의 계획대비 집행

○ <표 4-11>는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이 계획대로 잘 집행되고 있는지를 5점척도로 평가한 결과로 다소 그렇다가 59.1%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매우 그렇다(22.4%)로 나타나 전체 응답자의 81.5%가 긍정적인 대답을 하고 있음(5점척도 기준 평점 4.01점)

- 사업유형별로 보면 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의 평가결과가 4.15점으로 가장 높으며, 그 다음으로 지역산업기반 구축사업 4.02점, 지역산업 인력양성 사업 3.97점 그리고 기업지원 서비스 사업 3.76점의 순으로 나타남

<표 4-11> 사업의 집행정도

(단위: 명,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다소 그렇다		매우 그렇다		모름/무응답		평균 (점)
전체		2	0.4	10	2.1	75	15.8	280	59.1	106	22.4	1	0.2	4.01
생산 분야	지식기반 제조업	1	0.4	4	1.6	34	13.9	140	57.1	65	26.5	1	0.4	4.08
	지식기반 서비스업	0	0.0	2	6.5	3	9.7	21	67.7	5	16.1	0	0.0	3.94
	기간산업 및 기타	1	0.5	4	2.0	38	19.2	119	60.1	36	18.2	0	0.0	3.93
참여한 대표적 사업	지역산업 기반구축사업	0	0.0	2	2.4	12	14.3	52	61.9	18	21.4	0	0.0	4.02
	지역산업 기술개발사업	1	0.5	1	0.5	21	10.6	120	60.3	56	28.1	0	0.0	4.15
	기업지원 서비스사업	1	1.0	5	5.0	23	23.0	58	58.0	12	12.0	1	1.0	3.76
	지역산업 인력양성사업	0	0.0	2	2.2	19	20.9	50	54.9	20	22.0	0	0.0	3.97
2009년 종업원 규모별	10인 미만	2	1.8	4	3.6	14	12.6	68	61.3	23	20.7	0	0.0	3.95
	30인 미만	0	0.0	4	2.9	21	15.3	83	60.6	29	21.2	0	0.0	4.00
	100인 미만	0	0.0	0	0.0	21	15.8	78	58.6	33	24.8	1	0.8	4.09
	300인 미만	0	0.0	1	1.6	10	16.1	34	54.8	17	27.4	0	0.0	4.08
	300인 이상	0	0.0	1	4.0	6	24.0	15	60.0	3	12.0	0	0.0	3.80
	모름/무응답	0	0.0	0	0.0	3	50.0	2	33.3	1	16.7	0	0.0	3.67

⑵ 사업 집행체계의 적절성

○ <표 4-12>는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의 집행체계가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여부를 5점척도로 평가한 결과로 다소 그렇다가 55.7%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매우 그렇다(21.3%)로 나타나 전체 응답자의 77.0%가 긍정적인 대답을 하고 있음(5점척도 기준 평점 3.96점)

– 사업유형별로 보면 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의 평가결과가 4.09점으로 가장 높으며, 그 다음으로 지역산업기반 구축사업 3.99점, 지역산업 인력양성 사업 3.96점 그리고 기업지원 서비스 사업 3.68점의 순으로 나타남

<표 4-12> 사업 집행체계의 적절성

(단위: 명, %)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다소 그렇다		매우 그렇다		모름/무응답		평균(점)
전체		12	2.5	95	20.0	264	55.7	101	21.3	2	0.4	3.96
생산분야	지식기반 제조업	7	2.9	40	16.3	135	55.1	61	24.9	2	0.8	4.03
	지식기반 서비스업	0	0.0	8	25.8	18	58.1	5	16.1	0	0.0	3.90
	기간산업 및 기타	5	2.5	47	23.7	111	56.1	35	17.7	0	0.0	3.89
참여한 대표적 사업	지역산업 기반구축사업	0	0.0	17	20.2	51	60.7	16	19.0	0	0.0	3.99
	지역산업 기술 개발사업	4	2.0	29	14.6	111	55.8	55	27.6	0	0.0	4.09
	기업지원 서비스 사업	5	5.0	34	34.0	46	46.0	13	13.0	2	2.0	3.68
	지역산업 인력양성사업	3	3.3	15	16.5	56	61.5	17	18.7	0	0.0	3.96
2009년 종업원 규모별	10인 미만	4	3.6	20	18.0	63	56.8	23	20.7	1	0.9	3.95
	30인 미만	3	2.2	27	19.7	76	55.5	31	22.6	0	0.0	3.99
	100인 미만	1	0.8	27	20.3	74	55.6	30	22.6	1	0.8	4.01
	300인 미만	1	1.6	12	19.4	35	56.5	14	22.6	0	0.0	4.00
	300인 이상	2	8.0	7	28.0	14	56.0	2	8.0	0	0.0	3.64
	모름/무응답	1	16.7	2	33.3	2	33.3	1	16.7	0	0.0	3.50

⑶ 사업집행과정의 고용효과제고방안 마련 여부

○ <표 4-13>는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이 정책집행과정에 고용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지를 질문한 결과로 다소 그렇다가 53.8%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매우 그렇다(10.5%)로 나타나 전체 응답자의 64.3%가 긍정적인 대답을 하고 있음(5점척도 기준 평점 3.69점)

– 사업유형별로 보면 지역산업 인력양성사업이 3.78점으로 가장 높으며, 그 다음으로 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 3.70점, 그리고 지역산업기반 구축사업과 기업지원서비스 사업이 각각 3.64점, 3.63점으로 나타남

<표 4-13> 정책집행과정의 고용효과제고 방안 마련 정도

(단위: 명, %)

		전혀 그렇지않다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다소 그렇다		매우 그렇다		모름/ 무응답		평균 (점)
전체		2	0.4	24	5.1	141	29.7	255	53.8	50	10.5	2	0.4	3.69
생산 분야	지식기반 제조업	2	0.8	13	5.3	68	27.8	128	52.2	32	13.1	2	0.8	3.72
	지식기반 서비스업	0	0.0	0	0.0	9	29.0	19	61.3	3	9.7	0	0.0	3.81
	기간산업 및 기타	0	0.0	11	5.6	64	32.3	108	54.5	15	7.6	0	0.0	3.64
참여한 대표적 사업	지역산업 기반구축사업	0	0.0	5	6.0	27	32.1	45	53.6	7	8.3	0	0.0	3.64
	지역산업 기술개발사업	0	0.0	10	5.0	61	30.7	106	53.3	22	11.1	0	0.0	3.70
	기업지원 서비스 사업	2	2.0	4	4.0	34	34.0	46	46.0	12	12.0	2	2.0	3.63
	지역산업 인력양성사업	0	0.0	5	5.5	19	20.9	58	63.7	9	9.9	0	0.0	3.78
2009년 종업원 규모별	10인 미만	1	0.9	5	4.5	31	27.9	53	47.7	20	18.0	1	0.9	3.78
	30인 미만	1	0.7	6	4.4	40	29.2	76	55.5	14	10.2	0	0.0	3.70
	100인 미만	0	0.0	9	6.8	41	30.8	75	56.4	7	5.3	1	0.8	3.61
	300인 미만	0	0.0	3	4.8	19	30.6	33	53.2	7	11.3	0	0.0	3.71
	300인 이상	0	0.0	0	0.0	8	32.0	15	60.0	2	8.0	0	0.0	3.76
	모름/무응답	0	0.0	1	16.7	2	33.3	3	50.0	0	0.0	0	0.0	3.33

마.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의 성과관리 및 사후관리

○ 여기서는 크게 사업의 성과, 성과관리 및 사후관리로 구분하여 평가를 수행

- 사업의 성과는 사업의 성격상 인력양성사업을 제외한 세 사업(지역산업기반구축사업, 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 기업지원서비스사업)과 인력양성사업으로 구분하여 평가를 수행
- 사업의 성과관리 및 사후관리에 대한 평가는 4개 사업을 대상으로 동일한 평가를 수행

(1) 사업의 성과

1) 인력양성 사업을 제외한 사업의 성과

○ 인력양성 사업을 제외한 세 사업의 성과는 크게 1) 특허권 2) 공정의 개선 3) 신제품의 개발 4) 매출의 증대 5) 창업으로 구분하여 질문을 하였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연계하여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각각 질문하였음

① 특허권

○ <표 4-14>은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 참여의 성과로 특허권 성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 결과로 응답업체의 51.2%가 성과가 있었다고 응답

- 사업유형별로 보면 지역산업기반 구축사업이 특허권 성과가 있었다는 비중이 58.3%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기업지원서비스업으로 나타났고 지역산업기술개발 사업은 39.2%로 상대적으로 낮았음

<표 4-14> 특허권 해당 유무

(단위: 명, %)

		사례수	성과있었음		성과없었음		모름/무응답	
전체		383	196	51.2	181	47.3	6	1.6
2009년 종업원 규모별	10인 미만	82	46	56.1	34	41.5	2	2.4
	30인 미만	117	64	54.7	52	44.4	1	0.9
	100인 미만	111	51	45.9	57	51.4	3	2.7
	300인 미만	52	25	48.1	27	51.9	0	0.0
	300인 이상	20	10	50.0	10	50.0	0	0.0
	모름/무응답	1	0	0.0	1	100.0	0	0.0
생산분야_대분류	기간산업	158	73	46.2	82	51.9	3	1.9
	지식기반 제조업	197	111	56.3	83	42.1	3	1.5
	지식기반 서비스업	18	10	55.6	8	44.4	0	0.0
	기타	10	2	20.0	8	80.0	0	0.0
대표적인 사업 (대분류)	지역산업기반구축사업 (인프라사업)	84	34	40.5	49	58.3	1	1.2
	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	199	118	59.3	78	39.2	3	1.5
	기업지원서비스사업	100	44	44.0	54	54.0	2	2.0

○ <표 4-15>는 특허권성과가 있었다고 응답한 업체를 대상으로 이러한 성과가 고용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질문한 결과임

- 표에서 보듯이 신규채용과 생산성 향상이 각각 34.2%와 33.2%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교육훈련 13.8%, 경력채용 10.7%의 순으로 나타남

<표 4-15> 특허권-고용에 미친 영향

(단위: 명, %)

		사례수	신규채용		경력채용		배치조정		생산성 증가		교육훈련		모름/ 무응답	
전체		196	67	34.2	21	10.7	12	6.1	65	33.2	27	13.8	9	4.6
2009년 종업원 규모별	10인 미만	46	14	30.4	5	10.9	1	2.2	18	39.1	6	13.0	2	4.3
	30인 미만	64	21	32.8	7	10.9	6	9.4	19	29.7	9	14.1	3	4.7
	100인 미만	51	15	29.4	6	11.8	4	7.8	17	33.3	9	17.6	2	3.9
	300인 미만	25	12	48.0	2	8.0	1	4.0	9	36.0	2	8.0	1	4.0
	300인 이상	10	5	50.0	1	10.0	0	0.0	2	20.0	1	10.0	1	10.0
생산분야 _대분류	기간산업	73	24	32.9	6	8.2	6	8.2	29	39.7	9	12.3	1	1.4
	지식기반 제조업	111	39	35.1	14	12.6	6	5.4	30	27.0	17	15.3	8	7.2
	지식기반 서비스업	10	3	30.0	1	10.0	0	0.0	5	50.0	1	10.0	0	0.0
	기타	2	1	50.0	0	0.0	0	0.0	1	50.0	0	0.0	0	0.0
대표적인사업 (대분류)	지역산업 기반구축사업 (인프라사업)	34	11	32.4	4	11.8	2	5.9	11	32.4	5	14.7	2	5.9
	지역산업 기술개발사업	118	44	37.3	13	11.0	7	5.9	33	28.0	19	16.1	6	5.1
	기업지원 서비스사업	44	12	27.3	4	9.1	3	6.8	21	47.7	3	6.8	1	2.3

② 공정의 개선

○ <표 4-16>는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 참여의 성과로 공정이 개선되었는지에 대한 질문 결과로 응답업체의 56.7이 성과가 있었다고 응답

- 사업유형별로 세 사업이 모두 유사하게 성과가 있었다고 응답하고 있는데 즉, 공정개선 성과가 있었다는 응답비율을 보면 지역산업기반 구축사업 57.1%, 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 56.3% 그리고 기업지원서비스사업 57.0%로 나타남

○ <표 4-17>은 공정의 개선이 있었다고 응답한 업체를 대상으로 이러한 성과가 고용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질문한 결과임

- 표에서 보듯이 생산성 증가가 53.9%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신규채용 19.4%, 교육훈련과 배치전환이 각각 10.1%로 나타남

<표 4-16> 공정의 개선-해당유무

(단위: 명, %)

		사례수	성과있었음		성과없었음		모름/무응답	
전체		383	217	56.7	160	41.8	6	1.6
2009년 종업원 규모별	10인 미만	82	46	56.1	35	42.7	1	1.2
	30인 미만	117	66	56.4	50	42.7	1	0.9
	100인 미만	111	57	51.4	51	45.9	3	2.7
	300인 미만	52	34	65.4	17	32.7	1	1.9
	300인 이상	20	13	65.0	7	35.0	0	0.0
	모름/무응답	1	1	100.0	0	0.0	0	0.0
2009년 매출 규모별	10억 미만	76	44	57.9	31	40.8	1	1.3
	50억 미만	102	58	56.9	44	43.1	0	0.0
	100억 미만	62	34	54.8	27	43.5	1	1.6
	1000억 미만	117	66	56.4	48	41.0	3	2.6
	1000억 이상	20	12	60.0	8	40.0	0	0.0
	모름/무응답	6	3	50.0	2	33.3	1	16.7
생산분야_ 대분류	기간산업	158	93	58.9	62	39.2	3	1.9
	지식기반 제조업	197	113	57.4	81	41.1	3	1.5
	지식기반 서비스업	18	7	38.9	11	61.1	0	0.0
	기타	10	4	40.0	6	60.0	0	0.0
대표적인 사업 (대분류)	지역산업기반구축사업 (인프라사업)	84	48	57.1	35	41.7	1	1.2
	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	199	112	56.3	84	42.2	3	1.5
	기업지원서비스사업	100	57	57.0	41	41.0	2	2.0

<표 4-17> 공정의 개선-고용에 미친 영향

(단위: 명, %)

		사례수	신규채용		경력채용		감원		배치조정		생산성증가		교육훈련		모름/무응답	
전체		217	42	19.4	14	6.5	1	0.5	22	10.1	117	53.9	22	10.1	3	1.4
2009년 종업원 규모별	10인 미만	46	6	13.0	2	4.3	0	0.0	5	10.9	27	58.7	4	8.7	2	4.3
	30인 미만	66	11	16.7	7	10.6	1	1.5	6	9.1	36	54.5	6	9.1	0	0.0
	100인 미만	57	14	24.6	3	5.3	0	0.0	3	5.3	31	54.4	7	12.3	0	0.0
	300인 미만	34	7	20.6	1	2.9	0	0.0	7	20.6	17	50.0	3	8.8	0	0.0
	300인 이상	13	4	30.8	1	7.7	0	0.0	1	7.7	5	38.5	2	15.4	1	7.7
	모름/무응답	1	0	0.0	0	0.0	0	0.0	0	0.0	1	100.0	0	0.0	0	0.0
2009년 매출 규모별	10억 미만	44	5	11.4	4	9.1	1	2.3	6	13.6	23	52.3	4	9.1	1	2.3
	50억 미만	58	9	15.5	5	8.6	0	0.0	3	5.2	36	62.1	5	8.6	1	1.7
	100억 미만	34	10	29.4	2	5.9	0	0.0	1	2.9	19	55.9	3	8.8	0	0.0
	1000억 미만	66	15	22.7	2	3.0	0	0.0	9	13.6	33	50.0	9	13.6	0	0.0
	1000억 이상	12	3	25.0	1	8.3	0	0.0	2	16.7	4	33.3	1	8.3	1	8.3
	모름/무응답	3	0	0.0	0	0.0	0	0.0	1	33.3	2	66.7	0	0.0	0	0.0
생산분야_대분류	기간산업	93	18	19.4	4	4.3	0	0.0	9	9.7	55	59.1	8	8.6	0	0.0
	지식기반 제조업	113	23	20.4	9	8.0	1	0.9	12	10.6	54	47.8	14	12.4	3	2.7
	지식기반 서비스업	7	1	14.3	1	14.3	0	0.0	0	0.0	5	71.4	0	0.0	0	0.0
	기타	4	0	0.0	0	0.0	0	0.0	1	25.0	3	75.0	0	0.0	0	0.0
대표적인 사업 (대분류)	지역산업 기반구축사업 (인프라사업)	48	7	14.6	1	2.1	0	0.0	5	10.4	29	60.4	6	12.5	0	0.0
	지역산업 기술개발사업	112	22	19.6	11	9.8	0	0.0	11	9.8	60	53.6	9	8.0	3	2.7
	기업지원 서비스사업	57	13	22.8	2	3.5	1	1.8	6	10.5	28	49.1	7	12.3	0	0.0

④ 신제품의 개발

○ <표 4-18>는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 참여로 신제품의 개발 성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 결과로 응답업체의 79.4%가 성과가 있었다고 응답하여 매우 높게 나타남

- 사업유형별로 보면 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의 경우 성과가 있었다는 응답비율이 82.9%에 달했으며 지역산업기반구축사업은 77.4%가 그리고 기업지원서비스사업은 74.0%가 성과가 있었다고 응답함

<표 4-18> 신제품의 개발-해당유무

(단위: 명, %)

		사례수	성과있었음		성과없었음		모름/무응답	
전체		383	304	79.4	73	19.1	6	1.6
2009년 종업원 규모별	10인 미만	82	68	82.9	13	15.9	1	1.2
	30인 미만	117	90	76.9	26	22.2	1	0.9
	100인 미만	111	90	81.1	18	16.2	3	2.7
	300인 미만	52	40	76.9	11	21.2	1	1.9
	300인 이상	20	15	75.0	5	25.0	0	0.0
	모름/무응답	1	1	100.0	0	0.0	0	0.0
2009년 매출 규모별	10억 미만	76	63	82.9	12	15.8	1	1.3
	50억 미만	102	79	77.5	23	22.5	0	0.0
	1 00억 미만	62	51	82.3	10	16.1	1	1.6
	1000억 미만	117	91	77.8	23	19.7	3	2.6
	1000억 이상	20	16	80.0	4	20.0	0	0.0
	모름/무응답	6	4	66.7	1	16.7	1	16.7
생산분야_ 대분류	기간산업	158	121	76.6	34	21.5	3	1.9
	지식기반 제조업	197	162	82.2	32	16.2	3	1.5
	지식기반 서비스업	18	15	83.3	3	16.7	0	0.0
	기타	10	6	60.0	4	40.0	0	0.0
대표적인 사업 (대분류)	지역산업기반구축사업 (인프라사업)	84	65	77.4	18	21.4	1	1.2
	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	199	165	82.9	31	15.6	3	1.5
	기업지원서비스사업	100	74	74.0	24	24.0	2	2.0

○ <표 4-19>는 신제품의 개발 성과가 있었다고 응답한 업체를 대상으로 이러한 성과가 고용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질문한 결과임

- 표에서 보듯이 신규채용이 41.4%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생산성 증가 34.9%, 경력직 채용 13.2%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4-19> 신제품의 개발-고용에 미친 영향

(단위: 명, %)

		사례수	신규채용		경력채용		감원		배치조정		생산성증가		교육훈련		모름/무응답	
전체		304	126	41.4	40	13.2	1	0.3	16	5.3	106	34.9	23	7.6	4	1.3
2009년 종업원 규모별	10인 미만	68	21	30.9	7	10.3	0	0.0	3	4.4	34	50.0	2	2.9	1	1.5
	30인 미만	90	38	42.2	17	18.9	0	0.0	2	2.2	27	30.0	10	11.1	0	0.0
	100인 미만	90	39	43.3	11	12.2	1	1.1	6	6.7	28	31.1	9	10.0	1	1.1
	300인 미만	40	23	57.5	3	7.5	0	0.0	3	7.5	12	30.0	1	2.5	0	0.0
	300인 이상	15	5	33.3	2	13.3	0	0.0	2	13.3	4	26.7	1	6.7	2	13.3
	모름/무응답	1	0	0.0	0	0.0	0	0.0	0	0.0	1	100.0	0	0.0	0	0.0
2009년 매출 규모별	10억 미만	63	18	28.6	10	15.9	0	0.0	2	3.2	28	44.4	4	6.3	1	1.6
	50억 미만	79	33	41.8	9	11.4	0	0.0	4	5.1	28	35.4	7	8.9	0	0.0
	100억 미만	51	22	43.1	6	11.8	1	2.0	4	7.8	15	29.4	4	7.8	0	0.0
	1000억 미만	91	44	48.4	13	14.3	0	0.0	4	4.4	29	31.9	7	7.7	1	1.1
	1000억 이상	16	8	50.0	1	6.3	0	0.0	2	12.5	3	18.8	1	6.3	2	12.5
	모름/무응답	4	1	25.0	1	25.0	0	0.0	0	0.0	3	75.0	0	0.0	0	0.0
생산 분야 _대분류	기간산업	121	54	44.6	14	11.6	0	0.0	10	8.3	38	31.4	9	7.4	1	0.8
	지식기반 제조업	162	60	37.0	23	14.2	0	0.0	6	3.7	61	37.7	14	8.6	3	1.9
	지식기반 서비스업	15	8	53.3	3	20.0	1	6.7	0	0.0	4	26.7	0	0.0	0	0.0
	기타	6	4	66.7	0	0.0	0	0.0	0	0.0	3	50.0	0	0.0	0	0.0
대표적인 사업 (대분류)	지역산업 기반구축사업 (인프라사업)	65	32	49.2	11	16.9	1	1.5	0	0.0	22	33.8	2	3.1	0	0.0
	지역산업 기술개발사업	165	67	40.6	23	13.9	0	0.0	13	7.9	50	30.3	15	9.1	4	2.4
	기업지원 서비스사업	74	27	36.5	6	8.1	0	0.0	3	4.1	34	45.9	6	8.1	0	0.0

③ 매출의 증가

○ <표 4-20>는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 참여로 매출이 증가하였는지에 대한 질문 결과로 응답업체의 64.0%가 성과가 있었다고 응답하였음

- 사업유형별로 보면 기업지원서비스업이 성과가 있었다는 응답비율이 70.0%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지역산업기반구축사업 69.0% 그리고 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 58.8%의 순으로 나타남

<표 4-20> 매출의 증대-해당유무

(단위: 명, %)

		사례수	성과있었음		성과없었음		모름/무응답	
전체		383	245	64.0	132	34.5	6	1.6
2009년 종업원 규모별	10인 미만	82	56	68.3	25	30.5	1	1.2
	30인 미만	117	79	67.5	37	31.6	1	0.9
	100인 미만	111	67	60.4	42	37.8	2	1.8
	300인 미만	52	33	63.5	17	32.7	2	3.8
	300인 이상	20	9	45.0	11	55.0	0	0.0
	모름/무응답	1	1	100.0	0	0.0	0	0.0
2009년 매출 규모별	10억 미만	76	51	67.1	25	32.9	0	0.0
	50억 미만	102	72	70.6	30	29.4	0	0.0
	100억 미만	62	42	67.7	19	30.6	1	1.6
	1000억 미만	117	68	58.1	46	39.3	3	2.6
	1000억 이상	20	10	50.0	10	50.0	0	0.0
	모름/무응답	6	2	33.3	2	33.3	2	33.3
생산분야_ 대분류	기간산업	158	102	64.6	52	32.9	4	2.5
	지식기반 제조업	197	125	63.5	70	35.5	2	1.0
	지식기반 서비스업	18	13	72.2	5	27.8	0	0.0
	기타	10	5	50.0	5	50.0	0	0.0
대표적인 사업 (대분류)	지역산업기반구축사업 (인프라사업)	84	58	69.0	24	28.6	2	2.4
	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	199	117	58.8	79	39.7	3	1.5
	기업지원서비스사업	100	70	70.0	29	29.0	1	1.0

○ <표 4-21>는 매출이 증가하였다고 응답한 업체를 대상으로 이러한 성과가 고용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질문한 결과임

- 표에서 보듯이 신규채용이 생산성 증가가 47.8%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산규채용 35.5%, 그리고 경력직 채용 12.7%의 순으로 나타남

<표 4-21> 매출의 증대-고용에 미친 영향

(단위: 명, %)

		사례수	신규채용		경력채용		감원		배치조정		생산성증가		교육훈련		모름/무응답	
전체		245	87	35.5	31	12.7	1	0.4	6	2.4	117	47.8	11	4.5	2	0.8
2009년 종업원 규모별	10인 미만	56	15	26.8	7	12.5	0	0.0	0	0.0	31	55.4	3	5.4	0	0.0
	30인 미만	79	25	31.6	15	19.0	1	1.3	0	0.0	38	48.1	2	2.5	1	1.3
	100인 미만	67	32	47.8	5	7.5	0	0.0	3	4.5	29	43.3	2	3.0	0	0.0
	300인 미만	33	13	39.4	2	6.1	0	0.0	3	9.1	14	42.4	3	9.1	0	0.0
	300인 이상	9	2	22.2	2	22.2	0	0.0	0	0.0	4	44.4	1	11.1	1	11.1
	모름/무응답	1	0	0.0	0	0.0	0	0.0	0	0.0	1	100.0	0	0.0	0	0.0
2009년 매출 규모별	10억 미만	51	14	27.5	7	13.7	0	0.0	0	0.0	27	52.9	3	5.9	0	0.0
	50억 미만	72	25	34.7	12	16.7	1	1.4	0	0.0	34	47.2	1	1.4	1	1.4
	100억 미만	42	16	38.1	3	7.1	0	0.0	2	4.8	22	52.4	0	0.0	0	0.0
	1000억 미만	68	29	42.6	9	13.2	0	0.0	3	4.4	27	39.7	6	8.8	0	0.0
	1000억 이상	10	3	30.0	0	0.0	0	0.0	1	10.0	5	50.0	1	10.0	1	10.0
	모름/무응답	2	0	0.0	0	0.0	0	0.0	0	0.0	2	100.0	0	0.0	0	0.0
생산분야_대분류	기간산업	102	36	35.3	10	9.8	0	0.0	5	4.9	51	50.0	4	3.9	0	0.0
	지식기반 제조업	125	43	34.4	18	14.4	1	0.8	1	0.8	59	47.2	6	4.8	2	1.6
	지식기반 서비스업	13	6	46.2	2	15.4	0	0.0	0	0.0	4	30.8	1	7.7	0	0.0
	기타	5	2	40.0	1	20.0	0	0.0	0	0.0	3	60.0	0	0.0	0	0.0
대표적인 사업 (대분류)	지역산업 기반구축사업 (인프라사업)	58	21	36.2	7	12.1	0	0.0	1	1.7	30	51.7	1	1.7	0	0.0
	지역산업 기술개발사업	117	49	41.9	14	12.0	0	0.0	5	4.3	46	39.3	7	6.0	2	1.7
	기업지원 서비스사업	70	17	24.3	10	14.3	1	1.4	0	0.0	41	58.6	3	4.3	0	0.0

⑤ 창업

○ <표 4-22>는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 참여로 창업성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 결과로 성과가 있었다고 응답한 업체의 비율이 4.2%(16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창업성과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신규채용이 50.0%로 가장 높음

<표 4-22> 창업-해당유무

(단위: 명, %)

		사례수	성과있었음		성과없었음		모름/무응답	
전체		383	16	4.2	359	93.7	8	2.1
2009년 종업원 규모별	10인 미만	82	7	8.5	73	89.0	2	2.4
	30인 미만	117	6	5.1	110	94.0	1	0.9
	100인 미만	111	0	0.0	107	96.4	4	3.6
	300인 미만	52	3	5.8	48	92.3	1	1.9
	300인 이상	20	0	0.0	20	100.0	0	0.0
	모름/무응답	1	0	0.0	1	100.0	0	0.0
생산분야 _대분류	기간산업	158	1	0.6	154	97.5	3	1.9
	지식기반 제조업	197	15	7.6	177	89.8	5	2.5
	지식기반 서비스업	18	0	0.0	18	100.0	0	0.0
	기타	10	0	0.0	10	100.0	0	0.0
대표적인 사업 (대분류)	지역산업기반구축사업 (인프라사업)	84	3	3.6	80	95.2	1	1.2
	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	199	6	3.0	188	94.5	5	2.5
	기업지원서비스사업	100	7	7.0	91	91.0	2	2.0

<표 4-23> 창업-고용에 미친 영향

(단위: 명, %)

		사례수	신규채용		경력채용		배치조정		생산성증가		교육훈련	
[전체]		16	8	50.0	2	12.5	1	6.3	4	25.0	1	6.3
2009년 종업원 규모별	10인 미만	7	4	57.1	1	14.3	0	0.0	1	14.3	1	14.3
	30인 미만	6	2	33.3	1	16.7	1	16.7	2	33.3	0	0.0
	300인 미만	3	2	66.7	0	0.0	0	0.0	1	33.3	0	0.0
2009년 매출 규모별	10억 미만	8	4	50.0	2	25.0	0	0.0	1	12.5	1	12.5
	50억 미만	5	2	40.0	0	0.0	1	20.0	2	40.0	0	0.0
	1000억 미만	3	2	66.7	0	0.0	0	0.0	1	33.3	0	0.0
생산분야_ 대분류	기간산업	1	1	100.0	0	0.0	0	0.0	0	0.0	0	0.0
	지식기반 제조업	15	7	46.7	2	13.3	1	6.7	4	26.7	1	6.7
대표적인 사업 (대분류)	지역산업기반구축사업 (인프라사업)	3	1	33.3	1	33.3	0	0.0	1	33.3	0	0.0
	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	6	4	66.7	0	0.0	0	0.0	2	33.3	0	0.0
	기업지원서비스사업	7	3	42.9	1	14.3	1	14.3	1	14.3	1	14.3

2) 인력양성 사업의 성과

○ 앞에서는 인력양성 사업을 제외한 세 사업의 참여로 인한 성과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였는데 여기서는 인력양성 사업참여의 성과를 평가하고자 함

○ <표 4-24>는 평가에 앞서 인력양성사업의 참여분야를 보여주고 있는데 전체

응답업체(91개) 중 산학연 연계 One-Stop현장인력 재교육이 35.2%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지역 내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기업에서 위탁교육 28.6%, 지역간 유사업종간 연계강화 프로그램 참여 19.8%의 순으로 나타남

<표 4-24> 인력양성사업 분야 참여구분

(단위: 명, %)

		사례수	해외 및 타 지역 우수연구자 초빙(A형)		지역 내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기업에서 위탁교육 (B형)		산학연 연계 One-Stop 현장인력 재교육 (C형)		근로자를 대상으로 대학원 통합과정에 참여(D형)		지역간, 유사업종간 연계 강화 프로그램에의 참여(E형)	
전체		91	11	12.1	26	28.6	32	35.2	4	4.4	18	19.8
주력 생산분야 -대분류	기간산업	28	4	14.3	6	21.4	7	25.0	2	7.1	9	32.1
	지식기반제조업	48	4	8.3	14	29.2	20	41.7	2	4.2	8	16.7
	지식기반서비스업	13	3	23.1	5	38.5	4	30.8	0	0.0	1	7.7
	기타	2	0	0.0	1	50.0	1	50.0	0	0.0	0	0.0
지역전략 산업 인력양성 사업 분야 참여구분	해외 및 타 지역 우수연구자초빙(A형)	11	11	100.0	0	0.0	0	0.0	0	0.0	0	0.0
	지역 내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기업에서 위탁교육(B형)	26	0	0.0	26	100.0	0	0.0	0	0.0	0	0.0
	산학연 연계 One-Stop 현장인력 재교육(C형)	32	0	0.0	0	0.0	32	100.0	0	0.0	0	0.0
	근로자를 대상으로 대학원 통합과정에 참여(D형)	4	0	0.0	0	0.0	0	0.0	4	100.0	0	0.0
	지역간, 유사업종간 연계 강화 프로그램에의 참여(E형)	18	0	0.0	0	0.0	0	0.0	0	0.0	18	100.0

○ <표 4-25>는 지역전략산업 인력양성 사업을 통해 최근 5년간 우수연구자와 지역 내 대학생 등을 신규 채용한 인력을 질문한 결과로 채용을 했다고 응답한 업체는 37개사로 나타났으며 대부분(91.9%)이 5명 미만이라고 응답함

<표 4-25> 신규채용인력

(단위: 명, %)

		사례수	5명 미만		5~10명	
전체		37	34	91.9	3	8.1
주력생산분야-대분류	기간산업	10	9	90.0	1	10.0
	지식기반제조업	18	17	94.4	1	5.6
	지식기반서비스업	8	7	87.5	1	12.5
	기타	1	1	100.0	0	0.0
지역전략산업 인력양성사업 분야 참여구분	해외 및 타 지역 우수연구자 초빙(A형)	11	10	90.9	1	9.1
	지역 내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기업에서 위탁교육(B형)	26	24	92.3	2	7.7

○ <표 4-26>은 지역전략산업 인력양성 사업을 통해 최근 5년간 교육시킨 재직자수는 몇 명인지에 대한 응답결과로 54개 업체가 응답하였으며 훈련생 수가 10명 미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77.8%를 차지

<표 4-26> 재직자 훈련 인원수

(단위: 명, %)

		사례수	10명 미만		10~29명		30~59명	
전체		54	42	7.8	8	14.8	4	7.4
주력 생산분야-대분류	기간산업	18	15	83.3	3	16.7	0	0.0
	지식기반제조업	30	24	80.0	3	10.0	3	10.0
	지식기반서비스업	5	2	40.0	2	40.0	1	20.0
	기타	1	1	100.0	0	0.0	0	0.0
지역전략산업 인력양성 사업 분야 참여구분	산학연 연계 One-Stop 현장인력 재교육(C형)	32	23	71.9	5	15.6	4	12.5
	근로자를 대상으로 대학원 통합과정에 참여(D형)	4	4	100.0	0	0.0	0	0.0
	지역간, 유사업종간 연계 강화 프로그램에의 참여(E형)	18	15	83.3	3	16.7	0	0.0

○ <표 4-27>는 지역전략산업 인력양성 사업을 통해 교육된 인력의 질, 즉 직무능력이 어느 정도 향상되었는지에 대한 질문결과로 '높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50.5%, 보통 30.8% 그리고 '매우 높음' 9.9%의 순으로 조사되어 5점척도 기준으로 3.59점으로 나타남

<표 4-27> 직무능력 향상도

		사례수	매우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높음		모름/무응답		평균(점)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전체]		91	4	4.4	3	3.3	28	30.8	46	50.5	9	9.9	1	1.1	3.59
주력 생산 분야-대분류	기간산업	28	2	7.1	1	3.6	14	50.0	11	39.3	0	0.0	0	0.0	3.21
	지식기반제조업	48	2	4.2	2	4.2	11	22.9	26	54.2	6	12.5	1	2.1	3.68
	지식기반서비스업	13	0	0.0	0	0.0	3	23.1	7	53.8	3	23.1	0	0.0	4.00
	기타	2	0	0.0	0	0.0	0	0.0	2	100.0	0	0.0	0	0.0	4.00
지역 전략 산업 인력 양성 사업 분야 참여 구분	해외 및 타지역 우수 연구자초빙(A형)	11	0	0.0	0	0.0	2	18.2	6	54.5	2	18.2	1	9.1	4.00
	지역 내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기업에서 위탁교육(B형)	26	2	7.7	1	3.8	9	34.6	14	53.8	0	0.0	0	0.0	3.35
	산학연 연계 One-Stop 현장인력 재교육(C형)	32	0	0.0	1	3.1	8	25.0	16	50.0	7	21.9	0	0.0	3.91
	근로자를 대상으로 대학원 통합과정에 참여(D형)	4	0	0.0	0	0.0	1	25.0	3	75.0	0	0.0	0	0.0	3.75
	지역간,유사업종간 연계강화프로그램에의 참여(E형)	18	2	11.1	1	5.6	8	44.4	7	38.9	0	0.0	0	0.0	3.11

- 참여유형별로 보면 해외 및 타지역 우수연구자 초빙(A형)이 4.0점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산학연 연계 One-Stop현장인력 재교육(C형) 3.91점의 순으로 나타남

○ 한편, <표 4-28>는 성과평가는 아니지만 지역전략산업 인력양성을 통해 외부로부터 충분한 신규인력을 공급받았는지에 대한 질문결과로 응답업체의 39.6%가 보통이라고 응답하였고, 만족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25.3% 그리고 미흡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23.1%로 나타남(5점척도 기준으로 2.91점)

- 이러한 결과는 사업 수행과정에서 신규인력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표 4-28> 충분한 신규인력 공급정도

		사례수	매우미흡		미흡		보통		만족		매우만족		모름/무응답		평균(점)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전체]		91	7	7.7	21	23.1	36	39.6	23	25.3	2	2.2	2	2.2	2.91
주력생산분야-대분류	기간산업	28	4	14.3	7	25.0	11	39.3	5	17.9	0	0.0	1	3.6	2.63
	지식기반제조업	48	3	6.3	12	25.0	17	35.4	14	29.2	1	2.1	1	2.1	2.96
	지식기반서비스업	13	0	0.0	1	7.7	7	53.8	4	30.8	1	7.7	0	0.0	3.38
	기타	2	0	0.0	1	50.0	1	50.0	0	0.0	0	0.0	0	0.0	2.50
지역전략산업인력양성사업분야참여구분	해외 및 타지역우수연구자초빙(A형)	11	0	0.0	1	9.1	5	45.5	4	36.4	0	0.0	1	9.1	3.30
	지역 내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기업에서위탁교육(B형)	26	1	3.8	8	30.8	10	38.5	6	23.1	0	0.0	1	3.8	2.84
	산학연연계 One-Stop현장인력 재교육(C형)	32	2	6.3	5	15.6	14	43.8	9	28.1	2	6.3	0	0.0	3.13
	근로자를 대상으로 대학원통합과정에 참여(D형)	4	0	0.0	3	75.0	0	0.0	1	25.0	0	0.0	0	0.0	2.50
	지역간,유사업종간 연계강화프로그램에의 참여(E형)	18	4	22.2	4	22.2	7	38.9	3	16.7	0	0.0	0	0.0	2.50

○ <표 4-29>은 지역전략산업 인력양성의 전반적인 성과에 대한 응답결과로 만족 58.2%, 보통 24.2%, 매우 만족 7.7%로 나타나 전반적인 성과평가가 5점척도로 3.63점을 기록

<표 4-29> 인력양성사업의 전반적인 성과정도

		사례수	매우미흡		미흡		보통		만족		매우만족		모름/무응답		평균(점)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전체]		91	2	2.2	6	6.6	22	24.2	53	58.2	7	7.7	1	1.1	3.63
주력생산분야-대분류	기간산업	28	1	3.6	2	7.1	6	21.4	17	60.7	2	7.1	0	0.0	3.61
	지식기반제조업	48	1	2.1	3	6.3	14	29.2	25	52.1	4	8.3	1	2.1	3.60
	지식기반서비스업	13	0	0.0	1	7.7	2	15.4	9	69.2	1	7.7	0	0.0	3.77
	기타	2	0	0.0	0	0.0	0	0.0	2	100.0	0	0.0	0	0.0	4.00
지역전략산업인력양성사업분야참여구분	해외 및 타지역우수 연구자초빙(A형)	11	0	0.0	0	0.0	1	9.1	6	54.5	3	27.3	1	9.1	4.20
	지역 내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기업에서위탁교육(B형)	26	1	3.8	3	11.5	9	34.6	13	50.0	0	0.0	0	0.0	3.31
	산학연연계 One-Stop현장인력 재교육(C형)	32	0	0.0	0	0.0	8	25.0	20	62.5	4	12.5	0	0.0	3.88
	근로자를 대상으로 대학원통합과정에 참여(D형)	4	0	0.0	1	25.0	1	25.0	2	50.0	0	0.0	0	0.0	3.25
	지역간,유사업종간 연계강화프로그램에의 참여(E형)	18	1	5.6	2	11.1	3	16.7	12	66.7	0	0.0	0	0.0	3.44

○ <표 4-30>은 향후 인력양성 계획 방식에 대한 질문결과로 응답업체의 60.4%가 현행과 같이 지역전략산업 인력양성사업에 참여할 계획이다라고 응답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사내 인력양성사업 별도추진 19.8%의 순으로 나타남

<표 4-30> 향후 인력양성계획 방식

		사례수	지역전략산업 인력양성사업에 참여		다른 국책 인력양성 사업에 참여		사내 인력양성사업 별도 추진		외부전문기관에 위탁교육 추진		모름/무응답	
[전체]		91	55	60.4	7	7.7	18	19.8	9	9.9	2	2.2
주력생산분야-대분류	기간산업	28	15	53.6	2	7.1	6	21.4	5	17.9	0	0.0
	지식기반제조업	48	27	56.3	4	8.3	12	25.0	4	8.3	1	2.1
	지식기반서비스업	13	11	84.6	1	7.7	0	0.0	0	0.0	1	7.7
	기타	2	2	100.0	0	0.0	0	0.0	0	0.0	0	0.0
지역전략산업인력양성사업분야참여구분	해외 및 타지역우수 연구자초빙(A형)	11	8	72.7	0	0.0	1	9.1	1	9.1	1	9.1
	지역 내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기업에서위탁교육(B형)	26	11	42.3	3	11.5	9	34.6	2	7.7	1	3.8
	산학연연계 One-Stop현장인력 재교육(C형)	32	20	62.5	2	6.3	6	18.8	4	12.5	0	0.0
	근로자를 대상으로 대학원통합과정에 참여(D형)	4	4	100.0	0	0.0	0	0.0	0	0.0	0	0.0
	지역간,유사업종간 연계강화프로그램에의 참여(E형)	18	12	66.7	2	11.1	2	11.1	2	11.1	0	0.0

⑵ 성과관리 이행도

○ <표 4-31>은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의 성과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질문한 결과로 다소 그렇다는 의견이 54.2%, 그저 그렇다 24.1%, 매우 그렇다 18.8%의 순으로 나타나 5점척도 기준으로 평균 3.89점을 기록

– 이를 사업유형별로 보면 지역산업기반 구축사업이 4.01점으로 가장 높았고 상대적으로 지역인력양성사업과 기업지원서비스 사업이 각각 3.75점과 3.78점으로 낮은 점수를 기록

<표 4-31> 지역전략산업의 성과관리 이행도

(단위: 명, %)

		전혀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다소 그렇다		매우 그렇다		모름/무응답		평균(점)
전체		2	0.4	10	2.1	114	24.1	257	54.2	89	18.8	2	0.4	3.89
생산분야	지식기반 제조업	1	0.4	3	1.2	53	21.6	136	55.5	50	20.4	2	0.8	3.95
	지식기반 서비스업	0	0.0	2	6.5	8	25.8	19	61.3	2	6.5	0	0.0	3.68
	기간산업 및 기타	1	0.5	5	2.5	53	26.8	102	51.5	37	18.7	0	0.0	3.85
참여한 대표적 사업	지역산업 기반구축사업	0	0.0	1	1.2	18	21.4	44	52.4	21	25.0	0	0.0	4.01
	지역산업 기술개발사업	1	0.5	4	2.0	39	19.6	112	56.3	43	21.6	0	0.0	3.96
	기업지원 서비스 사업	1	1.0	1	1.0	31	31.0	51	51.0	14	14.0	2	2.0	3.78
	지역산업 인력양성사업	0	0.0	4	4.4	26	28.6	50	54.9	11	12.1	0	0.0	3.75
2009년 종업원 규모별	10인 미만	1	0.9	2	1.8	27	24.3	58	52.3	22	19.8	1	0.9	3.89
	30인 미만	0	0.0	2	1.5	29	21.2	74	54.0	32	23.4	0	0.0	3.99
	100인 미만	0	0.0	2	1.5	29	21.8	80	60.2	21	15.8	1	0.8	3.91
	300인 미만	0	0.0	2	3.2	17	27.4	33	53.2	10	16.1	0	0.0	3.82
	300인 이상	1	4.0	1	4.0	8	32.0	12	48.0	3	12.0	0	0.0	3.60
	모름/무응답	0	0.0	1	16.7	4	66.7	0	0.0	1	16.7	0	0.0	3.17

⑶ 성과관리에서의 고용영향 고려여부

○ <표 4-32>는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의 성과관리에서 고용효과(인적자원개발, 인력양성, 고용유지 및 창출)를 고려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응답결과로 그렇다는 의견이 59.5%, 잘 모르겠다 34.8%, 아니다가 5.7%로 조사됨

– 사업유형별로 보면 상대적으로 지역산업기반 구축사업이 고용영향을 고려하고 있다는 응답비율이 64.3%로 높았으며, 기업지원서비스 사업은 그렇다는 의견

이 54.0%로 상대적으로 낮음

<표 4-32> 지역전략산업 성과관리의 고용효과 고려여부

(단위: 명, %)

		사례수	그렇다		아니다		잘 모르겠다	
전체		474	282	59.5	27	5.7	165	34.8
생산 분야	지식기반 제조업	245	145	59.2	15	6.1	85	34.7
	지식기반 서비스업	31	16	51.6	2	6.5	13	41.9
	기간산업 및 기타	198	121	61.1	10	5.1	67	33.8
참여한 대표적 사업	지역산업기반구축사업	84	54	64.3	7	8.3	23	27.4
	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	199	119	59.8	11	5.5	69	34.7
	기업지원서비스사업	100	54	54.0	6	6.0	40	40.0
	지역산업인력양성사업	91	55	60.4	3	3.3	33	36.3
2009년 종업원 규모별	10인 미만	111	66	59.5	9	8.1	36	32.4
	30인 미만	137	84	61.3	6	4.4	47	34.3
	100인 미만	133	76	57.1	6	4.5	51	38.3
	300인 미만	62	37	59.7	4	6.5	21	33.9
	300인 이상	25	17	68.0	0	0.0	8	32.0
	모름/무응답	6	2	33.3	2	33.3	2	33.3
2009년 매출 규모별	10억 미만	106	68	64.2	7	6.6	31	29.2
	50억 미만	127	72	56.7	8	6.3	47	37.0
	100억 미만	71	44	62.0	3	4.2	24	33.8
	1000억 미만	134	78	58.2	8	6.0	48	35.8
	1000억 이상	28	16	57.1	0	0.0	12	42.9
	모름/무응답	8	4	50.0	1	12.5	3	37.5

⑷ 사후관리 및 책임관리체계의 이행도

○ <표 4-33>은 는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의 사후관리체계가 효과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응답결과로 다소 그렇다 54.2%, 그저 그렇다 27.4%, 매우 그렇다 15.0%의 순으로 나타남(5점척도 기준으로 3.814점을 기록)

– 사업유형별로 지역산업기반 구축사업의 평점이 3.96점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지역산업기술개발 사업 3.88점, 기업지원서비스 사업 3.70점, 지역인력양성 사업 3.62점의 순으로 나타남

<표 4-33> 지역전략산업의 사후관리 및 책임관리체계 이행도

(단위: 명, %)

		전혀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다소 그렇다		매우 그렇다		모름/ 무응답		평균 (점)
전체		3	0.6	11	2.3	130	27.4	257	54.2	71	15.0	2	0.4	3.81
생산 분야	지식기반제조업	2	0.8	4	1.6	63	25.7	133	54.3	41	16.7	2	0.8	3.85
	지식기반서비스업	0	0.0	1	3.2	8	25.8	19	61.3	3	9.7	0	0.0	3.77
	기간산업및기타	1	0.5	6	3.0	59	29.8	105	53.0	27	13.6	0	0.0	3.76
참여한 대표적 사업	지역산업 기반구축사업	0	0.0	1	1.2	18	21.4	48	57.1	17	20.2	0	0.0	3.96
	지역산업 기술개발사업	0	0.0	2	1.0	51	25.6	114	57.3	32	16.1	0	0.0	3.88
	기업지원 서비스 사업	1	1.0	2	2.0	35	35.0	47	47.0	13	13.0	2	2.0	3.70
	지역산업 인력양성사업	2	2.2	6	6.6	26	28.6	48	52.7	9	9.9	0	0.0	3.62
2009년 종업원 규모별	10인 미만	2	1.8	3	2.7	35	31.5	49	44.1	21	18.9	1	0.9	3.76
	30인 미만	0	0.0	3	2.2	30	21.9	81	59.1	23	16.8	0	0.0	3.91
	100인 미만	0	0.0	2	1.5	37	27.8	77	57.9	16	12.0	1	0.8	3.81
	300인 미만	0	0.0	2	3.2	18	29.0	33	53.2	9	14.5	0	0.0	3.79
	300인 이상	0	0.0	0	0.0	9	36.0	15	60.0	1	4.0	0	0.0	3.68
	모름/무응답	1	16.7	1	16.7	1	16.7	2	33.3	1	16.7	0	0.0	3.17

⑸ 사후관리 및 책임관리체계의 고용영향 고려여부

○ <표 4-34>은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의 사후관리 및 책임관리체계에서 고용효과(인적자원개발, 인력양성, 고용유지 및 창출)제고를 고려하고 있는지에 대한 응답결과로 그렇다는 의견이 57.0%, 잘 모르겠다 35.4%, 아니다가 7.6%로 조사됨

- 사업유형별로 보면 상대적으로 지역산업기반 구축사업이 고용영향을 고려하고 있다는 응답비율이 63.1%로 높았으며, 나머지 세 사업은 55% 전후로 비슷한 비중을 보임

<표 4-34> 지역전략 사후관리 및 책임관리체계의 고용효과 고려여부

(단위: 명, %)

		사례수	그렇다		아니다		잘 모르겠다	
전체		474	270	57.0	36	7.6	168	35.4
생산 분야	지식기반제조업	245	140	57.1	18	7.3	87	35.5
	지식기반서비스업	31	14	45.2	3	9.7	14	45.2
	기간산업 및 기타	198	116	58.6	15	7.6	67	33.8
참여한 대표적 사업	지역산업기반구축사업	84	53	63.1	10	11.9	21	25.0
	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	199	111	55.8	12	6.0	76	38.2
	기업지원서비스사업	100	56	56.0	6	6.0	38	38.0
	지역산업인력양성사업	91	50	54.9	8	8.8	33	36.3
2009년 종업원 규모별	10인 미만	111	64	57.7	9	8.1	38	34.2
	30인 미만	137	83	60.6	10	7.3	44	32.1
	100인 미만	133	74	55.6	7	5.3	52	39.1
	300인 미만	62	32	51.6	8	12.9	22	35.5
	300인 이상	25	16	64.0	0	0.0	9	36.0
	모름/무응답	6	1	16.7	2	33.3	3	50.0
2009년 매출 규모별	10억 미만	106	64	60.4	6	5.7	36	34.0
	50억 미만	127	76	59.8	11	8.7	40	31.5
	100억 미만	71	40	56.3	6	8.5	25	35.2
	1000억 미만	134	73	54.5	10	7.5	51	38.1
	1000억 이상	28	13	46.4	2	7.1	13	46.4
	모름/무응답	8	4	50.0	1	12.5	3	37.5

가. 고용영향에 대한 종합의견

⑴ 사업의 성과에 대한 종합 평가

○ <표 4-35>는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이 전반적으로 지역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를 질문한 결과로 다소 그렇다 54.2%, 매우 그렇다 27.2% 등 전체 응답자의 81.4%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여 5점척도 기준으로 4.07점으로 나타남

- 사업유형별로 보면 지역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대해 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의 평점이 4.26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지역산업기반 구축사업 4.07점, 기업지원서비스 사업 3.91점, 지역산업인력양성 사업 3.81점의 순으로 나타남

<표 4-35> 사업의 종합 평가 - 지역산업의 경쟁력 제고

(단위: 명,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다소 그렇다		매우 그렇다		모름/무응답		평균(점)
전체		2	0.4	9	1.9	74	15.6	257	54.2	129	27.2	3	0.6	4.07
생산분야	지식기반 제조업	1	0.4	5	2.0	29	11.8	135	55.1	72	29.4	3	1.2	4.12
	지식기반 서비스업	0	0.0	1	3.2	6	19.4	18	58.1	6	19.4	0	0.0	3.94
	기간산업 및 기타	1	0.5	3	1.5	39	19.7	104	52.5	51	25.8	0	0.0	4.02
참여한 대표적 사업	지역산업기반 구축사업	0	0.0	0	0.0	17	20.2	44	52.4	23	27.4	0	0.0	4.07
	지역산업기술 개발사업	0	0.0	1	0.5	17	8.5	110	55.3	70	35.2	1	0.5	4.26
	기업지원 서비스 사업	1	1.0	4	4.0	19	19.0	53	53.0	21	21.0	2	2.0	3.91
	지역산업인력 양성사업	1	1.1	4	4.4	21	23.1	50	54.9	15	16.5	0	0.0	3.81
2009년 종업원 규모별	10인 미만	1	0.9	1	0.9	17	15.3	59	53.2	32	28.8	1	0.9	4.09
	30인 미만	1	0.7	1	0.7	26	19.0	64	46.7	44	32.1	1	0.7	4.10
	100인 미만	0	0.0	3	2.3	17	12.8	84	63.2	28	21.1	1	0.8	4.04
	300인 미만	0	0.0	1	1.6	7	11.3	36	58.1	18	29.0	0	0.0	4.15
	300인 이상	0	0.0	1	4.0	6	24.0	12	48.0	6	24.0	0	0.0	3.92
	모름/무응답	0	0.0	2	33.3	1	16.7	2	33.3	1	16.7	0	0.0	3.33

○ <표 4-36>는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이 전반적으로 지역의 일자리 창출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를 질문한 결과로 다소 그렇다 52.3%, 그저 그렇다 25.3%, 매우 그렇다 17.1% 등의 순으로 나타나 5점척도 기준으로 3.82점을 기록하여 상대적으로 지역산업의 경쟁력 제고효과 4.07점에 비해 다소 낮음

- 사업유형별로 보면 평점간의 차이가 별로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표 4-37>는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의 참여 후 고용창출이 얼마나 증가하였는지를 질문한 결과로 5% 미만이 30.4%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5~10% 고용창출이 24.7%, 고용창출 효과가 거의 없었다가 22.6% 순으로 조사됨

<표 4-36> 사업의 종합 평가 - 일자리 창출 기여도

(단위: 명,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다소 그렇다		매우 그렇다		모름/무응답		평균(점)
전체		4	0.8	18	3.8	120	25.3	248	52.3	81	17.1	3	0.6	3.82
생산분야	지식기반 제조업	2	0.8	7	2.9	58	23.7	130	53.1	45	18.4	3	1.2	3.86
	지식기반 서비스업	0	0.0	1	3.2	7	22.6	17	54.8	6	19.4	0	0.0	3.90
	기간산업 및 기타	2	1.0	10	5.1	55	27.8	101	51.0	30	15.2	0	0.0	3.74
참여한 대표적 사업	지역산업 기반구축사업	0	0.0	1	1.2	23	27.4	45	53.6	15	17.9	0	0.0	3.88
	지역산업 기술개발사업	0	0.0	9	4.5	50	25.1	103	51.8	36	18.1	1	0.5	3.84
	기업지원 서비스 사업	1	1.0	4	4.0	29	29.0	49	49.0	15	15.0	2	2.0	3.74
	지역산업 인력양성사업	3	3.3	4	4.4	18	19.8	51	56.0	15	16.5	0	0.0	3.78
2009년 종업원 규모별	10인 미만	2	1.8	4	3.6	27	24.3	50	45.0	27	24.3	1	0.9	3.87
	30인 미만	1	0.7	5	3.6	31	22.6	69	50.4	30	21.9	1	0.7	3.90
	100인 미만	0	0.0	5	3.8	35	26.3	79	59.4	13	9.8	1	0.8	3.76
	300인 미만	0	0.0	2	3.2	18	29.0	33	53.2	9	14.5	0	0.0	3.79
	300인 이상	0	0.0	1	4.0	8	32.0	14	56.0	2	8.0	0	0.0	3.68
	모름/무응답	1	16.7	1	16.7	1	16.7	3	50.0	0	0.0	0	0.0	3.00

<표 4-37> 고용창출 증가수준

(단위: 명, %)

		사례수	고용창출 효과가 거의 없다		5% 미만 고용이 증가하였다		5~10% 미만 고용이 증가하였다		10~20% 미만 고용이 증가하였다		20~30% 미만 고용이 증가하였다		30% 이상 고용이 증가하였다		모름/무응답	
전체		474	107	22.6	144	30.4	117	24.7	51	10.8	25	5.3	27	5.7	3	0.6
생산분야	지식기반 제조업	245	50	20.4	67	27.3	50	20.4	38	15.5	16	6.5	21	8.6	3	1.2
	지식기반 서비스업	31	5	16.1	7	22.6	17	54.8	1	3.2	1	3.2	0	0.0	0	0.0
	기간산업 및 기타	198	52	26.3	70	35.4	50	25.3	12	6.1	8	4.0	6	3.0	0	0.0
참여한 대표적 사업	지역산업 기반구축사업	84	16	19.0	27	32.1	28	33.3	3	3.6	3	3.6	6	7.1	1	1.2
	지역산업 기술개발사업	199	40	20.1	62	31.2	49	24.6	28	14.1	11	5.5	8	4.0	1	0.5
	기업지원 서비스사업	100	28	28.0	30	30.0	19	19.0	12	12.0	4	4.0	7	7.0	0	0.0
	지역산업 인력양성사업	91	23	25.3	25	27.5	21	23.1	8	8.8	7	7.7	6	6.6	1	1.1
2009년 종업원 규모별	10인 미만	111	26	23.4	18	16.2	21	18.9	20	18.0	9	8.1	17	15.3	0	0.0
	30인 미만	137	33	24.1	39	28.5	33	24.1	17	12.4	10	7.3	3	2.2	2	1.5
	100인 미만	133	25	18.8	49	36.8	38	28.6	10	7.5	6	4.5	5	3.8	0	0.0
	300인 미만	62	14	22.6	25	40.3	19	30.6	3	4.8	0	0.0	1	1.6	0	0.0
	300인 이상	25	6	24.0	12	48.0	5	20.0	1	4.0	0	0.0	0	0.0	1	4.0
	모름/무응답	6	3	50.0	1	16.7	1	16.7	0	0.0	0	0.0	1	16.7	0	0.0
2009년 매출 규모별	10억 미만	106	29	27.4	17	16.0	22	20.8	17	16.0	7	6.6	14	13.2	0	0.0
	50억 미만	127	27	21.3	32	25.2	33	26.0	20	15.7	7	5.5	7	5.5	1	0.8
	100억 미만	71	12	16.9	29	40.8	16	22.5	6	8.5	5	7.0	3	4.2	0	0.0
	1000억 미만	134	29	21.6	51	38.1	39	29.1	8	6.0	4	3.0	3	2.2	0	0.0
	1000억 이상	28	8	28.6	13	46.4	6	21.4	0	0.0	0	0.0	0	0.0	1	3.6
	모름/무응답	8	2	25.0	2	25.0	1	12.5	0	0.0	2	25.0	0	0.0	1	12.5

⑵ 사업참여 후 고용 관련 애로사항

○ <표 4-38>는 인력양성 사업을 제외한 세 사업을 대상으로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에 참여 한 후 고용과 관련하여 가장 큰 애로 사항을 주관식으로 질문한 결과임

- 가장 많은 애로사항으로 제시된 내용으로는 우수인력 확보문제(17.8%), 인력확보(7.8%), 전문인력 확보(3.9%), 연구개발 인력확보(2.9%) 등 주로 인력확보문제를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지적

<표 4-38> 사업참여 후 고용관련 애로 사항 - 인력양성사업 제외(복수응답)

	사례수	비중(%)
모름/무응답	161	42.0
우수인력 확보	68	17.8
없음	63	16.4
인력확보	30	7.8
전문인력 확보	15	3.9
연구개발인력 확보	11	2.9
신규인력의 고용 유지가 어렵다	6	1.6
경력자 확보	6	1.6
인력의 높은 임금	5	1.3
생산인력 확보	4	1.0
전공 적합자 확보	3	0.8
신규인력활용에 대한 제도적 어려움	3	0.8
기술개발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우 사후지원체계가 없다	3	0.8
지역적으로 낙후한 점	3	0.8
경제가 좋지 않고 생산량 저하로 인한 고용창출의 어려움	2	0.5
매출 증가속도가 늦어 개발사업 진행이 지연	2	0.5
기술인력확보	2	0.5
매출이 발생하고 있지 않아 고용창출을 못한 점	2	0.5
공장건설을 위한 기술적 지원이 없다	2	0.5
평가분석 정보습득의 난점	2	0.5
교통이 불편한 점	2	0.5
지원금 부족	2	0.5
생산원가 문제로 인한 고용창출의 어려움	1	0.3
기술개발 후 실 적용까지의 일정기간이 소요	1	0.3
실제 연구업무를 할 수 있는 연구조직 평가방법 마련	1	0.3
연구가능여부를 연구소 유/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불합리하다	1	0.3
고가의 연구분석 장비를 저렴하게 활용할 수 없다	1	0.3
우수인력 확보에 따른 활용을 위한 연계 연구사업 부족	1	0.3
지역학계나 고용시장간의 연계가 어렵다	1	0.3
지역사업에 대한 정확한 기술적 판단과 집중을 통한 과제화	1	0.3
사업종료 후 신규인력을 유지하기위한 인건비 부담	1	0.3
기존 연구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 되지 않았다	1	0.3
시간이 짧아 도출된 결과물을 가지고 신뢰성 테스트 어려움	1	0.3
젊은 청년 인력 확보	1	0.3
사업자 결정시 학벌 또는 대형연구기관의 배경을 요구	1	0.3
인력채용시 지원자의 전문지식 평가의 어려움	1	0.3
축적된 교육기술 및 인력양성 사업프로그램이 없어 운영 어려움	1	0.3
지역의 특성상 미래기술에 투자가 쉽게 이루어지기 어렵다	1	0.3
시험장비 부족으로 개발기간 지연 및 실질적인 개발 어려움	1	0.3
가용인력의 교육훈련 수준 미달	1	0.3
공장건설을 위한 재정적 지원이 없다	1	0.3
현실적으로 고용효과를 측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1	0.3
실무분야의 실질적인 전문가 부족	1	0.3
시장판로개척망의 구축	1	0.3
해외 기술자에 의한 선진기술이전	1	0.3
지원제도의 규제/제한의 엄격화 해소	1	0.3
	383	100.0

○ <표 4-39>는 인력양성 사업을 대상으로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에 참여 한 후 고용과 관련하여 가장 큰 애로 사항을 주관식으로 질문한 결과임

- 가장 많은 애로사항으로 제시된 내용으로는 우수인력 확보(11.0%)가 지적되었음

<표 4-39> 사업참여 후 고용관련 애로 사항 - 인력양성사업 (복수응답)

	사례수	비중(%)
모름/무응답	41	45.1
없음	17	18.7
우수인력확보	10	11.0
취업시 회사와 학생사이의 임금차이	2	2.2
지역출신의 인력이 지방소재 기업 지원 기피	2	2.2
지방의 우수인력을 발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필요	2	2.2
정부 수도권 중심정책에 따른 지역기피현상과 편견	2	2.2
직무능력에 맞는 실무능력 보유자 확보	2	2.2
전반적 경기침체로 고용증대 효과 미비	2	2.2
우수인력에 대한 고임금	2	2.2
고급강사진의 충분한 강의시간 확보부족	2	2.2
연구원 인력 확보	1	1.1
전문인력 확보	1	1.1
사업의 중간 및 최종평가시 일관성 있는 평가 필요	1	1.1
지원 금액의 기간이 짧다	1	1.1
중소기업에 대한 기초정보 부족	1	1.1
중소기업 현장경험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다	1	1.1
지원기간 2개월은 양성기간으로 짧다	1	1.1
동종업계 직원들 간의 맞춤형 교육이 없다	1	1.1
인력채용시 업무능력의 검증	1	1.1
업무로 인한 교육시간을 맞추기가 어렵다	1	1.1
강의시간을 하루8시간에서 4시간으로 조정	1	1.1
홍보부족	1	1.1
실무교육위주 및 현장을 경험할 기회를 제공	1	1.1
당사와의 연관성이 떨어지는 교육프로그램	1	1.1
반복적인 트레이닝 작업으로 팀원들이 힘들어함	1	1.1
	91	100.0

⑶ 고용효과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 <표 4-40>는 인력양성 사업을 제외한 세 사업을 대상으로 고용효과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주관식으로 질문한 결과로 인건비 지원 정책 필요, 자금지원, 인력 고용 지원,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업체에 대한 지원, 개발 기술에 대한 사업화 지원 등의 의견이 제시됨

<표 4-40> 고용효과제고를 위한개선방안 - 인력양성사업 제외(복수응답)

	사례수	비중(%)
모름/무응답	182	47.5
없음	50	13.1
인건비 지원 정책 필요	16	4.2
자금지원	11	2.9
인력 고용 지원	10	2.6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업체에 대한 지원	10	2.6
개발 기술에 대한 사업화 지원사업의 확대	9	2.3
인건비의 비율을 높여야 한다	5	1.3
신규인력에 대한 교육비용 지원	5	1.3
짧은 시간의 사업진행으로 고용효과를 누리기 어렵다	5	1.3
인력관련 인프라 구축	5	1.3
고용증진 효과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5	1.3
연구개발된 제품이 사장되지 않도록 정부의 정책적인 배려	4	1.0
홍보를 강화해 참여의 폭을 넓혀야 한다	4	1.0
생산인력에 대한 지원	3	0.8
중소기업의 경우 인건비를 외부인건비(현금)집행을 허용	3	0.8
사업참여가 용이하도록 제도적 정비 필요	3	0.8
과제 후 신규채용시 다음 정부 과제 신청 때 가산점 부여 증대	3	0.8
사업자 선정시 소기업에 대한 배려	3	0.8
지역 대학과 연계된 사업을 통해 우수인력에게 제공	3	0.8
국가와 학교에서 전문인력을 육성해야 한다	3	0.8
시장개척에 필요한 마케팅 지원 프로그램 필요	3	0.8
현장실무에 유능한 인재 육성	3	0.8
총사업비의 인프라구축비 배정을 확충	2	0.5
전국적 인력채용 검토 후 지역에 실전배치	2	0.5
개발인력 채용시 보조금 지급	2	0.5
국산개발품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사후관리 시스템	2	0.5
사업과제 성공 이후 생산성 향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보완	2	0.5
사업 종료 후 후발 개발프로젝트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	2	0.5
우수한 사업 연계 지원 시스템이 필요	2	0.5
개발된 기술의 상용화시 업체의 개발 투자비 지원	2	0.5
장기근속 인력을 늘리기 위한 정부 시책	2	0.5
중소기업에 근무 중인 연구인력에 대한 직접 지원	2	0.5
인력충원 실적에 대한 충분한 검증 필요	2	0.5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지원 방안 증대	2	0.5
고용효과가 우수한 과제에 대해 고용지원제도 적용 검토	2	0.5
인재를 육성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 필요	2	0.5
시행 후 일정기간 경과한 상태에서 평가	2	0.5
홍보비 지원	2	0.5
사업비 증가를 통한 우수인력확보가 필요	2	0.5
지역을 가장 먼저 고려한 유통시스템 구축	2	0.5
신규채용 인원에 대한 지원율을 현행보다 높여야 한다	1	0.3
중복고용을 허용(2개의 복수회사에서 1명의 고급인력참여)	1	0.3
인력에 대한 각종 지원이 정부 중앙부처와의 형평성이 필요	1	0.3
지역의 가장 경쟁력있는 품목을 우선 지원	1	0.3
탄력적인 예산 집행	1	0.3
고용증대가 발생할 경우 추가 지원하는 방안 검토	1	0.3
심사, 선정, 평가하는 과정을 영업이나 유통 사업자로 대체	1	0.3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획일적인 가이드라인 제시	1	0.3

과제신청시 신규인력인 경우 인건비 100%지원 허용 방안	1	0.3
컨소시엄상의 연구기관과 위탁교육 프로그램 마련	1	0.3
사업 아이템의 양산성 확률을 구체적으로 제시	1	0.3
사업진행업체에게 취업박람회 등의 우선기회 제공	1	0.3
사업과 관련한 기술을 배울 수 있게 관련 기관 신설	1	0.3
산학 연계에 따른 실질적 기술연계 연구	1	0.3
대학과 연계시 연계 대학생채용할 경우 인센티브 부여	1	0.3
대학교 재학생, 졸업예정인력을 참여	1	0.3
전문인력양성을 위한 대학 내 학과, 교육과정 개설 필요	1	0.3
기능 및 기술학교 육성 필요	1	0.3
산학연계 공유인력이 프로젝트 진행할 수 있게 제도 개선	1	0.3
국가와 산학 연계협조를 받아 인력채용의 기회 증대	1	0.3
퇴직고급인력 중 유자격자와 경험 많은 고령자 채용	1	0.3
여건이 열악한 지방중소기업의 참여기회 확대	1	0.3
기술의 상용화 가능성, 사업화 방향에 집중해야한다	1	0.3
사업비 사용 부분에서 융통성있는 집행 방안 필요	1	0.3
고용효과가 우수한 과제에 대해 정부지원금 확대	1	0.3
연구기술직과 생산기능직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개선	1	0.3
관련 기술사업 인프라 구축	1	0.3
인력채용시 현물 책정 비용을 올려야 한다	1	0.3
인력채용시 기업 부담금을 낮춰야 한다	1	0.3
3개월 이내 신규입사자를 연구원의 임금지급	1	0.3
사업 및 관리조직체계의 중복을 개선	1	0.3
정부지원금액별 고용인원을 배정해 사업에 참여	1	0.3
농업기술개발의 경우 사업시기를 탄력적으로 적용	1	0.3
장비확충을 위한 제도마련 필요	1	0.3
헤드헌팅 등의 컨설팅 역할	1	0.3
상위단체의 연구과제와의 연계성 등을 고려한 제도 마련	1	0.3
사택이나 기숙사 등의 혜택을 제공	1	0.3
사업비의 일부를 교육훈련비로 책정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1	0.3
젊은 인재 육성	1	0.3
외부인건비의 일부를 사업비에서 지출가능하게 했으면 좋겠다	1	0.3
고용인원에 대한 실무교육 확대	1	0.3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연계시켜 구매조건부 사업개발	1	0.3
시장판로 개척 및 해외영업망을 통한 수출알선	1	0.3
엔지니어링 설계 예산책정, 기술서비스업을 포함	1	0.3
병역특례자인 경우 까다로운 자격요건 완화	1	0.3
재고용, 퇴직기술자 활용 사업장에 각종지원과 혜택	1	0.3
사업 전부터 해당시장조사에 대한 지원을 해서 사업성을 평가	1	0.3
	383	100.0

○ <표 4-41>는 인력양성 사업을 대상으로 고용효과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주관식으로 질문한 결과로 인력채용시 채용의 대대적인 홍보, 다양한 교육을 통해 업체에 맞는 교육을 선택, 인력채용시 인건비 지원, 매년 평가시 일관성있게 심사기준을 적용바람 등의 의견이 제시됨

<표 4-41> 고용효과제고를 위한개선방안 - 인력양성사업(복수응답)

	사례수	비중(%)
모름/무응답	48	52.7
없음	17	18.7
인력채용시 채용의 대대적인 홍보	3	3.3
다양한 교육을 통해 업체에 맞는 교육을 선택	2	2.2
인력채용시 인건비 지원	2	2.2
매년 평가시 일관성있게 심사기준을 적용바람	2	2.2
개발지원에 연계되는 사업화 지원	2	2.2
인력양성사업을 통해 관련기업 취업시 인센티브 제공	1	1.1
참여자들의 인성, 직업관에 맞는 맞춤형교육 필요	1	1.1
사업성과에 따라 인력을 의무적으로 채용하는 방안	1	1.1
평가방법이나 검열부분에 더욱 신경썼으면 한다	1	1.1
사업목적이 학교와 기업체 중 어느 쪽인지 명확한 규명	1	1.1
학력이외에 경력이나 경험도 선별기준이 되었으면	1	1.1
고졸 생산인력에 대한 지원사업	1	1.1
장기적인 계획의 지원정책이 필요	1	1.1
현장 인턴제의 현실적인 교육프로그램 육성	1	1.1
사업단에 참여된 학생들에게 많은 혜택 지원	1	1.1
복리후생에 대한 지원	1	1.1
소규모 기업에 대한 인력양성 프로그램 필요	1	1.1
기술적인증(대회 입상)의 지원	1	1.1
상품화(특허출원)의 지원	1	1.1
개인창업 등, 다각적으로 지원 가능한 성과지표 필요	1	1.1
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인력이나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전환	1	1.1
무료 교육	1	1.1
정밀기계분야의 해외기술지원	1	1.1
다양한 인력 풀 운영	1	1.1
노동부와 연계한 제도 시행	1	1.1
인력에 대한 기초 데이터베이스를 먼저 갖추어야 한다	1	1.1
인력양성 지원기간을 연장했으면 한다	1	1.1
지역에 국한되지 않는 인재양성의 사업운영	1	1.1
정부가 기술재교육을 지속적으로 지원	1	1.1
경험과 실질적으로 업체에 도움	1	1.1
	91	100.0

제3절 주관기관 고용영향 평가 심층면접조사 결과

가. 정책의 고유목표 달성도

(1) 정책목표의 적합성 및 실현가능성

1) 적합성

○ 지역산업정책의 정책목표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지역균형발전의 차원과 특정 지역의 경기적 대응이라는 두 가지 개념적 정책목표를 고려할 수 있음

- 초기의 산업의 급속한 구조조정에 따른 지역 경제의 침체를 고려하던 것이 점차 지역산업의 중장기적 성장을 끌어 갈 산업으로서 전략적 육성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접근으로 전환하고 있음
- 지역별전략산업의 선정이 종합적·체계적 방법에 입각하여 이루어져 전략산업은 지역별 산업의 집적도, 특화도, 성장가능성, 지역의 혁신역량, 지자체의 육성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되고 있음

○ 정책 목표의 설정에 있어 목표가 성장과 고용효과에 대한 부합정도를 참여 수행기관은 대단히 높은 부합성을 인정하고 있음

<표 4-41> 고용효과제고를 위한개선방안 - 인력양성사업(복수응답)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다소 그렇다	매우 그렇다	잘 모르겠음	평균
지역전략산업의 성장에 부합한다			5.2	31	63.8		4.59
고용창출 제고에 부합한다			10.3	55.2	34.5		4.24

○ 정책 목표상의 고용효과에 대한 고려

- 정책목표의 설정단계에서 고용효과에 대한 고려가 매우 잘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수행기관은 판단하고 있음

<표 4-43>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이 사업계획 또는 목표에 지역(기업)의 고용효과 고려정도(수행기관심층조사)

구분	비중(%)
사업목표에 고용효과를 매우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43.1
사업목표에 고용효과를 다소 고려하고 있는 편이다	46.6
사업목표에 고용효과를 제대로 고려하고 있지 않다	8.6
사업목표에 고용효과를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	
잘 모르겠다	1.7
평균	3.35(점)

- 정책목표의 진술에 직접적인 서술과 성과관리단계에 성과지표로 고용효과가

반영되게 하고 있음

- 진술방안은 사업계획서의 작성시 공용증대의 목표제시나 창업, 기술개발의 확산에 의한 고용 증대 등을 서술

(예시) · 사업계획서 상 실적지표 상 고용증가의 항목 설정

· 성과지표에 내포: 지원기업 전년대비 3% 고용 증가율

· 마케팅 활성화 사업

- 필요성: 마케팅 활성화를 통한 기업매출증대 → 기술/시설개발 투자 증진 → 고용창출

- 기대효과: 기업의 매출 신장 및 생산성 증대효과로 인한 고용의 창출

○ 한편 고용효과에 대한 사항을 정책 수립시 고려해야 하는지에 대해 수행기관은 80%이상이 그 중요성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음

<표 4-44>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의 목표에 고용효과를 고려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성 여부(수행기관심층조사)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다소 그렇다	매우 그렇다	잘 모르겠음	평균
	(3.4%)	(15.5%)	(44.8%)	(34.5%)	(1.7%)	4.12(점)

○ 목표 설정에 고용효과를 고려하는 방안

- 고용과 관련하여 세부 목표를 설정하게끔 유도하고 평가에 그 사항에 대한 배점을 하여 고용창출에 대한 제고가 고려되도록 사업시스템 구축. 사업의 정량적 및 정성적 목표에 고용창출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따른 구체적 실천 계획을 포함시켜 성과 제고

· 지역전략산업분야 지역소재기업의 신규고용창출 및 R&D 인력의 해당분야 연구역량 제고 등 사업의 구체적 목표와 목표달성을 위한 성과관리체계의 변화가 필요함

· 고용효과가 가시적으로 발생하려면 기업의 R&D 지원 및 기업 여건 개선 사업들이 선행되어 기업의 성장이 보장되고 장기적 비전이 뒤따라야 할 것임

· 지역산업진흥사업에 고용효과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고, 타당하나 사업의 특

성상 단기적 목표로 고용효과에 대한 지표를 설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봄. 특히, 지역산업진흥사업은 직접고용에 대한 인건비 보조사업이 아니고, 산업 전반의 육성을 위한 인력양성, 마케팅, 기술지원이 주가 되는 사업인 만큼 장기적 플랜을 통해 2년 또는 3년 주기로 고용효과에 대한 성과를 파악

· 현재의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은 사업추진 자체를 '기업에 대한 간접지원'으로 한정하고 있음. 간접지원에 의한 고용효과는 크게 기대할 수 없다고 파악하고 있으며 기업에 대한 직접지원으로 확대하여 실질적으로, 또한 기업이 지원을 받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직접지원이 가능하게 바꿀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함. 이 경우 고용지원정책과 연계를 모색할 수 있을 것임

나. 정책추진체계의 합리성

○ 지역전략산업 육성 사업의 정책 추진 체계에 대한 수행기관의 평가가 대체로 적절하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음. 정책 추진을 사업신청-심사-계약체결 -사업시행-성과평가 과정으로 파악한 추진체계에 대해 목표 달성에 적합하다고 판단하고 있음

- 사업의 신청, 심사 및 시행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하는 반면, 계약 체결과 평가에 대해서는 낮은 평가를 보이고 있음

<표 4-45>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의 정책추진체계 적절성(수행기관심층조사)

구분	전혀 적합하지않다	적합하지 않다	그저 그렇다	적합하다	매우 적합하다	잘모름	평균 (점)
사업의 신청		(1.7%)	(13.8%)	(63.8%)	(19%)		4.02
심사		(1.7%)	(17.2%)	(63.8%)	(15.5%)	(1.7%)	3.95
계약체결		(8.6%)	(22.4%)	(55.2%)	(12.1%)	(1.7%)	3.72
사업시행	(1.7%)	(3.4%)	(17.2%)	(53.4%)	(22.4%)	(1.7%)	3.93
성과평가과정	(3.4%)	(10.3%)	(27.6%)	(41.4%)	(15.5%)	(1.7%)	3.56

○ 최근 정책 추진체계의 변화, 즉 테크노파크로의 일원화 방안의 과정에서 실행주체의 이해의 일치가 미흡하고, 테크노파크의 역량차이로 추진체계에 대한 문제 지적이 많이 있음

-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의 대부분 공모 또는 지원 형식의 사업임. 지역산업수요

를 고려한 기술개발지원과 인적자원개발이 중요하나 지경부의 거버넌스체계 개편으로 정책기획과 선정평가관리가 이원화 되면서 기업 수요대응형 기술개발, 인적자원, 마케팅, 컨설팅체계가 연속적 계획적이지 못한 시스템을 가지게 된다고 주장

- 주요 대규모사업의 경우 중앙에서 직접 평가관리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어 지역기업의 수요와 괴리되고 각종 사업추진 주체(주관기관, 협력기관)가 프로젝트 사냥 형식으로 접근하고 있음. 따라서 자체사업의 고용효과는 물론 연관기술 및 연관산업과의 서너지 창출에 문제가 있음

○ 거점기관인 테크노파크 자체의 시스템 경쟁력에 문제를 지족하기도 함. 사업의 수행기관인 테크노파크의 기관직원 및 연구원의 역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훈련이 되어 있지 않고 마인드도 부족함

- 즉 기업 경영자의 마인드를 따라가지 못하는데 지원 및 선도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음. 테크노파크 직원 및 연구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내부 평가체계, 완전연봉제 등 강력한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을 역설

다. 정책집행의 적절성

○ 지역특성에 맞는 인력에 대한 로드맵이나 전문가 협의체 활성화 필요

○ 인적자원 및 인력양성을 위해서는 장기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어야 하는데, 대다수 교육이 단기 또는 세미나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음 (장기적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중요)

라. 정책의 고용연계성

(1)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 추진체계 내의 고용 연계성

1)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 추진체계 내의 고용 효과 고려 정도

○ 사업의 추진 단계에서 고용영향에 대한 고려는 비교적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사업 수행기관은 인식하고 있음

<표 4-45>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의 정책추진체계 적절성(수행기관심층조사)

사업추진체계에 고용효과를 매우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29.3%)
사업추진체계에 고용효과를 다소 고려하고 있는 편이다	(43.1%)
사업추진체계에 고용효과를 제대로 고려하고 있지 않다	(22.4%)
사업추진체계에 고용효과를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	(1.7%)
잘 모르겠다	(3.4%)
평균	3.04(점)

2) 고용연계적 사업 추진 현황(사례)

○ 사업성과 달성을 평가하는 성과지표상 고용증가 현황의 항목 설정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사업계획 내용에 기업의 혁신제고, 인력양성, 전문성 강화 프로그램 운영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사업(중간)결과 평가에 있어서도 지원기업의 기타 경영현황 등과 함께 고용현황의 개선 등을 평가기준으로 삼고 있음

○ 기술개발사업계획서 작성시 주관기관의 연구원 채용시 인건비 지원 및 사업평가시 우대, 중소기업의 경우 신규인력 채용시 참여연구원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 및 지급 가능한 제도가 있어 신규인력 고용 효과 발생

- R&D 신규사업자 선정 및 연구비 예산편성시 “지역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제5조 6항에 의거하여 신규 참여연구원 채용시 현금으로 인건비 총액의 50% 이내에서 산정할 수 있고 또 신규과제 선정평가시 ‘지역기여도(지역 고용창출 및 생산증대 등)’를 별도 평가지표로 설정중임. 또한 최종성과평가에서 성공한 과제에 대하여 사업종료 후 5년간 “성과활용보고”를 통해 신규고용창출 성과 등을 수집하여 성과활용우수기업에 대해서는 신규사업자 선정시 우대배점을 부여하는 등 성과관리 실시하고 있음
- 기업지원서비스사업의 사업목적에 맞추어 관련된 고용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신규지원 및 중간평가시 사업계획에 대한 심의위원회 개최 및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협약 체결 등을 실시함

○ 연구부문의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고용창출과 직접적인 연결이 안되고 있는 실정이며 오히려 기업이 필요로 하는 업무(시험, 분석 등 지원)를 당 센

터가 대행하고 지원하므로 이에 대한 이용위주로 접근하여 기업은 오히려 고용에 관심이 적은 문제가 나타남

○ 울산의 경우, 사업 유관기관(지자체, 테크노파크, 대학, 연구소, 기업)과 인력양성협의체, 실무자협의회 등을 구성하여 의견 및 정보를 교류하고 정책 및 교육프로그램에 반영함으로써 고용 효과성 및 효율성 제고에 노력하고 있음. 또한 울산광역시와 울산 전략산업기획단이 지역의결기구체인 “산학연관협의회”를 발족하였으며, 협의회 분과에 “인력양성분과”를 두어 지역 대학과 기업간 인턴십 협약체결 및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함으로써, 고용창출과 인력양성에 많은 성과를 도출하고 있음

3) 고용연계 사업 추진을 위한 개선

○ 사업 수행기관은 사업추진에 있어 고용효과를 고려해야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음

<표 4-47>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의 추진체계에 고용효과를 고려의 타당성

전혀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다소 그렇다	매우 그렇다	잘 모름	평균
-	(3.4%)	(13.8%)	(55.2%)	(25.9%)	(1.7%)	4.05(점)

○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은 고용효과제고를 주목적으로 설정된 사업이 아니고 지역 산업의 성장이 주목적이란 인식도 있음. 그러나 이는 산업과 고용의 파생적 관계에 대한 이해의 부족으로 봄. 고용효과의 제고를 위해 사업의 선정과 성과 평가시 고용부문을 반영하여 평가토록 함

- 고용효과 등의 사항을 평가지표에 반영하여 명확히 확정한 뒤에 사업공고 추진 반영하도록 함. 사업선정시 고용유발효과를 반영하여 평가하고 있으나, 이를 정량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지표가 별로 없음. 사업의 평가시 고용의 직, 간접적 효과를 수치화 한 객관적인 정량적 평가가 가능토록 해야 할 것임
- 사업의 선정시 고용효과 및 개선효과를 평가지표에 반영하여 평가할 수 있고 평가결과에 있어서도 단순 다른 지표와는 다르게 가중치를 두고 평가할 수 있음. 사업 선정시 6개월 이내 고용효과가 있는 기업 가산점 우대할 수도 있을 것임

- 그러나, 가시적 성과에 집착하지 않고 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장기적이고 정성적 노력에 대한 평가도 겸해 진행되어야 함. 또 R&D의 경우 고용효과가 사업완료 후(사업기간이 2~3년으로 제한적) 나타나는 경향도 고려해야 함
- 고용효과는 지역의 산업구조 산업의 성숙 정도, 기업의 규모 등 지역간 격차가 크다는 점은 정량 평가 항목의 개발시 성과 판단 기준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려해야하는 점임

○ 지역특성에 맞는 인력에 대한 로드맵이나 전문가 협의체 활성화 필요
- 사업추진에 있어 지원대상기업의 회원사 선정과 사업추진계획에 고용유발효과를 직·간접으로 적용되는 사업으로 유도하고 지역산업의 추진주체인 기업체에 대한 친밀감, 이해도, 추진조직, 전문성 등을 감안하여 주관기관을 선정함
- 지역의 인적자원개발, 인력양성, 고용유지 및 창출을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현실에 맞는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며(예를 들어 산업의 규모가 아닌, 지역이 발전하고자 하는 산업의 방향에 맞추어 실질적인 고용증가 보다는 향후 예상되는 고용 또는 증가율을 평가), 또한 인적자원의 능력배양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외부 전문가의 활용이 무엇보다도 중요함. 따라서 사업수행상 외부전문가 활용을 위한 재정적 지원도 따라야 함

○ 신청-심사-협약-사업시행-평가의 사이클을 매년 되풀이하는 것이 아니고 다년간 지원하는 사업구조로 가되 평가를 엄정히 하는 것이 사업을 시행하는 기관과 평가하는 기관 모두 효율적임
- 지금처럼 기업을 지원하는 기간이 계획서 제출하고 협약하고 보고서내고 평가받고 하는데 중점 할애되면 사업의 효율성이 낮을 수밖에 없음. 시간에 쫓겨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되지 못하는 실적 내기에 치중하는 형식적 사업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음
- 단기간 일회성 사업을 지양하고 연속적인 중장기적인 사업지원 체계 마련 필요지원규모 및 지원방식 등이 간접지원으로 직접고용효과로 창출 및 분석하기가 곤란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고용효과는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 기술지원 및 투자업체에 대한 장기 분석이 필요함

○ 기반구축의 경우 장비 인프라 구축에 사업비의 90%이상이 소요, 그만큼 장비에 대한 비중이 큼. 현재까지는 주로 인프라 구축에 상당한 사업비 지원이 이루어진 게 사실임. 실질적으로 고용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현재 지역전략산업 진흥사업의 사업비 지원규모와 지원체계에 전면적인 수정과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현재 인프라사업 중심의 사업지원체계를 인력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인프라 사업의 예로 장비 운용은 기존 인력을 활용하더라도 신규 추가 도입 장비에 대한 전담 엔지니어급 인력이 반드시 필요하고 보조 인원에 대한 기존 인력 활용이 가능한가 등 인력 소요가 따르는 효과가 있음

⑵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 추진내용의 적절성

1) 사업 추진내용의 적절성

○ 추진내용의 적절성에 대한 응답을 보면 지원형태는 높으나 지원기간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

<표 4-48>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의 지원형태, 지원방식, 지원기간, 지원자격의 적절성

	전혀 적절하지않다	적절하지 않다	그저 그렇다	적절하다	매우 적절하다	잘모름	평균
지원형태		(6.7%)	(12.1%)	(56.9%)	(22.4%)	(1.7%)	3.96
지원방식		(5.2%)	(17.2%)	(67.2%)	(8.6%)	(1.7%)	3.81
지원기간	(1.7%)	(13.8%)	(25.9%)	(44.8%)	(12.1%)	(1.7%)	3.53
지원자격요건		(3.4%)	(12.1%)	(74.1%)	(8.6%)	(1.7%)	3.89

2) 문제점 발췌

① 지원형태

○ 문제점

- 비슷한 기능 또는 통합가능한 사업을 세분화하여 사업수행 및 관리의 어려움
- 평가시 평가위원에 따라 현장인력 중심으로 하라는 의견과 예비인력 중심으로 하라는 의견이 매년 틀리기 때문에 표준화 시켰으면 함
- 현재와 같은 모든 사업의 갑이 정부가 아닌 민간이 갑으로, 즉 민간 주도로 사업을 추진하여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형태의 사업 지원 형태로 지원 형태 필요

- 모든 사업을 선정 평가를 할 필요가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 지역의 장기계획과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처음부터 추진 주체가 확립되어 있으므로 바로 협약 체결 후 추진하는 방법이 필요
- 지방비 매칭 등 지원 및 관리 기관이 많아 사업 추진에 투입하는 시간보다 행정 업무 및 보고자료 작성 업무가 너무하다 함
- 단기성과에 너무 치중함 (중•장기에 걸쳐서 평가 필요)
- 정해진 예산의 균등 배분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 규모 및 성장가능성을 고려하여 집중, 선택, 차별화 정책을 적용하며 지원하는 형태로 추진
-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 지원시 국비대비 지방비 매칭이 있게 되는데 이 매칭규모는 전국 일률적인 적용보다는 각 지역 자립도를 감안하여 적용되어야 함

② 지원방식

○ 문제점

- 사업 운영비의 국비지원이 타당
- 지방정부의 책임을 지우는 방법으로는 타당하나 보조금 사업이다 보니 지방정부의 간섭이 심한 편임
- 거버넌스 체계를 테크노파크와 특화 센터 간의 역할 조정이 필요하며 현재(2010년)처럼 일단 모아놓고 라는 식의 지원방식에는 다소 문제가 있음
-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의 신규사업 선정시에는 전국 경쟁체제보다는 일부 지역 안배를 고려해야 함

③ 지원기간

○ 사업기간에 대한 문제의 지적이 많음

- 인력양성은 특성상 장기적으로 교육하고 피드백 시스템을 도입하여 부족한 부분을 재교육시켜 현장에 투입하는 게 효과적이나 사업기간이 짧기 때문에 단타성으로 끝나는 아쉬움이 있음
- 지원기간에 문제점이 가장 크다고 봄. 매년 사업의 협약시점이 빠르면 5~6월경임. 따라서 상반기엔 사업추진의 연속성에 매우 어려움 있음. 또한 사업이 늦게 시작됨에 따라 공백기간 발생 뿐 만 아니라 사업비 소진에 문제점 발생. 1년의 계획을 통해 사업이 추진되므로 예산이 없거나, 계속사업의 여부를 판단하지 못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이 중요

- 추진체계상 총 사업기간은 5년이나 평가 등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는 1년 단위의 사업임. 이를 다년간의 사업추진체계로 변경할 필요 있음
- 협약기간이 1월에 이루어져 사업기간이 1월부터 시작되지 않음. 보통 3-4월부터 시작되니까 사업기간이 9~10개월 짧음

3) 사업추진내용의 고용연계성

○ 고용효과(인적자원개발, 인력양성, 고용유지 및 창출)를 고려하여 설정여부. 대체로 고용영향을 고려하여 사업자를 선정하고 성과 평가 평가도 하고 있음(사례)

- 사업의 지원시 고용효과가 높은 기업을 우선시하지만, 무엇보다도 기업이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의 수준, 해당 사업의 현장 적용 가능성을 판단하여 지원하고 있음
- 사업 신청시 고용에 대한 반영을 하게끔 양식을 마련해두고 있으며 중간·최종평가에서 결과를 확인하고 있음
- 사업의 지원대상기업 선정시 기업의 고용효과에 직접적으로 부합하는지 내부항목지표를 설정하여 평가해 기업 선정
- 기본적으로 고용유발 효과가 높은 제조업 중심의 전략산업을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음. 지원 이후 모니터링 과정에 있어서도 고용유발 효과가 높은 우수 기업을 대상으로 추가 지원 진행 하고자 함
- 인력양성사업의 경우, 주력산업(자동차, 조선, 석유화학)의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분석을 통하여 주력산업의 성장추세와 고용효과, 산업별-직업별 노동력 구성 변화, 산업 성장추세와 고용효과 분석, 주력산업 취업자 규모와 증가율 추이 등을 조사하였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인력양성 로드맵을 수립하고 있음. 이러한 결과를 인력양성사업 주관기관 등에 배포함으로써, 효율적인 고용창출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개발되도록 지원하고 있음

⑶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 성과관리의 적절성

1)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의 성과관리의 적절성

○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에 다한 수행기관의 성관관리에 대한 적절서의 평가는 긍

정적인 평가임. 다만 성관관리에 대한 적절성 여부의 판단은 여타 다른 항목의 조사의 평균점과는 다소 낮게 하고 있는 점이 비교됨

<표 4-49>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의 성과관리의 적절성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다소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	(22.4%)	(20.7%)	(39.7%)	(17.2%)	3.52(점)

2) 문제점 발췌

○ 성과관리를 구성하여 작동하고 있으나, 사업기간과 평가기간의 불일치, 인력운용상의 문제, 사업간의 미세한 차이의 고려 등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음

- 단발성 사업으로만 끊이지 않고 다른 기업지원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할 수 있는 사업 발굴 필요
- 사업 종료 후 최소한의 인건비 산정이 되어있지 않은 가운데 성과 관리를 한다는 것은 업무만 과중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인원 혹은 수혜업체에서 기피하고 있음
- 사업의 실적과 성과를 평가하는 기준이 자주 변하는 편이고 정부시책의 일관성이 부족하다고 생각됨. 전체적인 방향은 최소 3-5년은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세부적인 보완을 하는 것이 일관성 있는 성과관리가 될 것 같음
- 사업참여인력(전담인력)이 계약직으로 구성되어 있어 사업종료 후 실제 업무 담당자들의 노하우 등이 단절됨. 이에 따라 성과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체계임
- 성과를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지표 부재, 성과 발현 시기와 측정 시기의 불일치, 조급한 성과 측정 (기술개발의 경우 성과발현 시기가 종료 후 3년 정도 소요되는데 그 기간 내에 성과를 조사함)
- 체계적인 성과관리 절차, 매뉴얼, 성과지표의 설정이 미흡한 수준임. 성과분석을 위한 지역별 공통지표를 수립하고 별도예산을 배정하여 충분한 기간을 두고 조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필요함(전담인력 채용 등)

3) 성과관리의 고용효과 연계성

○ 성과관리에 있어 고용효과의 지표가 있어 사업 추진의 중요고려 사항으로서 고용이 고려되고 있음

<표 4-50>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의 성과관리에 고용효과를 고려여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다소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	(6.9%)	(25.9%)	(46.6%)	(20.7%)	3.81(점)

-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관리에서 기존 주요 평가지표로 활용되어 온 경영현황 개선 내용에 고용효과(개선)지표를 포함하여 관리함으로써 사업성과 관리지표로 활용하고 있음

○ 사업 수행기관의 의견 조사에서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의 전반적인 고용효과에 대한 평가는 고용기여에 매우 긍정적인 사업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재 제도 운영을 좀 더 고용친화적인 개선으로 더욱 높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함

<표 4-51> 사업이 전반적으로 지역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고용효과제고에 기여 여부

(단위: %, 점)

	전혀 그렇지않다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다소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지역산업의 경쟁력 제고			8.6	32.8	58.6	4.50
고용효과(인적자원개발, 인력양성, 고용유지 및 창출)제고		1.7	13.8	50	34.5	4.17

<표 4-52> 고용효과를 제고하도록 사업내용이 개선된다면, 현재에 비해 고용창출이 증가정도 예상

(단위: %, 점)

고용창출 효과가 거의 없을 것이다	
현재보다 고용창출이 5% 미만 증가할 것이다	(15.5%)
현재보다 고용창출이 5~10%미만 증가할 것이다	(48.3%)
현재보다 고용창출이 10~20% 미만 증가할 것이다	(25.9%)
현재보다 고용창출이 20~30% 미만 증가할 것이다	(1.7%)
현재보다 고용창출이 30% 이상 증가할 것이다	(3.4%)
잘모름	(5.2%)

라. 심층조사 평가의 종합

⑴ 정책의 고유목표 달성도 평가

1) 사업목표의 적합성 및 실현가능성

○ 정책 목표의 설정에 있어 목표가 성장과 고용효과에 대한 부합정도를 참여 주관기관은 대단히 높은 부합성을 인정하고 있음

– 지역성장 목표의 부합성이 상대적으로 큰 편: 성장목표에 부합(4.59/5) > 고용창출 제고에 부합(4.24/5)

○ 정책목표의 진술에 직접적인 서술과 성과관리단계에 성과지표로 고용효과가 반영되게 하고 있음. 아울러 고용효과에 대한 사항을 정책 수립시 고려해야 하는지에 대해 주관기관은 80%이상이 그 중요성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음

2) 사업추진체계의 합리성

○ 정책추진체계의 목표부합성: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의 정책 추진을 사업신청–심사–계약체결–사업시행–성과평가 과정으로 파악한 추진체계에 대해 목표 달성에 적합하다고 판단하고 있음

– 사업의 신청, 심사 및 시행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하는 반면, 계약 체결과 평가에 대해서는 낮은 평가를 보이고 있음

○ 최근 정책 추진체계의 변화, 즉 테크노파크로의 일원화 방안의 과정에서 실행주체의 이해의 일치가 미흡하고, 테크노파크의 역량차이로 추진체계에 대한 문제 지적이 많이 있음

○ 사업추진 내용(지원형태, 지원방식, 지원기간, 지원자격)의 적절성: 주관기관은 상당히 긍정적적인 평가를 함. 그렇지만 항목 내에서는 지원기간의 적절성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점이 주목 됨

3) 사업집행의 적절성

○ 사업집행 중 성관관리의 적절성 평가는 긍정적인 평가임

- 다만 성관관리에 대한 적절성 여부의 판단은 여타 다른 항목의 조사의 평균점과는 다소 낮게 하고 있는 점이 비교됨

○ 성과관리를 구성하여 작동하고 있으나, 사업기간과 평가기간의 불일치, 인력운용상의 문제, 사업간의 미세한 차이의 고려 등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음

⑵ 정책의 고용연계성

1) 사업목표의 고용 연계성

○ 사업의 추진 단계에서 고용영향에 대한 고려는 비교적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사업 주관기관은 인식하고 있음

○ 사업성과 달성을 평가하는 성과지표상 고용증가 현황의 항목 설정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사업계획 내용에 기업의 혁신제고, 인력양성, 전문성 강화 프로그램 운영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사업(중간)결과 평가에 있어서도 지원기업의 기타 경영현황 등과 함께 고용현황의 개선 등을 평가기준으로 삼고 있음

○ 기술개발사업계획서 작성시 주관기관의 연구원 채용시 인건비 지원 및 사업평가시 우대, 중소기업의 경우 신규인력 채용시 참여연구원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 및 지급 가능한 제도가 있어 신규인력 고용 효과 발생

○ 고용효과(인적자원개발, 인력양성, 고용유지 및 창출)를 고려하여 설정여부. 대체로 고용영향을 고려하여 사업자를 선정하고 성과 평가도 하고 있음

2) 사업집행의 고용 연계성

○ 성과관리에 있어 고용효과의 지표가 있어 사업 추진의 중요고려 사항으로서 고용이 고려되고 있음.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관리에서 기존 주요 평가지표로 활용되어 온 경영현황 개선 내용에 고용효과(개선)지표를 포함하여 관리함으로써 사업성과 관리지표로 활용하고 있음

- 반면, 중앙관리기관은 고용효과에 대한 DB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어 실질적인 고용효과 관리가 미흡한 편임

○ 사업 주관기관의 의견 조사에서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의 전반적인 고용효과에 대한 평가는 고용기여에 매우 긍정적인 사업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담함

제5장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의 고용효과 분석

제1절 산업연관 고용효과

가. 모형의 구조

○ 정부정책으로 유도되는 고용영향 평가는 객관적이고 현실설명력이 높은 모형 개발이 필요

- 제한된 공식 통계체제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고용영향평가 모형이 정립되어야 하며, 국민경제적 파급효과를 고려할 수 있는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해야 함

○ 산업별 고용창출능력(제조업의 차별성,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차별성 등)이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정책으로 발생하는 최종수요(혹은 투자수요) → 생산 → 노동수요의 산업파급과정을 거친 고용유발효과를 포괄할 수 있는 모형 구축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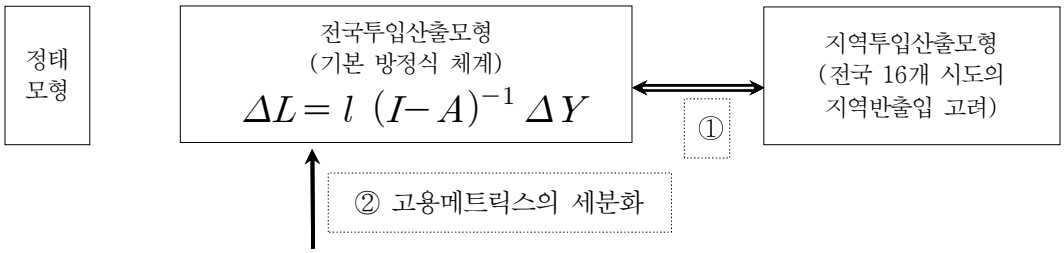
○ 일반균형분석을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모형 중 하나가 바로 산업연관분석으로 불리는 투입-산출(Input-Output)모형

- 단위 투입량에 따른 생산효과와 고용유발효과를 차례대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이며, 생산과 고용의 전체산업(부문)으로 파급효과를 파악할 수 있음

○ 산업연관분석에서 정부의 재정지출 증대에 따른 직·간접적인 고용효과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재정지출 증대로 인한 경제전체의 생산유발액의 크기를 먼저 계산한 후, 생산증대에 따른 고용유발효과를 파악함

- 산업연관분석구조는 아래 그림에서 정부재정지출은 최종수요의 변동을 가져오고, 생산파급과정을 거쳐 국민경제 상의 고용유발(혹은 취업유발)효과를 발생

[그림 5-1] 산업연관 고용효과 분석 모형



고용매트릭스		산업 28분류: 산업연관-표준산업분류 연계			
		농림어업	음식료업	.....	서비스업
직종	관리직 서비스직... 등	직종별*산업별 고용 행렬			

○ 투입계수의 계산: 아래 표에서 제1열은 제1산업의 중간투입과 총산출 관계를 나타냄. 중간투입내역 $x_{11}, x_{21}, ..., x_{n1}$을 총산출액 X_1으로 나눈 값인 $a_{11}, a_{21}, ..., a_{n1}$은 제1산업 생산물 한 단위를 생산하기 위하여 투입된 각 산업부문 생산물 크기를 나타냄. 이를 투입계수라고 부름. 이렇게 계산된 투입계수의 제1행을 $a_{11}, a_{12}, ..., a_{1n}$라 하면 이들은 제1산업의 총산출액이 X_1이 각각의 산업에 배분된 정도를 의미

○ <표 5-1>에서 각 산업부문의 수급관계를 살펴보면 중간수요와 최종수요의 합은 총산출액과 일치하므로 아래와 같은 방정식을 만들 수 있음

$$a_{11}X_1 + a_{12}X_2 + ... + a_{1n}X_n + Y_1 = X_1$$

$$\vdots \qquad\qquad \vdots$$

$$a_{n1}X_1 + a_{n2}X_2 + ... + a_{nn}X_n + Y_n = X_n$$

- 이 연립방정식을 행렬식으로 표시하면 아래 식 (1)과 같음

$$AX + Y = X \qquad (1)$$

- 여기서 A는 투입계수 행렬, X는 총산출액 벡터, Y는 최종수요벡터를 나타내며 이를 전개하여 X에 대해 풀면 식 (2)를 얻을 수 있음

$$X = (I-A)^{-1}Y \qquad (2)$$

- 위의 식 (2)에서 $(I-A)^{-1}$행렬이 바로 생산유발계수가 됨. 위의 식에서 소비, 투자, 수출 등 최종수요 Y가 한 단위 증가할 때 각 산업부문에서 직간접으로 생산되어야 할 산출액을 구할 수가 있음. 이를 통하여 한 단위의 최종수요의 증가가 전체 산업에 직간접적으로 미치게 되는 생산유발효과를 계산할 수 있게 됨
- 최종수요에서 다른 부문의 최종수요는 변동이 없고 오직 재정지출에 의한 최종수요만 변화가 있다고 가정하면 식 (2)을 아래 식 (3)과 같이 쓸 수 있음

$$\triangle X=(I-A)^{-1}\triangle I_{fdi} \qquad (3)$$

- 위의 식에서 I_{fdi}는 각 산업부문에 투입된 재정지출투입액벡터로 정의될 수 있음. 식 (3)을 이용하면 최종수요인 정부재정지출 한 단위(백만원)가 변할 때 총산출액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게 됨
- <표 5-2> 생산유발계수표를 행으로 보면, r_{11}은 1산업의 1단위 최종수요가 발생할 때 이를 충족하기 위해 유발되는 제1산업의 생산이며, r_{12}는 제2산업의 1단위 최종수요가 유발하는 제1산업의 생산, r_{13}는 제3산업의 1단위 최종수요가 유발하는 제1산업의 생산을 의미함. 따라서 생산유발계수표의 행렬과 정부재정이 투입되어 각 산업에서 발생한 최종수요벡터의 증가분을 곱하면 정부재정지출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유발된 각 산업의 생산량을 의미함

○ 최종수요의 발생이 생산을 유발하고 그 생산이 다시 노동수요를 유발하는 파급메커니즘에 기초하여 최종수요와 노동유발을 연결시킴으로써 노동유발효과 분석과 생산 활동증가가 일자리창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일정 기간 동안 생산 활동에 투입된 노동량을 총산출액으로 나눈 것을 노동계수라고 하는데, 노동계수는 취업계수와 고용계수로 구분됨. 노동량에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주 및 무급가족종사자를 모두 포함한 노동계수를 취업계수라 하고, 노동량에 임금근로자만 포함한 노동계수는 고용계수라고 함
- 노동량 산출에 있어 임금근로자뿐만 아니라 자영업주 및 무급근로자까지 모두 포함한 취업계수를 사용할 수 있음. 취업계수(l_w)를 수식으로 나타내어보면 식 (4)과 같고 L_w는 취업자 수, X는 산출액을 나타냄

$$l_w=L_w/X \qquad (4)$$

- 위의 식을 산출액 증가에 따른 취업자 수의 변화의 관계로 나타내면 다음의

식 (5)과 같음

$$\triangle L_w = l_w \triangle X \qquad (5)$$

- 식 (3), (4)을 식(5)에 대입하여 식 (6)을 도출. 식 (6)을 이용하여 재정투입에 따른 산업별 일자리창출규모를 구체적으로 산출할 수 있음

$$\triangle L = l_w (I - A)^{-1} \triangle I_{fdi} \qquad (6)$$

<표 5-1> 산업연관구조 형식

		중간수요	최종수요	총산출액
		1 2 … … n		
중간투입	1	$x_{11}\ x_{12}\cdots\ \cdots\ x_{1n}$	Y_1	X_1
	2	$x_{21}\ x_{22}\cdots\ \cdots\ x_{2n}$	Y_2	X_2
	n	$x_{n1}\ x_{n2}\cdots\ \cdots\ x_{nn}$	Y_n	X_n
부가가치		$V_1\ V_2\ \cdots\ \cdots\ V_n$		
총투입액		$X_1\ X_2\ \cdots\ \cdots\ X_n$		

<표 5-2> 생산유발계수표

	1산업	2산업	3산업	행 합계
1산업	r_{11}	r_{12}	r_{13}	S_1
2산업	r_{21}	r_{22}	r_{23}	S_2
3산업	r_{31}	r_{32}	r_{33}	S_3
열합계	R_1	R_2	R_3	

나. 사업비의 구분

⑴ 분석기간과 총사업비

○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은 사업명칭, 사업범위 및 지원방식이 지속적으로 변화
- 분석대상의 사업연도와 사업유형을 확정

○ 분석기간은 2005년~2009년으로 한정함. 지난 5년간(2005년~2009년)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의 투자개요는 다음과 같음
- 5년 동안 총지원액은 2조1,895억원, 이중 국비는 1조6,388억원, 지방비는

5,507억원임

- 사업유형별로 보면 총지원액 중 기반구축 사업이 51%로 1조1,223억원을 차지하며 다음이 기술개발 8,079억원(36.9%), 기업지원이 1,600억원(7.3%), 인력양성이 992억원(4.5%)의 순임
- 시계열로 보면, 2005년, 총지원액 4,604억원에서 2009년 4,421억원으로 연평균 1.0% 감소

<표 5-3> 사업 유형별 지원 현황

(단위: 억원)

		2005	2006	2007	2008	2009	2005~2009 계	연평균 증감율
기반구축	국비	1,808.0	1,938.0	1,500.5	1,022.2	941.3	7,210.0	15.1
	지방비	943.6	776.0	670.7	601.4	1,021.4	4,013.1	2.0
	계	2,751.6	2,714.0	2,171.2	1,623.6	1,962.7	11,223.1	-8.1
	(비중)	(59.8)	(59.1)	(53.1)	(38.8)	(44.4)	(51.3)	
기술개발	국비	1,427.3	1,479.3	1,477.6	1,773.4	1,354.1	7,511.7	-1.3
	지방비	113.3	121.0	97.0	103.4	132.9	567.6	4.1
	계	1,540.6	1,600.3	1,574.6	1,876.8	1,487.0	8,079.3	-0.9
	(비중)	(33.5)	(34.8)	(38.5)	(44.8)	(33.6)	(36.9)	
기업지원	국비	134.1	114.0	144.7	251.2	297.8	941.8	22.1
	지방비	63.2	70.5	74.0	168.9	282.0	658.6	45.3
	계	197.3	184.5	218.7	420.1	579.8	1,600.4	30.9
	(비중)	(4.3)	(4.0)	(5.3)	(10.0)	(13.1)	(7.3)	
인력양성	국비	85.0	65.0	104.3	193.3	277.3	724.9	34.4
	지방비	29.3	28.6	22.5	72.3	114.6	267.3	40.6
	계	114.3	93.6	126.8	265.6	391.9	992.2	36.1
	(비중)	(2.5)	(2.0)	(3.1)	(6.3)	(8.9)	(4.5)	
계	국비	3,454.4	3,596.3	3,227.1	3,240.1	2,870.5	16,388.4	-4.5
	지방비	1,149.4	996.1	864.2	946.0	1,550.9	5,506.6	7.8
	계	4,603.8	4,592.4	4,091.3	4,186.1	4,421.4	21,895.0	-1.0
	(비중)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분석대상 기간 중 총지원 건수(사업 건수)는 5,130건이며, 기술개발이 4,453건으로 가장 많음

<표 5-4> 사업 유형별 과제 건 수

(단위: 억원)

	2005	2006	2007	2008	2009	계
기반구축	51	51	50	58	55	265
기술개발	907	948	946	1,019	633	4,453
기업지원	33	31	36	72	100	272
인력양성	10	10	10	50	60	140
계	1,001	1,040	1,042	1,199	848	5,130

자료: 연속사업일 경우에도 각 연도별로 계상함

○ 투입산출분석을 통해 고용유발효과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출된 사업비의 항목을 조사해야 함

- 자료는 기반구축이 82건(30.9%), 기술개발이 227건(5.1%) 조사
- 이를 기초로 사업유형별 사업비와 직접 고용자 수를 계산

<표 5-5> 기반구축과 기술개발 유형의 조사자료 건 수

		2005	2006	2007	2008	2009	계	비중
기반구축	자료건수	15	16	16	19	16	82	30.9
	총건수	51	51	50	58	55	265	100.0
기술개발	자료건수	36	45	42	65	39	227	5.1
	총건수	90	948	946	1,019	633	4,453	100.0

⑵ 사업비의 구분

1) 총사업비 분류

○ 기간 중에 투입된 총사업비(국비+지방비)의 부문별 분류

- 기반구축과 기술개발 사업비는 주로 제조업, 건설업에 해당하며, 일부 인건비는 직접고용에 소요
- 기업지원사업의 사업비는 사업서비스, 인력양성사업 사업비는 교육서비스에 계상
- 조사된 인건비와 1인당 평균 임금을 이용하여 직접 고용자 수 계산

<표 5-6> 총사업비 구분과 직접 고용자 수

(단위: 백만원, 명)

		2005	2006	2007	2008	2009	합계
1	농림수산품	0	0	0	0	0	0
2	광산품	0	0	0	0	0	0
3	음식료품	0	0	0	0	0	0
4	섬유 및 가죽제품	0	568	20,889	52,308	12,527	86,292
5	목재 및 종이제품	0	0	0	0	0	0
6	인쇄 및 복제	0	0	0	2,002	0	2,002
7	석유 및 석탄제품	0	0	0	0	0	0
8	화학제품	0	0	0	0	0	0
9	비금속광물제품	0	0	0	0	0	0
10	제1차 금속제품	4,415	0	0	0	0	4,415
11	금속제품	5,542	26,356	13,218	15,963	44,096	105,175
12	일반기계	188,784	127,631	77,830	34,910	82,616	511,771
13	전기 및 전자기기	63,938	47,464	51,814	37,021	10,564	210,802
14	정밀기기	62,317	87,678	102,121	35,709	67,651	355,476
15	수송장비	0	36,132	18,453	0	0	54,585
16	기타제조업제품	2,298	1,566	695	20,430	9,741	34,730
17	전력, 가스 및 수도	0	0	0	0	0	0
18	건설	54,032	48,837	34,614	54,215	266	191,964
19	도소매	0	0	0	0	402	402
20	음식점 및 숙박	0	0	0	0	0	0
21	운수 및 보관	0	0	0	0	0	0
22	통신 및 방송	0	142	617	807	1,263	2,829
23	금융 및 보험	0	0	0	0	0	0
24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19,726	18,450	21,168	42,010	57,974	57,974
25	공공행정 및 국방	0	0	0	0	0	0
26	교육 및 보건	11,428	15,378	14,535	30,758	42,385	39,195
27	사회 및 기타서비스	0	0	5,185	1,310	33,308	39,803
28	기타	5,434	4,917	390	5,812	4,070	20,623
투자수요 계		417,915	415,118	361,529	333,255	366,865	1,894,682
인건비 계		42,455	44,115	45,272	83,997	76,990	292,829
직접 고용자 수		1,656	2,375	1,858	4,453	3,810	14,152
총사업비		460,370	459,233	406,801	417,252	443,855	2,187,511

2) 유형별 사업비와 직접고용자 수

○ 조사자료를 근거로 기반구축사업의 사업비 중에서 각 부문에 배분된 사업비(투자 수요)와 직접 고용자를 계산

<표 5-7> 인프라사업의 사업비 구분과 직접 고용자 수

(단위: 백만원, 명)

		2005	2006	2007	2008	2009	합계
1	농림수산품	0	0	0	0	0	0
2	광산품	0	0	0	0	0	0
3	음식료품	0	0	0	0	0	0
4	섬유 및 가죽제품	0	0	0	0	0	0
5	목재 및 종이제품	0	0	0	0	0	0
6	인쇄 및 복제	0	0	0	0	0	0
7	석유 및 석탄제품	0	0	0	0	0	0
8	화학제품	0	0	0	0	0	0
9	비금속광물제품	0	0	0	0	0	0
10	제1차 금속제품	0	0	0	0	0	0
11	금속제품	3,294	26,356	13,218	15,963	18,318	77,148
12	일반기계	104,628	68,550	22,330	19,837	82,616	297,961
13	전기 및 전자기기	62,197	42,165	49,152	13,016	4,953	171,482
14	정밀기기	38,019	67,928	82,485	21,875	58,983	269,291
15	수송장비	0	0	0	0	0	0
16	기타제조업제품	0	0	0	20,430	9,639	30,068
17	전력, 가스 및 수도	0	0	0	0	0	0
18	건설	54,032	48,837	34,614	54,215	266	191,964
19	도소매	0	0	0	0	0	0
20	음식점 및 숙박	0	0	0	0	0	0
21	운수 및 보관	0	0	0	0	0	0
22	통신 및 방송	0	0	0	0	0	0
23	금융 및 보험	0	0	0	0	0	0
24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0	0	0	0	0	0
25	공공행정 및 국방	0	0	0	0	0	0
26	교육 및 보건	0	0	0	0	0	0
27	사회 및 기타서비스	0	0	0	0	0	0
28	기타	0	0	0	0	1,199	1,199
투자수요 계		262,171	253,836	201,798	145,335	175,973	1,039,113
총사업비(국비+지방비)		275,160	271,396	215,495	161,015	197,986	1,121,052
인건비 계		12,989	17,560	13,697	15,680	22,013	81,939
1인당 평균 인건비		23	27	29.3	23.1	25.3	25.4
직접고용자 수		565	650	467	679	870	3,231

○ 동일한 방식으로 기술개발 사업의 사업비를 투자수요와 인건비 및 직접 고용자 수 계산

<표 5-8> 기술개발 사업의 사업비 구분과 직접 고용자 수

(단위: 백만원, 명)

		2005	2006	2007	2008	2009	합계
1	농림수산품	0	0	0	0	0	0
2	광산품	0	0	0	0	0	0
3	음식료품	0	0	0	0	0	0
4	섬유 및 가죽제품	0	568	20,889	52,308	12,527	86,292
5	목재 및 종이제품	0	0	0	0	0	0
6	인쇄 및 복제	0	0	0	2,002	0	2,002
7	석유 및 석탄제품	0	0	0	0	0	0
8	화학제품	0	0	0	0	0	0
9	비금속광물제품	0	0	0	0	0	0
10	제1차 금속제품	4,415	0	0	0	0	4,415
11	금속제품	2,249	0	0	0	25,778	28,027
12	일반기계	84,156	59,081	55,501	15,073	0	213,811
13	전기 및 전자기기	1,740	5,299	2,663	24,006	5,612	39,319
14	정밀기기	24,298	19,750	19,635	13,834	8,668	86,185
15	수송장비	0	36,132	18,453	0	0	54,585
16	기타제조업제품	2,298	1,566	695	0	102	4,661
17	전력, 가스 및 수도	0	0	0	0	0	0
18	건설	0	0	0	0	0	0
19	도소매	0	0	0	0	402	402
20	음식점 및 숙박	0	0	0	0	0	0
21	운수 및 보관	0	0	0	0	0	0
22	통신 및 방송	0	142	617	807	1,263	2,829
23	금융 및 보험	0	0	0	0	0	0
24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0	0	0	0	0	0
25	공공행정 및 국방	0	0	0	0	0	0
26	교육 및 보건	0	6,022	1,855	4,206	3,190	15,273
27	사회 및 기타서비스	0	0	5,185	1,310	33,308	39,803
28	기타	5,434	4,917	390	5,812	2,872	19,424
투자수요 계		124,590	133,476	125,883	119,358	93,723	597,029
총사업비		154,056	160,031	157,458	187,675	148,700	807,920
인건비 계		29,466	26,555	31,575	68,317	54,977	210,891
1인당 평균 인건비		27	15.4	22.7	18.1	18.7	19.3
직접고용자 수		1,091	1,724	1,391	3,774	2,940	10,921

다. 고용효과 분석

(1) 분석절차

○ 사업비를 인건비와 투자사업비로 분류하고 투자사업비는 산업연관표 대분류 28분류로 조정

○ 직접고용자 수 계산

– 총 사업비 중 인건비 지불액 추계

$$\text{사업의 인건비 지불액(SW)} = \frac{\text{조사대상사업의 인건비 총액}}{\text{조사대상사업의 사업비 총액}} \times \text{총사업비}$$

– 1인당 평균 인건비 계산

$$\text{1인당 평균 인건비(W)} = \frac{\text{조사대상사업의 직접 고용자수 합계}}{\text{조사대상사업의 인건비 지불액 합계}}$$

– 사업의 직접 고용자 수 계산

$$\text{사업의 직접 고용자 수} = \frac{SW}{W}$$

○ 고용유발효과(취업유발효과 계산)

– 직접 고용자 수 + 유발고용자 수(산업연관분석)

⑵ 산업연관적 고용효과

1) 사업 전체의 고용효과

○ 2005년~2009년 기간 중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의 수행으로 발생한 직접 고용자 수 14,152명, 유발고용자 수 25,553명으로 고용유발효과는 40,705명

○ 동 기간 중 직접고용자 수(14,152명)에 유발취업자 수(33,249명)를 포함하여 취업유발효과는 47,401명

<표 5-9> 사업의 고용유발효과와 취업유발효과(총괄)

(단위: 명)

		2005	2006	2007	2008	2009	계
	직접고용자 수(A)	1,656	2,375	1,858	4,453	3,810	14,152
	유발고용자 수(B)	5,810	6,056	4,923	4,740	5,024	26,553
고용유발효과(C=A+B)		7,466	8,431	6,781	9,193	8,834	40,705
	직접고용자 수(A)	1,656	2,375	1,858	4,453	3,810	14,152
	유발취업자 수(D)	7,198	7,464	6,114	6,006	6,467	33,249
취업유발효과(E=A+D)		8,854	9,839	7,972	10,459	10,277	47,402

○ 2005년~2009년 기간 중 단위 사업비(10억원)당 고용유발효과는 18.6명, 취업유발효과는 21.6명

– 사업의 고용유발효과 및 취업유발효과는 산업평균에 비해 높은 편

· 최종수요 10억원당 산업전체의 평균적 고용유발효과(2007년 기준) 12.51명, 취업유발효과 19.62명

<표 5-10> 사업비 대비 고용유발효과와 취업유발효과

(단위: 억원, 명/10억원)

	2005	2006	2007	2008	2009	계
총사업비(W) (억원)	4603.8	4,592.4	4091.3	4186.1	4421.4	21,895
고용유발효과 (C/W)(명/10억원)	16.2	18.4	16.6	22.0	20.0	18.6
취업유발효과(D/W)(명/10억원)	19.2	21.4	19.5	25.0	23.2	21.6

○ 2005년~2009년 기간 중 사업의 부문별 고용유발효과 및 취업유발효과를 보면, 일반기계, 정밀기계 등의 기계류, 건설 및 사업서비스, 교육서비스, 도소매 등의 부문에 고용파급 영향이 상대적으로 높음

– 이유는 사업비의 지출구조 상, 기반구축사업과 기술개발사업은 기계류 혹은 건설 등에 대량 지출되며, 인력양성사업과 기업지원서비스 사업은 교육과 사업서비스 부문으로의 지출이 많은 것에 기인

<표 5-11> 사업의 부문별 고용유발효과

(단위: 명)

		2005	2006	2007	2008	2009	계
1	농림수산품	24	25	21	30	25	125
2	광산품	180	169	175	150	162	836
3	음식료품	23	23	17	23	21	107
4	섬유 및 가죽제품	31	36	224	533	151	975
5	목재 및 종이제품	49	48	39	53	44	233
6	인쇄 및 복제	19	17	16	35	23	110
7	석유 및 석탄제품	6	8	6	5	5	30
8	화학제품	195	212	184	159	151	901
9	비금속광물제품	64	60	49	44	25	242
10	제1차 금속제품	173	168	115	80	112	648
11	금속제품	236	370	210	195	355	1,366
12	일반기계	1,201	890	472	232	477	3,272
13	전기 및 전자기기	527	450	400	256	172	1,805
14	정밀기기	555	800	723	264	484	2,826
15	수송장비	24	181	87	15	24	331
16	기타제조업제품	27	28	18	134	69	276
17	전력, 가스 및 수도	29	30	24	22	24	129
18	건설	599	561	368	561	42	2,131
19	도소매	407	419	360	297	311	1,794
20	음식점 및 숙박	142	137	99	127	137	642
21	운수 및 보관	256	252	186	161	170	1,025
22	통신 및 방송	31	31	30	30	35	157
23	금융 및 보험	153	154	123	117	130	677
24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569	618	612	667	825	3,291
25	공공행정 및 국방	6	6	3	3	3	21
26	교육 및 보건	221	298	252	472	639	1,882
27	사회 및 기타서비스	65	65	109	76	405	720
28	기타	0	0	0	0	0	0
	계	5,810	6,056	4,923	4,740	5,024	26,553

주: 직접고용자 수는 제외함

<표 5-12> 사업의 부문별 취업유발효과

(단위: 명)

		2005	2006	2007	2008	2009	계
1	농림수산품	252	246	194	267	226	1,185
2	광산품	195	186	192	164	178	915
3	음식료품	32	32	23	32	29	148
4	섬유 및 가죽제품	37	44	271	645	183	1,180
5	목재 및 종이제품	55	54	45	61	51	266
6	인쇄 및 복제	23	24	23	48	31	149
7	석유 및 석탄제품	6	8	6	5	6	31
8	화학제품	204	222	193	167	158	944
9	비금속광물제품	69	65	53	48	28	263
10	제1차 금속제품	179	172	118	82	116	667
11	금속제품	283	441	249	232	421	1,626
12	일반기계	1,303	962	509	250	515	3,539
13	전기 및 전자기기	544	465	413	264	177	1,863
14	정밀기기	591	849	771	281	516	3,008
15	수송장비	24	185	89	15	24	337
16	기타제조업제품	35	36	24	174	89	358
17	전력, 가스 및 수도	29	30	24	22	24	129
18	건설	604	581	382	583	44	2,194
19	도소매	887	889	768	634	662	3,840
20	음식점 및 숙박	303	295	208	267	287	1,360
21	운수 및 보관	371	368	272	235	250	1,496
22	통신 및 방송	32	32	31	30	36	161
23	금융 및 보험	154	156	125	119	131	685
24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631	679	670	730	904	3,614
25	공공행정 및 국방	6	6	3	3	3	21
26	교육 및 보건	242	327	279	522	706	2,076
27	사회 및 기타서비스	107	110	181	125	671	1,194
28	기타	0	0	0	0	0	0
	계	7,198	7,464	6,114	6,006	6,467	33,249

주: 직접고용자 수는 제외함

2) 사업 유형별 고용효과

○ 2005~2009년 기간 중 사업의 유형별 고용효과(고용유발효과 및 취업유발효과)를 보면 기술개발사업과 기반구축사업이 높음

–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의 1,2차 실행 중 기반구축사업과 기술개발사업이 주력으로 일반기계, 정밀기계, 건설 등에 대한 지출이 규모면에서 큰 것에 기인

<표 5-13> 사업유형별 고용유발효과 및 취업유발효과

(단위: 명)

		2005	2006	2007	2008	2009	계
고용유발효과	기반구축	4,251	4,427	3,246	2,765	3,214	17,903
	기술개발	2,794	3,608	3,080	5,501	4,296	19,280
	기업지원	210	212	233	462	637	1,754
	인력양성	211	183	222	465	686	1,767
	계	7,466	8,430	6,781	9,193	8,833	40,705
취업유발효과	기반구축	5,058	5,253	3,866	3,249	3,820	21,246
	기술개발	3,294	4,118	3,565	6,107	4,882	21,967
	기업지원	253	253	278	551	760	2,095
	인력양성	249	215	264	552	815	2,095
	계	8,854	9,839	7,973	10,459	10,277	47,402

○ 사업비 지출의 고용측면 효율성을 측정하기 위해 사업비 단위(10억원)당 고용효과를 파악하면, 기술개발사업과 인력양성사업의 고용측면 효율성이 높음

- 기술개발사업은 사업비 단위당 고용유발효과가 23.9명/10억원, 취업유발효과가 27.2명/10억원이며, 인력양성사업은 고용유발효과가 17.8명/10억원, 취업유발효과가 21.1명/10억원
- 기반구축사업에 비해 기술개발사업의 사업비 대비 고용효과가 높은 것은 단기간에 다수의 기업(혹은 기관)에게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생산 효율성이 상대적으로 높은데 기인
- 사업규모가 비슷한 기반구축사업의 고용효과가 기술개발사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4개 지역을 제외한 9개 지역에서는 현재 장치 및 설비 구축에 주력하여 있으며, 4개 지역도 기 구축한 장치 및 활용이 아직 초보적인 단계에 있는 것에 기인
- 인력양성사업의 고용측면 사업효율성이 높은 것은 사업내용이 주로 교육과 훈련에 집중되어 있어 교육서비스의 고용파급효과가 높은데 기인

<표 5-14> 사업비 단위당 사업유형별 고용효과

(단위: 명/10억원)

		2005	2006	2007	2008	2009	계
고용유발효과	기반구축	15.4	16.3	15.1	17.2	16.2	16.0
	기술개발	18.1	22.5	19.6	29.3	28.9	23.9
	기업지원	10.6	11.5	11.0	11.0	11.0	11.0
	인력양성	18.5	19.6	17.5	17.5	17.5	17.8
	계	16.2	18.4	16.7	22.0	19.9	18.6
취업유발효과	기반구축	18.4	19.4	17.8	20.0	19.5	18.9
	기술개발	21.4	25.7	22.6	32.5	32.8	27.2
	기업지원	12.8	13.7	12.7	13.1	13.1	13.1
	인력양성	21.8	23.0	20.8	20.8	20.8	21.1
	계	19.2	21.4	19.6	25.1	23.2	21.6

3) 지역별 고용효과

○ 지역별 취업유발효과는 전국 13개 지역 중 대표적으로 8개 지역을 대상

① 지역 내 고용효과

○ 지역 내 취업유발효과는 4개 지역(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을 1999년부터 선도적으로 실시한 지역)이 여타 9개 지역에 비해 높은 편

- 4개 지역(대구, 경남, 광주, 부산)은 동 사업을 통해 2005년~2009년 기간 중 3,500명 이상의 취업파급효과 발생
- 여타지역은 사업이 1차 단계에 있고, 사업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어 지역 내 고용파급효과가 낮은 편

<표 5-15> 지역 내 취업유발효과

(단위: 명)

지역 내		2005	2006	2007	2008	2009	계
1	경남	800	855	920	671	334	3,580
2	광주	670	720	881	758	477	3,507
3	대구	957	950	977	1,066	621	4,571
4	부산	756	770	823	718	347	3,413
5	전북	199	139	133	248	506	1,225
6	충남	120	236	102	175	311	945
7	강원	244	237	178	248	381	1,288
8	제주	202	107	73	160	218	761
	계	3,948	4,015	4,087	4,045	3,195	19,290

○ 사업의 고용효과 효율성을 볼 수 있는 사업비(국비+지방비) 단위(10억원)당 고용효과를 측정(사업비 참조)

<표 5-16> 지역별 사업비

(단위: 억원)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충남	강원	제주	계
사업비(억원)	3,818.7	2,467.6	2,666.0	2,746.7	1,093.1	1,228.5	1,027.4	483.0	15.530.8

○ 동기간 중 사업비 단위(10억원)당 지역 내 취업유발효과는 대구지역이 가장 높으며, 충남지역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

- 대구지역의 지역 내 취업유발효과는 17.1(명/10억원)이며, 충남지역은 7.7(명/10억원)
- 4개 지역 중 경남은 9.4(명/10억원)로 선도지역 중에서 낮은 편이나, 9개 지역 중에서 제주는 18.5(명/10억원)로 상대적으로 높음

<표 5-17> 사업비 단위(10억원)당 지역 내 취업유발효과

(단위: 명/10억원)

		2005	2006	2007	2008	2009	계
1	경남	9.0	10.3	9.2	9.5	8.7	9.4
2	광주	14.1	13.2	14.4	13.4	17.8	14.2
3	대구	16.2	16.4	16.8	17.7	20.0	17.1
4	부산	14.9	12.4	12.4	11.0	11.5	12.4
5	전북	8.5	8.0	10.7	13.6	13.4	11.2
6	충남	7.1	7.3	6.5	9.0	8.1	7.7
7	강원	11.6	12.0	13.0	12.7	13.2	12.5
8	제주	21.7	14.6	13.8	17.4	12.8	15.8
	계	12.4	12.0	12.3	12.7	12.9	12.4

② 전국 파급 고용효과

○ 동 사업의 실시로 발생하는 지역 내 경제활동 증가가 전국으로 파급되는 고용효과를 측정

○ 전국 파급 취업유발효과는 선도지역인 4개 지역이 평균적으로 높은 편이며, 여타지역은 낮은 편

○ 전국 파급 취업유발효과가 가장 높은 지역은 경남지역이며, 제주의 효과는 상대

적으로 저조

- 경남은 2005~2009년 기간 중 6,549명, 제주는 1,059명

<표 5-18> 전국 파급 취업유발효과

(단위: 명)

		2005	2006	2007	2008	2009	계
1	경남	1,456	1,520	1,746	1,221	607	6,549
2	광주	1,070	1,194	1,401	1,232	677	5,574
3	대구	1,408	1,401	1,409	1,514	817	6,548
4	부산	1,084	1,152	1,238	1,178	543	5,194
5	전북	420	309	234	402	814	2,178
6	충남	258	507	237	329	629	1,958
7	강원	452	431	311	411	608	2,212
8	제주	276	157	102	212	314	1,059
	계	6,422	6,669	6,677	6,497	5,007	31,272

○ 사업비 단위(10억원)당 전국 파급 취업유발효과는 대구지역이 가장 높으며, 충남지역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

- 대구지역의 전국 파급 취업유발효과는 24.6(명/10억원)이며, 충남지역은 15.9(명/10억원)
- 4개 지역 중 경남은 17.1(명/10억원)로 선도지역 중에서 낮은 편이나, 9개 지역 중에서 제주는 21.9(명/10억원), 강원은 21.5(명/10억원)로 상대적으로 높은 편

<표 5-19> 사업비 단위(10억원)당 전국 파급 취업유발효과

(단위: 명/10억원)

		2005	2006	2007	2008	2009	계
1	경남	16.3	18.3	17.4	17.3	15.9	17.1
2	광주	22.5	22.0	22.9	21.8	25.3	22.6
3	대구	23.9	24.2	24.2	25.2	26.3	24.6
4	부산	21.3	18.6	18.6	18.1	18.0	18.9
5	전북	17.9	17.7	18.9	22.1	21.5	19.9
6	충남	15.2	15.7	15.2	16.9	16.4	15.9
7	강원	21.5	21.8	22.7	21.1	21.2	21.5
8	제주	29.6	21.3	19.2	23.1	18.3	21.9
	계	20.2	20.0	20.0	20.4	20.2	20.1

③ 지역별 고용효과의 종합

○ 사업 실행에 의한 고용효과의 규모면에서 4개 지역(특히 대구와 경남)이 여타 지역보다 높은 취업유발효과를 나타냄

- 4개 지역 중 대구지역은 지역 내 취업유발효과가 4,571명, 전국파급 취업유발효과가 6,548명으로 높은 편
- 경남지역은 지역 내 취업유발효과는 3,580명, 전국파급 취업유발효과가 6,549명으로 높음
- 이는 사업의 조기시행(1999년부터 시행, 현재는 2차사업 진행 중)으로 사업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것에 기인

○ 사업 시행으로 인한 고용효과의 효율성을 측정할 수 있는 사업비 단위(10억원)당 고용효과를 보면 지역효과는 대구 및 제주가 높고, 전국 파급은 대구, 광주 및 제주가 상대적으로 높음

○ 종합적으로 볼 때, 대구지역의 사업시행은 고용의 규모나 사업의 고용 효율성 측면에서 높고, 제주 지역은 사업의 고용 효율성이 탁월함

<표 5-20> 고용효과가 높은 사업 지역

	고용효과의 규모면 (취업유발효과)	고용효과의 사업 효율성면 (취업유발효과/사업비10억원)
지역고용효과	대구(4,571명)	대구(17.1명/10억원) 제주(15.8명/10억원)
전국고용효과	경남(6,549명) 대구(6,548명)	대구(24.6명/10억원) 광주(22.6명/10억원) 제주(21.9명/10억원)

제2절 미시적 고용효과

가. 분석 방법

(1) 패널임의효과모형(panel random-effect model)에 기초한 분석

○ 이 절에서는 지역산업진흥사업에 참여한 사업체가 고용에서 어떠한 변화를 보이는지를 알아봄으로써 지역산업진흥사업이 사업체라는 미시적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평가하고자 함

○ 후술하듯이 고용보험 DB에서 분석에 필요한 사업체의 2004~2009년 정보를 이용하여 지역산업진흥사업의 고용효과를 추정하게 되므로 여기에서는 패널회귀모형을 분석방법으로 채택함

○ 패널데이터는 시계열의 특성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시간에 걸친 관성(inertia)을 가질 수 있음
- 말하자면 근로자의 채용을 억제하려는 경향을 가진 사업체가 있는가 하면, 근로자의 유출·입이 빈번한 사업체가 있다는 것임
- 이처럼 변수가 시간에 따라 관성이 나타나는 경우는 아래와 같이 표현됨

○ $y_{i,t} = \beta y_{i,t-1} + \gamma D_{i,t} + \delta X_{i.t} + \zeta_t + \eta_i + u_{i,t}$
- 여기에서 $D_{i,t}$는 지역산업진흥사업에 참여하였는지를 나타내는 변수로 참여한 사업체는 1의 값을, 참여하지 않은 사업체는 0의 값을 가지게 됨. 따라서 γ가 지역산업진흥사업의 고용효과를 나타내게 됨
- $X_{i,t}$는 $y_{i,t}$를 결정하는 설명변수 벡터, ζ_t는 시간에 걸쳐 변화하되 개별 사업체 $i(=1,\cdots,I)$ 모두에게 나타나는 효과이므로 일종의 거시경제적 효과라 할 수 있음. η_i는 개별사업체에 나타나는 고유한 효과이나 관찰되지 않으며, $u_{i,t}$는 오차항(disturbance term)에 해당함
- 이때 오차항 $u_{i,t}$는 $u_{i,t} = \pi u_{i,t-1} + \nu_{i,t}$로 오차항에서도 시간에 걸친 관성이 나타나며, $\nu_{i,t}$는 $IID(0,\ \sigma_\nu)$라 할 수 있음

⑵ 성향 점수 짝짓기(propensity score matching)에 기초한 분석 대상 선정

○ 지역산업진흥사업에 참여한 사업체(처리집단, treatment group)가 고용에서 어떠한 변화를 보이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지역산업진흥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사업체(통제집단, control group)와 비교하여야 함
- 문제는 참여 사업체와 비참여 사업체가 임의적으로(randomly) 선정되지 않았다는 점임. 따라서 최대한 두 집단의 특성이 가깝도록 함으로써 지역산업진흥사업의 참여가 가지는 고용효과를 측정하여야 함

○ 이를 위해서 성향 점수 짝짓기(propensity score matching) 방법으로 분석 대

상을 추출하도록 함

○ 지역산업진흥사업에 참여한 경우를 $T=1$, 참여하지 않은 경우를 $T=0$이라 하고, 참여 집단과 미참여(비참여) 집단의 성과를 각각 Y_1, Y_0라 할 때, 정책의 순효과는 다음과 같다고 할 수 있음

- $\Delta = E(Y_1 - Y_0|T=1)$
- 말하자면 참여 집단이 정책에 참여하지 않았을 때 예상되는 성과와 참여한 경우에 얻은 성과를 상호비교하는 것임

○ 하지만 여기에서 $E(Y_0|T=1)$은 실현되지 않았기에 관찰할 수 없는 결과라 할 수 있음

- 따라서 $E(Y_1|T=1)-E(Y_o|T=1)$

$$= \{E(Y_1|T=1)-E(Y_0|T=0)\} - \{E(Y_0|T=0)-E(Y_o|T=1)\}$$

- 여기에서 $E(Y_1|T=1)-E(Y_0|T=0)$가 average treatment effect에 해당하나 $E(Y_0|T=0)-E(Y_o|T=1)$는 이른바 선택편의(self-selection bias)에 해당함
- 이에 따라 unconfoundedness와 common support라는 가정을 이용하여 선택편의를 제거하여 average treatment effect를 추정하게 됨

○ 먼저 지역산업진흥사업에 참여한 사업체 정보로부터 지역산업진흥사업에 참여한 사업체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10개 업종을 선정

- 음식료품제조업, 섬유제품제조업, 화합물·화학제품제조업, 조립금속제품제조업, 기타기계·장비제조업, 기타전기기계·전기변환장치제조업,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제조업, 정보처리 및 기타컴퓨터운영관련업, 연구 및 개발업

○ 고용보험 DB로부터 해당 업종의 2004~2009년 사업체 정보를 얻고, 6년간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여 성향점수를 추정하고, 이로부터 분석대상을 결정

- 성향점수 추정은 처리집단을 1, 통제집단을 0으로 하는 종속변수에 대하여 2004년의 사업체 규모(상시근로자수 0명, 1~4명, 5~9명, 10~29명, 30~49명, 50~99명, 100~299명, 300~499명, 500~999명, 1,000명 이상), 2004~2009년

고용안정지원금액 총액(자연대수치), 사업서비스업(= 1)을 설명변수로 포함하였음

○ 성향 점수 추정을 통하여 유사한 속성을 가진 것으로 분류되는 사업체 3,678개소에 대하여 패널임의효과(panel random-effect) 회귀분석을 실시

- 피설명변수는 상시근로자수(자연대수치), 창출된 연간 일자리 수, 소멸된 연간 일자리 수, 창출된 순일자리 수(= 창출된 일자리 수 - 소멸된 일자리 수)
- 설명변수는 지역산업진흥사업 참여 여부(참여 = 1, 비참여 = 0), 전년도 상시근로자수(자연대수치), 전전년도 상시근로자수(자연대수치), 전년도 고용안정지원금 수급액(자연대수치), 고용보험 성립연도 더미변수, 연간 더미변수, 지역 더미변수(16개 지역), 산업 더미변수(중분류) (※ 창출(소멸)된 (순)일자리 수의 경우는 전년도, 전전년도의 창출된(소멸)된 (순)일자리 수를 설명변수에 포함)

○ 일자리창출량(Job Creation; JC)과 일자리소멸량(Job Decreation; JD)에 대한 정의

- t기 e사업체의 일자리 수를 EMP라고 할 때, 사업체별 일자리창출량(JC)과 일자리소멸량(JD)은 다음과 같음
- $JC_{et} = \Delta EMP_{et}$ if $\Delta EMP_{et} \geq 0$
- $JD_{et} = |\triangle EMP_{et}|$ if $\triangle EMP_{et} < 0$
- 이때 $\triangle EMP_{et} = EMP_{et} - EMP_{e(t-1)}$
- 이에 따라 순일자리창출량(Net Job Creation; NJC)은 $NJC_{et} = JC_{et} - JD_{et}$임

○ 고용보험 DB를 이용하는 경우에 일자리창출량은 해당 연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근로자수로 하며, 일자리소멸량은 해당 연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적을 상실한 근로자수로 함

- 따라서 순일자리창출량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근로자수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근로자수를 뺀 수치가 됨

○ 일자리 수의 변화는 상시근로자수의 변화를 관찰하는 것과 순일자리창출량의 변화를 관찰함으로써 가능

- 상시근로자수는 연말이라는 시점에 해당 사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수라는 의미에서 저량(stock) 개념에 해당하므로 상시근로자수의 변화는 유량(flow)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음
- 순일자리창출량은 1년간 해당 사업체의 일자리창출량과 일자리소멸량을 고려한 수치이므로 유량(flow) 개념에 해당함
- 정의에 따르면, '(t − 1)기 말(혹은 t기 초)의 상시근로자수 + t기의 순일자리창출량 = t기 말(혹은 (t + 1)기 초)의 상시근로자수'가 될 것임
- 고용보험 DB의 상시근로자수가 반드시 해당 연도 말이나 초의 근로자수와 일치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이에 가까울 것으로 추측됨. 따라서 이 절에서는 일자리 수의 변화를 상시근로자수와 순일자리창출량을 중심으로 보되 보조적으로 일자리창출량과 일자리소멸량을 함께 살펴보기로 함
- 일자리의 안정성이라고 하는 점에서는 단순히 순일자리창출량으로는 알 수 없으므로 상시근로자를 중심으로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음

나. 미시적 고용효과 분석 결과

⑴ 기초통계량

○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에 참여한 사업체(처리집단)의 상시근로자수는 131~141명 수준으로 2004~2009년 동안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 평균 4~9%의 증가율을 보이나 2008년의 경우에는 평균 16.7%의 증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지역산업진흥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사업체(통제집단)의 상시근로자수는 108명~113명 정도이며, 변화율은 4~8%의 증가를 보이고 있음. 2008년과 2009년에 각각 평균 15.4%와 14.0%의 증가율을 보임

○ 일자리창출의 경우,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에 참여한 사업체는 33~43명 수준이었으며, 지역산업진흥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사업체는 25~33명 수준이었음
- 일자리소멸의 경우, 지역산업진흥사업에 참여한 사업체는 31~36명 수준이었으며, 지역산업진흥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사업체는 27~31명의 수준을 보임
- 대체로 지역산업진흥사업에 참여한 사업체가 일자리창출에서는 약간 큰 수치를 보이나 일자리소멸에서는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고 할 수 있음

- 평균적 수치로 본다면, 지역산업진흥사업에 참여한 사업체의 경우에 일자리의 창출과 소멸이 참여하지 않은 사업체에 비해 크다고 할 수 있음
- 이에 따라 순일자리창출에서는 지역산업진흥사업에 참여한 사업체가 참여하지 않은 사업체보다 순일자리창출이 평균적으로 약간 큰 것으로 나타남. 하지만 2008년과 2009년에는 참여 사업체와 비참여 사업체 모두 순일자리가 감소하는 결과를 보임

<표 5-21> 상시근로자수・일자리창출・일자리소멸・순일자리창출 추이(2004~2009년)

	처리집단(N = 386)		통제집단(N = 6,114)	
상시근로자수(명)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2004	131.06	208.71	110.52	287.60
2005	134.65	210.70	108.36	234.03
2006	138.85	237.45	110.42	243.92
2007	138.65	237.62	111.20	262.87
2008	142.12	240.56	113.15	361.24
2009	142.46	246.72	111.90	277.13
상시근로자수변화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2005	9.21	34.04	5.40	33.33
2006	4.83	24.00	4.99	52.23
2007	4.89	63.71	8.04	90.72
2008	16.72	127.48	15.37	194.33
2009	6.59	73.17	14.03	144.21
일자리창출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2004	43.91	96.55	33.20	85.21
2005	40.10	65.67	32.82	80.61
2006	36.23	59.49	31.61	70.23
2007	35.04	55.29	28.74	66.19
2008	34.76	53.31	28.34	75.38
2009	32.54	72.44	25.17	76.54
일자리소멸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2004	30.87	46.44	28.81	72.04
2005	34.34	53.55	30.28	66.41
2006	33.95	49.36	30.95	70.65
2007	33.94	51.56	28.51	61.98
2008	36.17	58.41	29.25	70.99
2009	33.35	58.71	27.03	73.24
순일자리창출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2004	13.05	77.94	4.38	47.69
2005	5.76	40.51	2.54	50.82
2006	2.28	30.25	0.66	46.89
2007	1.10	28.04	0.22	38.98
2008	−1.40	24.69	−0.91	45.69
2009	−0.81	33.92	−1.86	41.18

⑵ 분석 결과

1) 상시근로자 수 변화의 고용효과

○ 지역산업진흥사업 참가 상시근로자수의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다시 말해서 상시근로자수의 변화로 고용효과를 추정하는 경우에는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이 고용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진다고 할 수 있음

- 고용안정지원금을 수급한 사업체의 경우도 상시근로자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고용안정지원금이 1% 증가할 때, 상시근로자수는 0.002%는 증가하는 관계를 보이고 있음. 다만 이 연구에서 이용한 고용안정지원금액은 해당 사업체가 받은 모든 고용안정지원금을 합한 것으로 어떠한 사업을 통하여 지원금을 받았는지는 알 수 없음. 따라서 이 결과의 해석은 유보하기로 함
- 고용보험 가입 연도가 오랜 사업체의 경우에 상시근로자가 최근 연도 가입 사업체보다 적은 편이며, 2009년과 비교할 때 2006년의 상시근로자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2008년말의 글로벌 금융위기가 일정 정도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임. 이는 상술한 기초통계량에서도 확인된 결과임
- 지역별로는 부산을 기준으로 할 때, 서울이 상시근로자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업종별로는 음식료품제조업을 기준으로 볼 때, 연구 및 개발업과 정보처리 및 기타컴퓨터운영관련업은 상시근로자수가 많은 업종이나 전자부품·영상·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과 섬유제품제조업으로 상시근로자가 적은 것으로 나타남
- 그리고 분석에 필요한 모든 변수는 고용보험 DB에서 추출하고 있어 사업체의 노동수요를 나타내는 변수가 그다지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하며, 향후 사업체 관련 정보의 추가가 가능하게 된다면, 분석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도 유의하여야 함

○ 다음으로 지역산업진흥사업 참여가 업종, 지역 등의 특성에 따라 달리 나타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지역산업진흥사업 참여 여부 더미변수와 업종, 지역 등의 더미변수에 대한 교차(interaction) 더미를 포함하였음

- 계수 추정치만으로 본다면, 사업서비스업(연구 및 개발업과 정보처리 및 기타컴퓨터운영관련업)은 고용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결과임. 따라서 제조업과 사업서비스업 사이에 유의한 차이는 없다고

할 수 있음

- 마찬가지로 지역산업진흥사업 1차사업에 참여한 부산, 대구, 광주, 경남 지역의 사업체가 다른 지역과 비교할 때, 교차더미변수의 추정치 결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 따라서 1차사업에 참여한 경우와 이후에 참여한 경우에 고용효과의 차이는 없다고 할 수 있음
- 지역산업진흥사업 참여와 고용안정지원금 수급이 가지는 시너지 효과를 추정하기 위하여 고용안정지원금 수급액과 지역산업진흥사업 참여의 교차더미변수를 포함하여보았으나 추정치 결과가 유의하지 않아 시너지 효과는 나타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음

2) 일자리창출·소멸 및 순일자리창출의 고용효과

○ 일자리창출량, 일자리소멸량, 순일자리창출량은 지역산업진흥사업에 참여한 사업체가 그렇지 않은 사업체와 비교할 때, 차이가 나타나지 않음

- 이로 볼 때, 고용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지역산업진흥사업의 고용효과는 달라지며, 고용보험 DB의 상시근로자수를 중심으로 고용 효과를 살펴보는 경우에는 고용효과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음
- 참고로 순일자리창출량을 종속변수로 한 분석 결과에서 모형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R-square가 0.036으로 낮다는 사실에 유의하여야 함

○ 이 연구에서 이용한 고용안정지원금액은 해당 사업체가 받은 모든 고용안정지원금을 합한 것으로 어떠한 사업을 통하여 지원금을 받았는지는 알 수 없음

- 따라서 고용안정지원금이 일자리소멸량에서 양의 효과를 보이고, 순일자리창출량에서 음의 부호를 보인 것은 고용안정지원금의 성격을 명확히 밝혀내야만, 이 결과의 해석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 일자리창출량을 종속변수로 한 분석 결과에서 제조업과 비교할 때, 사업서비스업(연구 및 개발업과 정보처리 및 기타컴퓨터운영관련업)의 일자리창출량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는 앞의 고용효과에서 보이지 않던 현상이라 할 수 있음

<표 5-22> 상시근로자수에 대한 분석결과 1(N = 6,500(그룹), 26,000(표본수))

	Coefficient	Standard Error	P>z
상수	0.106	0.025	***
사업참여	0.030	0.010	***
고용안정지원금(자연대수치)	0.002	0.000	***
전년도 상시근로자수(자연대수치)	0.770	0.006	***
전전년도 상시근로자수(자연대수치)	0.202	0.006	***
고용보험 가입 연도(1995년)	−0.052	0.018	***
고용보험 가입 연도(1996년)	−0.036	0.023	−
고용보험 가입 연도(1997년)	−0.077	0.022	***
고용보험 가입 연도(1998년)	−0.050	0.018	***
고용보험 가입 연도(1999년)	−0.021	0.020	−
고용보험 가입 연도(2000년)	−0.016	0.020	−
고용보험 가입 연도(2001년)	−0.037	0.021	*
고용보험 가입 연도(2002년)	−0.042	0.023	*
고용보험 가입 연도(2003년)	−0.031	0.024	−
2006년 더미	0.033	0.007	***
2007년 더미	0.008	0.007	
2008년 더미	0.009	0.007	
서울	0.031	0.012	**
대구	−0.005	0.013	−
인천	−0.003	0.012	−
광주	0.014	0.019	−
대전	0.018	0.020	−
울산	0.022	0.017	−
경기	0.003	0.010	−
강원	−0.026	0.026	−
충북	0.029	0.015	*
충남	0.005	0.014	−
전북	0.012	0.017	−
전남	0.037	0.024	−
경북	0.006	0.012	−
경남	−0.001	0.011	−
제주	0.156	0.133	−
섬유제품제조업	−0.084	0.013	***
화합물·화학제품제조업	0.014	0.012	−
조립금속제품제조업	0.010	0.012	−
기타기계·장비제조업	0.004	0.011	−
기타전기기계·전기변환장치제조업	−0.001	0.013	−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	−0.030	0.011	***
자동차 및 트레일러제조업	0.015	0.011	
정보처리 및 기타컴퓨터운영관련업	0.027	0.014	**
연구 및 개발업	0.076	0.024	***

주: * p < 0.10, ** p < 0.05, *** p < 0.01, R−square: 0.8822

<표 5-23> 상시근로자수에 대한 분석결과 2(N = 6,500(그룹), 26,000(표본수))

	Coefficient	Standard Error	P>z
상수	0.105	0.025	***
사업참여	0.051	0.019	***
사업참여 × 사업서비스업	−0.050	0.036	−
사업참여 × 1차사업 참여	−0.014	0.021	−
고용안정지원금(자연대수치)	0.002	0.000	***
사업참여 × 고용안정지원금(자연대수치)	−0.001	0.001	−
전년도 상시근로자수(자연대수치)	0.770	0.006	***
전전년도 상시근로자수(자연대수치)	0.202	0.006	***
고용보험 가입 연도(1995년)	−0.052	0.018	***
고용보험 가입 연도(1996년)	−0.036	0.023	−
고용보험 가입 연도(1997년)	−0.076	0.022	***
고용보험 가입 연도(1998년)	−0.050	0.018	***
고용보험 가입 연도(1999년)	−0.021	0.020	−
고용보험 가입 연도(2000년)	−0.017	0.020	−
고용보험 가입 연도(2001년)	−0.037	0.021	*
고용보험 가입 연도(2002년)	−0.041	0.023	*
고용보험 가입 연도(2003년)	−0.030	0.024	−
2006년 더미	0.033	0.007	***
2007년 더미	0.008	0.007	−
2008년 더미	0.009	0.007	−
서울	0.029	0.013	**
대구	−0.004	0.013	−
인천	−0.004	0.012	−
광주	0.014	0.019	−
대전	0.017	0.020	−
울산	0.021	0.017	−
경기	0.003	0.010	−
강원	−0.028	0.026	−
충북	0.028	0.015	*
충남	0.004	0.014	−
전북	0.011	0.017	−
전남	0.035	0.024	−
경북	0.006	0.012	−
경남	0.000	0.011	−
제주	0.156	0.133	−
섬유제품제조업	−0.084	0.013	***
화합물·화학제품제조업	0.014	0.012	−
조립금속제품제조업	0.010	0.012	−
기타기계·장비제조업	0.004	0.011	−
기타전기기계·전기변환장치제조업	−0.001	0.013	−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	−0.030	0.011	***
자동차 및 트레일러제조업	0.015	0.011	−
정보처리 및 기타컴퓨터운영관련업	0.030	0.014	**
연구 및 개발업	0.081	0.024	***

주: * p < 0.10, ** p < 0.05, *** p < 0.01, R−square: 0.8822

<표 5-24> 일자리창출량에 대한 분석결과 1(N = 6,500(그룹), 26,000(표본수))

	Coefficient	Standard Error	P>z
상수	79.303	4.038	***
사업참여	0.839	1.194	-
고용안정지원금(자연대수치)	-0.030	0.035	-
전년도 일자리창출량	0.495	0.006	***
전전년도 일자리창출량	0.230	0.006	***
고용보험 가입 연도(1995년)	-4.400	2.140	**
고용보험 가입 연도(1996년)	-2.551	2.678	-
고용보험 가입 연도(1997년)	-3.844	2.596	-
고용보험 가입 연도(1998년)	-3.868	2.146	*
고용보험 가입 연도(1999년)	-2.226	2.305	-
고용보험 가입 연도(2000년)	-3.673	2.286	-
고용보험 가입 연도(2001년)	-4.381	2.448	*
고용보험 가입 연도(2002년)	-2.610	2.676	-
고용보험 가입 연도(2003년)	-3.412	2.811	-
상시근로자수 0명	-88.952	31.133	***
상시근로자수 1~4명	-69.756	4.070	***
상시근로자수 5~9명	-71.705	3.520	***
상시근로자수 10~29명	-70.100	3.097	***
상시근로자수 30~49명	-69.050	3.076	***
상시근로자수 50~99명	-66.785	3.039	***
상시근로자수 100~299명	-63.964	2.969	***
상시근로자수 300~499명	-55.356	3.122	***
상시근로자수 500~999명	-48.866	3.155	***
2006년 더미	2.842	0.779	***
2007년 더미	0.903	0.773	***
2008년 더미	2.247	0.775	***
서울	3.343	1.458	**
대구	0.802	1.474	-
인천	-0.148	1.443	-
광주	0.170	2.199	-
대전	-0.973	2.306	-
울산	0.243	1.964	-
경기	-0.106	1.189	-
강원	-3.662	3.084	-
충북	-2.693	1.781	-
충남	-1.587	1.668	-
전북	-0.404	1.929	-
전남	-2.396	2.832	-
경북	-0.795	1.446	-
경남	0.114	1.325	-
제주	3.184	15.523	-
섬유제품제조업	-6.024	1.478	***
화합물·화학제품제조업	-4.869	1.353	***
조립금속제품제조업	-5.114	1.374	***
기타기계·장비제조업	-4.092	1.244	***
기타전기기계·전기변환장치제조업	-4.346	1.541	***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	-6.097	1.290	***
자동차 및 트레일러제조업	-7.109	1.243	***
정보처리 및 기타컴퓨터운영관련업	-2.311	1.589	-
연구 및 개발업	12.911	2.781	***

주: * p < 0.10, ** p < 0.05, *** p < 0.01, R-square: 0.6295

<표 5-25> 일자리창출량에 대한 분석결과 2(N = 6,500(그룹), 26,000(표본수))

	Coefficient	Standard Error	P>z
상수	79.486	4.042	***
사업참여	0.654	2.205	-
사업참여 × 사업서비스업	9.261	4.198	**
사업참여 × 1차사업 참여	-0.842	2.447	-
고용안정지원금(자연대수치)	-0.028	0.036	-
사업참여 × 고용안정지원금(자연대수치)	-0.009	0.142	-
전년도 일자리창출량	0.495	0.006	***
전전년도 일자리창출량	0.230	0.006	***
고용보험 가입 연도(1995년)	-4.468	2.140	**
고용보험 가입 연도(1996년)	-2.601	2.678	-
고용보험 가입 연도(1997년)	-3.849	2.596	-
고용보험 가입 연도(1998년)	-3.894	2.145	*
고용보험 가입 연도(1999년)	-2.302	2.305	-
고용보험 가입 연도(2000년)	-3.648	2.286	-
고용보험 가입 연도(2001년)	-4.482	2.449	*
고용보험 가입 연도(2002년)	-2.706	2.676	-
고용보험 가입 연도(2003년)	-3.500	2.811	-
상시근로자수 0명	-87.656	31.137	***
상시근로자수 1~4명	-69.805	4.070	***
상시근로자수 5~9명	-71.814	3.520	***
상시근로자수 10~29명	-70.166	3.097	***
상시근로자수 30~49명	-69.116	3.076	***
상시근로자수 50~99명	-66.824	3.039	***
상시근로자수 100~299명	-63.987	2.969	***
상시근로자수 300~499명	-55.482	3.122	***
상시근로자수 500~999명	-49.068	3.158	***
2006년 더미	2.846	0.778	***
2007년 더미	0.906	0.773	-
2008년 더미	2.250	0.775	***
서울	3.552	1.468	**
대구	0.614	1.477	-
인천	-0.263	1.447	-
광주	0.199	2.200	-
대전	-1.245	2.327	-
울산	0.163	1.982	-
경기	-0.202	1.195	-
강원	-3.721	3.091	-
충북	-2.822	1.794	-
충남	-1.704	1.684	-
전북	-0.505	1.940	-
전남	-2.462	2.844	-
경북	-0.945	1.456	-
경남	0.132	1.326	-
제주	3.038	15.523	-
섬유제품제조업	-5.966	1.478	***
화합물·화학제품제조업	-4.864	1.353	***
조립금속제품제조업	-5.102	1.374	***
기타기계·장비제조업	-4.040	1.244	***
기타전기기계·전기변환장치제조업	-4.310	1.541	***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	-6.077	1.290	***
자동차 및 트레일러제조업	-7.055	1.243	***
정보처리 및 기타컴퓨터운영관련업	-2.822	1.606	*
연구 및 개발업	11.615	2.840	***

주: * p < 0.10, ** p < 0.05, *** p < 0.01, R-square: 0.6296

<표 5-26> 일자리소멸량에 대한 분석결과 1(N = 6,500(그룹), 26,000(표본수))

	Coefficient	Standard Error	P>z
상수	127.847	3.803	***
사업참여	0.425	1.143	-
고용안정지원금(자연대수치)	0.120	0.034	***
전년도 일자리소멸량	0.476	0.007	***
전전년도 일자리소멸량	0.207	0.006	***
고용보험 가입 연도(1995년)	-8.986	2.046	***
고용보험 가입 연도(1996년)	-5.590	2.562	**
고용보험 가입 연도(1997년)	-7.085	2.484	***
고용보험 가입 연도(1998년)	-5.621	2.052	***
고용보험 가입 연도(1999년)	-4.935	2.205	**
고용보험 가입 연도(2000년)	-5.937	2.186	***
고용보험 가입 연도(2001년)	-5.810	2.343	**
고용보험 가입 연도(2002년)	-4.397	2.560	*
고용보험 가입 연도(2003년)	-6.307	2.690	**
상시근로자수 0명	-127.738	29.796	***
상시근로자수 1~4명	-119.079	3.845	***
상시근로자수 5~9명	-120.607	3.309	***
상시근로자수 10~29명	-118.128	2.899	***
상시근로자수 30~49명	-115.527	2.883	***
상시근로자수 50~99명	-111.994	2.852	***
상시근로자수 100~299명	-104.129	2.789	***
상시근로자수 300~499명	-91.051	2.940	***
상시근로자수 500~999명	-74.072	2.990	***
2006년 더미	3.759	0.745	***
2007년 더미	0.748	0.740	-
2008년 더미	2.690	0.742	***
서울	0.626	1.396	-
대구	0.460	1.411	-
인천	-0.131	1.381	-
광주	-0.236	2.105	-
대전	-3.460	2.207	-
울산	-2.492	1.880	-
경기	-0.197	1.139	-
강원	-4.598	2.952	-
충북	-1.732	1.705	-
충남	-0.269	1.596	-
전북	-1.700	1.847	-
전남	-4.413	2.711	-
경북	-2.561	1.384	*
경남	-0.040	1.269	-
제주	-9.437	14.861	-
섬유제품제조업	-5.418	1.415	***
화합물·화학제품제조업	-7.433	1.297	***
조립금속제품제조업	-4.102	1.317	***
기타기계·장비제조업	-3.093	1.192	***
기타전기기계·전기변환장치제조업	-4.805	1.476	***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	-3.235	1.235	***
자동차 및 트레일러제조업	-6.397	1.191	***
정보처리 및 기타컴퓨터운영관련업	-2.226	1.521	-
연구 및 개발업	4.179	2.662	-

주: * p < 0.10, ** p < 0.05, *** p < 0.01, R-square: 0.6299

<표 5-27> 일자리소멸량에 대한 분석결과 2(N = 6,500(그룹), 26,000(표본수))

	Coefficient	Standard Error	P>z
상수	127.929	3.807	***
사업참여	1.687	2.112	-
사업참여 × 사업서비스업	3.168	4.020	-
사업참여 × 1차사업 참여	-1.198	2.342	-
고용안정지원금(자연대수치)	0.127	0.035	***
사업참여 × 고용안정지원금(자연대수치)	-0.107	0.136	-
전년도 일자리소멸량	0.476	0.007	***
전전년도 일자리소멸량	0.207	0.006	***
고용보험 가입 연도(1995년)	-9.017	2.046	***
고용보험 가입 연도(1996년)	-5.634	2.563	**
고용보험 가입 연도(1997년)	-7.069	2.484	***
고용보험 가입 연도(1998년)	-5.639	2.053	***
고용보험 가입 연도(1999년)	-4.962	2.205	**
고용보험 가입 연도(2000년)	-5.948	2.186	***
고용보험 가입 연도(2001년)	-5.846	2.343	**
고용보험 가입 연도(2002년)	-4.437	2.561	*
고용보험 가입 연도(2003년)	-6.347	2.691	**
상시근로자수 0명	-127.222	29.801	***
상시근로자수 1~4명	-119.117	3.846	***
상시근로자수 5~9명	-120.676	3.310	***
상시근로자수 10~29명	-118.184	2.899	***
상시근로자수 30~49명	-115.584	2.883	***
상시근로자수 50~99명	-112.030	2.852	***
상시근로자수 100~299명	-104.159	2.789	***
상시근로자수 300~499명	-91.129	2.941	***
상시근로자수 500~999명	-74.226	2.993	***
2006년 더미	3.762	0.745	***
2007년 더미	0.752	0.740	-
2008년 더미	2.692	0.742	***
서울	0.668	1.405	-
대구	0.412	1.414	-
인천	-0.207	1.385	-
광주	-0.244	2.106	-
대전	-3.654	2.227	-
울산	-2.615	1.898	-
경기	-0.266	1.144	-
강원	-4.684	2.959	-
충북	-1.854	1.718	-
충남	-0.398	1.612	-
전북	-1.807	1.857	-
전남	-4.508	2.723	*
경북	-2.676	1.393	*
경남	-0.005	1.270	-
제주	-9.514	14.862	-
섬유제품제조업	-5.393	1.415	***
화합물·화학제품제조업	-7.428	1.297	***
조립금속제품제조업	-4.084	1.317	***
기타기계·장비제조업	-3.063	1.192	***
기타전기기계·전기변환장치제조업	-4.779	1.476	***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	-3.221	1.235	***
자동차 및 트레일러제조업	-6.374	1.192	***
정보처리 및 기타컴퓨터운영관련업	-2.397	1.538	***
연구 및 개발업	3.634	2.719	***

주: * p < 0.10, ** p < 0.05, *** p < 0.01, R-square: 0.6299

<표 5-28> 순일자리창출량에 대한 분석결과 1(N = 6,500(그룹), 26,000(표본수))

	Coefficient	Standard Error	P>z
상수	−8.476	3.431	**
사업참여	1.397	1.146	−
고용안정지원금(자연대수치)	−0.074	0.034	**
전년도 순일자리창출량	0.134	0.006	***
전전년도 순일자리창출량	0.054	0.006	***
고용보험 가입 연도(1995년)	−5.050	2.056	**
고용보험 가입 연도(1996년)	−4.650	2.571	*
고용보험 가입 연도(1997년)	−4.613	2.493	*
고용보험 가입 연도(1998년)	−4.957	2.060	**
고용보험 가입 연도(1999년)	−3.676	2.213	*
고용보험 가입 연도(2000년)	−5.114	2.194	**
고용보험 가입 연도(201년)	−7.392	2.353	***
고용보험 가입 연도(2002년)	−5.775	2.570	**
고용보험 가입 연도(2003년)	−5.350	2.700	**
상시근로자수 0명	−0.699	29.828	−
상시근로자수 1~4명	12.799	3.529	***
상시근로자수 5~9명	11.899	2.934	***
상시근로자수 10~29명	11.748	2.463	***
상시근로자수 30~49명	11.369	2.463	***
상시근로자수 50~99명	11.394	2.456	***
상시근로자수 100~299명	8.506	2.459	***
상시근로자수 300~499명	5.822	2.740	**
상시근로자수 500~999명	1.364	2.858	−
2006년 더미	1.528	0.748	**
2007년 더미	1.488	0.742	**
2008년 더미	0.404	0.744	−
서울	3.596	1.400	***
대구	0.502	1.414	−
인천	0.768	1.385	−
광주	1.139	2.111	−
대전	1.812	2.213	−
울산	2.096	1.885	−
경기	0.674	1.142	−
강원	0.464	2.959	−
충북	−0.782	1.710	−
충남	−0.057	1.601	−
전북	1.949	1.852	−
전남	2.252	2.717	−
경북	0.950	1.388	−
경남	0.303	1.272	−
제주	18.385	14.899	−
섬유제품제조업	−0.708	1.418	−
화합물·화학제품제조업	3.643	1.296	***
조립금속제품제조업	1.206	1.319	−
기타기계·장비제조업	0.473	1.193	−
기타전기기계·전기변환장치제조업	1.888	1.478	−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	−3.297	1.238	***
자동차 및 트레일러제조업	0.522	1.192	−
정보처리 및 기타컴퓨터운영관련업	4.329	1.526	***
연구 및 개발업	14.677	2.670	***

주: * p < 0.10, ** p < 0.05, *** p < 0.01, R−square: 0.0363

<표 5-29> 순일자리창출량에 대한 분석결과 2(N = 6,500(그룹), 26,000(표본수))

	Coefficient	Standard Error	P>z
상수	−8.376	3.435	**
사업참여	1.833	2.118	−
사업참여 × 사업서비스업	3.502	4.030	−
사업참여 × 1차사업 참여	−1.101	2.349	−
고용안정지원금(자연대수치)	−0.073	0.035	**
사업참여 × 고용안정지원금(자연대수치)	−0.007	0.136	−
전년도 순일자리창출량	0.134	0.006	***
전전년도 순일자리창출량	0.054	0.006	***
고용보험 가입 연도(1995년)	−5.078	2.056	**
고용보험 가입 연도(1996년)	−4.680	2.572	*
고용보험 가입 연도(1997년)	−4.605	2.493	*
고용보험 가입 연도(1998년)	−4.969	2.060	**
고용보험 가입 연도(1999년)	−3.703	2.213	*
고용보험 가입 연도(2000년)	−5.110	2.195	**
고용보험 가입 연도(2001년)	−7.429	2.353	***
고용보험 가입 연도(2002년)	−5.818	2.570	**
고용보험 가입 연도(2003년)	−5.393	2.701	**
상시근로자수 0명	−0.175	29.835	−
상시근로자수 1~4명	12.779	3.529	***
상시근로자수 5~9명	11.855	2.934	***
상시근로자수 10~29명	11.724	2.464	***
상시근로자수 30~49명	11.345	2.464	***
상시근로자수 50~99명	11.384	2.456	***
상시근로자수 100~299명	8.501	2.459	***
상시근로자수 300~499명	5.770	2.741	**
상시근로자수 500~999명	1.256	2.862	−
2006년 더미	1.529	0.748	**
2007년 더미	1.489	0.742	**
2008년 더미	0.405	0.744	−
서울	3.639	1.409	***
대구	0.439	1.417	−
인천	0.689	1.389	−
광주	1.153	2.111	−
대전	1.612	2.233	−
울산	1.981	1.902	−
경기	0.601	1.147	−
강원	0.378	2.966	−
충북	−0.900	1.722	−
충남	−0.177	1.617	−
전북	1.846	1.862	−
전남	2.147	2.729	−
경북	0.840	1.397	−
경남	0.325	1.273	−
제주	18.289	14.900	−
섬유제품제조업	−0.688	1.418	−
화합물·화학제품제조업	3.643	1.296	***
조립금속제품제조업	1.212	1.319	−
기타기계·장비제조업	0.502	1.194	−
기타전기기계·전기변환장치제조업	1.907	1.478	−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	−3.290	1.238	***
자동차 및 트레일러제조업	0.539	1.192	−
정보처리 및 기타컴퓨터운영관련업	4.138	1.543	***
연구 및 개발업	14.156	2.727	***

주: * p < 0.10, ** p < 0.05, *** p < 0.01, R−square: 0.0364

3) 미시적 분석결과의 종합

○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은 상시근로자수의 증가에 기여(계수값: 0.051)하고 있음

- 그러나 사업참여는 일시적으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지만, 사업참여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아 사업종료 후에는 일자리소멸을 유도하여 순고용효과는 크지 않은 편(특히 기술개발사업 지원은 업체당 1~2년인 경우가 대부분)

제6장 평가 결과와 정책 제언

제1절 평가 결과의 종합

가. 사업의 실적 및 기대 효과

⑴ 지역전략산업의 하드웨어적 혁신인프라 구축 완료

○ 동 사업을 통해 지역전략산업의 발전 및 기업지원의 기초가 되는 H/W적 혁신 인프라를 전국에 광범위하게 구축하였음

- 2003∽08년 간 82개의 인프라 구축사업 추진
  · 9개 지역: 26개, 4개 2단계: 26개, 혁신기반구축: 30개
- 장비 2,900건 구축(3,842억원 규모), 창업보육공간 134,578㎡ 확보
- 이런 하드웨어는 대부분 산업이 집적된 지역에 설치되어 클러스터 형성을 위한 구심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음

⑵ 지역기업의 수요를 현장밀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전문인력 확보

○ 지역특화센터에 우수한 전문인력을 구축

- 총 1,057명(박사 259, 석사 329, 학사 469)에 달함
  · 대부분 석·박사급이거나 기업의 현장경험 풍부한 고급 기술인력

○ 지역산업인력양성은 일부 지역[5]에서만 추진되었으나, 최근 전국으로 확대하였음

- 전략산업 분야 현장인력 및 취업연계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영함으로써 지역산업 인력의 고급화 및 지역 정착을 유도하였음

5) 부산 신발, 대구 섬유생물, 경남 기계 등

– 이를 통해 지역과 중앙이 공동으로 해당 지역전략산업의 인력수급 불일치를 해소하고 고용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최적의 사업을 도출하였음

⑶ 기업지원의 허브기관 형성으로 산업클러스터 발전에 기여

○ 향후 지역특화센터는 지역전략산업 부문의 기업지원을 위한 허브기관으로서의 역할이 기대됨

– 기획단-특화센터-기술개발의 패키지형 지원체계의 거점기관으로서 지역전략산업 육성에서 핵심적 역할 수행하고 있고, 앞으로 그 역할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됨

– 특히 산업낙후지역인 강원, 전남, 전북 등에서 전략산업 클러스터 형성 및 발전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실질적인 육성 주체로 부상함으로써 전략산업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고 있음

⑷ 지역에 대한 R&D 지원을 통해 기술혁신의 저변 확대

○ 그 간 중앙단위의 사업에서 배제되던 지역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기업들의 기술혁신 역량이 제고되고 있음

– 지역산업 기술개발사업으로 지원된 총 과제수의 88.6%가 전국단위 기술개발사업에서 한 번도 지원받지 못한 기업에 지원되었음

– 지원 결과, 전국단위사업에 비해 높은 수준의 사업화 성공률을 달성함

· 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의 사업화 성공률 47.8%, 전국단위 기술개발사업의 평균 성공률인 42.2%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음('07.10 ITEP)

나. 고용영향 분석 및 평가

○ 산업연관적 고용영향 분석을 한 결과, 동 사업의 고용유발효과는 전체 산업 평균에 비해 높은 편

– 고용유발효과 40,705명(직접고용자수 14,152명, 유발고용자수 26,553명)

– 기반구축사업 17,903명, 기술개발사업 19,280명, 기업지원사업 1,754명, 인력양성사업 1,767명

– 사업비 10억원당 고용유발효과는 전체사업이 18.61명이나 최종수요 10억원당

산업전체의 평균적 고용유발효과(2007년 기준) 12.51명

○ 취업유발효과의 규모면이나 사업비 단위당 취업유발효과는 지역간 편차가 존재

- 4개 지역(대구, 경남)이 여타 지역보다 높은 취업유발효과를 보임. 대구(지역 내 취업유발 4,571명, 전국파급취업유발 6,548명), 경남(지역 내 취업유발 3,580명, 전국파급취업유발 6,549명)
- 사업비 10억원당 취업유발효과를 보면 지역 내 효과는 대구 및 제주가 높고, 전국파급효과는 대구, 광주 및 제주가 높은 편

○ 미시적 고용영향 분석을 PSM으로 실행한 결과, 사업참여는 고용(상시근로자수 기준)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

- 참여 사업체 중 사업서비스 업종은 일자리 창출효과 있음
- 그러나 사업참여는 일시적으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지만, 사업기간이 짧을 경우 일자리 소멸을 유도하여 순고용효과는 크지 않음

다. 고용영향 평가 실태조사

⑴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 목표의 적합성 및 고용영향 고려여부

○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이 지역전략산업의 성장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응답업체의 85.0%로 '그렇다'고 응답하여 목표에 부합하는 것으로 평가

○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의 사업계획 또는 목표에 지역(또는 기업)의 고용효과를 고려하고 있는지에 대해 '고려하고 있다'고 응답한 업체의 응답비율이 85.4%로 나타남

⑵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의 정책추진체계의 효율성

○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의 정책추진체계는 사업시행이 4.06점으로 가장 높고 나머지 항목들은 3.97점과 3.98점 범위에 놓여 있어 대부분 적합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됨

○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의 지원형태, 지원방식, 지원기간, 지원자격요건의 적절성

을 5점척도로 평가한 결과 지원형태는 3.93점, 지원방식 3.88점, 지원자격요건 3.82점 그리고 지원기간이 3.67점으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⑶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 집행의 적절성

○ 사업집행에 대해 응답자의 81.5%가 적절하게 집행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대답을 하고 있으며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의 집행체계가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77.0%가 긍정적인 대답을 하고 있음

○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이 정책집행과정에 고용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지를 질문한 결과로 전체 응답자의 64.3%가 긍정적인 대답을 하고 있음

⑷ 사업의 성과

○ 인력양성 사업을 제외한 세 사업의 성과는 크게 1) 특허권 2) 공정의 개선 3) 신제품의 개발 4) 매출의 증대 5) 창업으로 구분하여 질문을 하였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연계하여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각각 질문하였음

- 특허권: 응답업체의 51.2%가 성과가 있었다고 응답
- 공정의 개선: 응답업체의 56.7이 성과가 있었다고 응답
- 신제품의 개발: 응답업체의 79.4%가 성과가 있었다고 응답
- 매출의 증가: 응답업체의 64.0%가 성과가 있었다고 응답
- 창업: 성과가 있었다고 응답한 업체의 비율이 4.2%(16개)에 불과

○ 인력양성사업의 경우 최근 5년간 우수연구자와 지역 내 대학생 등을 신규 채용한 인력을 질문한 결과로 채용을 했다고 응답한 업체는 37개사로 나타났으며 대부분(91.9%)이 5명 미만이라고 응답함

- 지역전략산업 인력양성 사업을 통해 최근 5년간 교육시킨 재직자수에 대해 54개 업체가 응답하였으며 훈련생 수가 10명 미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77.8%를 차지
- 지역전략산업 인력양성 사업을 통해 교육된 인력의 질, 즉 직무능력이 어느 정도 향상되었는지에 대한 질문결과로 높다고 응답한 비율이 60.4%로 나타남

(5점척도 기준 3.59점)

- 지역전략산업 인력양성의 전반적인 성과에 대한 응답결과로 만족 58.2%, 보통 24.2%, 매우 만족 7.7%로 나타나 전반적인 성과평가가 5점척도로 3.63점을 기록

⑸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의 성과관리

○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의 성과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질문한 결과로 다소 그렇다는 의견이 54.2%, 그저 그렇다 24.1%, 매우 그렇다 18.8%의 순으로 나타나 5점척도 기준으로 평균 3.89점을 기록

○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의 성과관리에서 고용효과(인적자원개발, 인력양성, 고용유지 및 창출)를 고려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응답결과로 그렇다는 의견이 59.5%, 잘 모르겠다 34.8%, 아니다가 5.7%로 조사됨

⑹ 고용영향에 대한 종합의견

○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이 전반적으로 지역산업의 경쟁력 제고효과에 대해 응답자의 81.4%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여 5점척도 기준으로 4.07점으로 나타남

○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이 지역의 일자리 창출효과에 대해 효과가 있다는 응답비율이 69.4%로 나타나 (5점척도 기준으로 3.82점)상대적으로 지역산업의 경쟁력 제고효과 4.07점에 비해 다소 낮음

○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의 참여 후 고용창출 증가에 대해 5% 미만이라고 응답한 업체의 비율이 30.4%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5-10% 고용창출이 24.7%, 고용창출 효과가 거의 없었다가 22.6% 순으로 조사됨

라.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 고용영향 평가 심층조사

○ 주관기관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조사의 결과, 정책의 고유목표 달성도 및 정책의 고용연계성은 비교적 높은 편

- 정책 목표가 성장과 고용효과에 대한 부합정도는 높은 편이나, 성장목표에 부합(4.59/5)하는 정도가 고용창출 제고에 부합(4.24/5)하는 정도에 비해 높음
- 정책의 고용연계성 측면에서 사업목표의 고용 연계성은 비교적 잘 이루어지고 있는 편이며, 사업집행의 고용 연계성은 비교적 높은 편

<표 6-1> 심층면접조사 결과의 종합

평가 항목	평가지표	심층면접조사 결과
정책의 고유목표 달성도	사업목표의 적합성 및 실현가능성	○ 높음 – 성장목표(4.59/5) > 고용창출목표(4.24>5) – 정책목표의 성과관리 지표에 고용효과가 반영됨
	사업추진체계의 합리성	○ 적합 – 사업신청, 심사, 시행 > 계약체결, 평가
	사업집행의 적절성	○ 적합 – 성과관리의 적절성은 긍정적 – 문제점: 사업기간과 평가기간의 불일치, 인력운용, 사업간 미세한 차이 등
	사업 목표 달성도	○ 대체로 높은 편
정책의 고용 연계성	사업목표의 고용과 연계가능성	○ 높은 편 – 사업목표, 사업계획에 고용효과 고려
	사업집행과 고용 연계성	○ 긍정적 – 선정시 고용효과(신규고용 등) 고려 – 성과관리에서 고용효과 고려 – 상시적 고용효과 관리 미흡: 중앙관리기관

제2절 고용효과제고를 위한 정책 제언

가. 점진적인 사업조정

○ 고용영향 측면에서 기반구축사업은 주로 시설과 장비구축사업으로 고용효과가 상대적으로 작으므로 고용창출을 위해서는 기술개발사업 및 인력양성사업의 확대 필요

- 기반구축사업의 활용성 제고 필요성: 기존에 구축된 시설 및 장비의 활용도 제고를 통해 고용효과를 창출할 필요성이 있음. 구체적으로 인큐베이팅 기능 강화, 구축된 장비·시설을 이용한 기업지원 서비스 강화 및 인력양성 및 창출 기능 강화, 시설을 이용한 생산기능 강화 등이 요구
- 기술개발사업의 지원기간 조정 필요성: 지원건수가 많은 기술개발사업은 지원

기간이 비교적 짧아 순고용창출효과가 적은 편임. 지역의 경제적 환경과 여건에 맞게 조정하여 핵심기술 개발사업의 지원기간을 조정함으로써 참여인력의 고용안정성에 기여할 필요가 있음

- 인력양성사업의 확대 필요성: 인력양성사업은 고용효과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므로 확대 개편할 필요

나. 지역간 고용효과 격차 해소

○ 사업의 고용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업지역 간 고용효과 편차를 축소할 필요성이 제기됨

- 지역의 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여 사업지역 간 사업비의 조정지원
- 지역 내 고용영향 효과 및 전국파급 고용영향 효과가 상대적으로 큰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여 고용효과제고
- 지역에 따라 사업유형별로 사업비당 고용효과가 차이가 나므로 지역여건에 따라 고용효과가 큰 사업유형을 적극적으로 지원

다. 사전고용영향 평가 시스템의 적극적인 활용

○ 사업계획 당시부터 고용영향 평가용 예산을 이용하여 사전적 고용영향을 평가하여 고용친화적 사업으로 유도

- 고용영향 평가용 예산: 사업비 지출계획에서 집행할 사업비를 표준산업분류(혹은 산업연관표 대분류(중분류 등)로 구분한 예산서
- 실증적으로 이용 가능한 IO고용영향 평가모형으로 계획된 사업의 고용효과를 점검하여 사업조정을 유도. 동일유형의 사업에서도 세부적인 사업유형별 사전 고용영향 평가를 통해 조정 가능
- 지역별, 사업유형별(세부사업 포함) 고용영향 효과를 파악하여 사업조정을 유도

라. 정책과제

⑴ 목표설정에 고용효과를 보다 강화

○ 고용과 관련한 세부 목표를 설정하도록 하고 평가시 이에 대한 배점을 하여 고용창출에 대한 제고가 고려되도록 사업시스템 을 구축

– 사업선정시 고용유발효과를 반영하여 평가하고 있으나, 이를 정량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지표가 별로 없는 실정임

○ 사업의 정량적 및 정성적 목표에 고용창출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따른 구체적 실천 계획을 포함시켜 고용성과를 제고

⑵ 사업의 평가에 고용지표를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

○ 고용효과 등의 사항을 평가지표에 반영하여 명확히 확정한 뒤에 사업공고 추진 반영하도록 함

– 사업의 평가시 고용의 직, 간접적 효과를 수치화 한 객관적인 정량적 평가가 가능토록 해야 할 것임

○ 고용효과는 지역의 산업구조 산업의 성숙 정도, 기업의 규모 등 지역간 격차가 크다는 점을 고려하고 동시에 정량 평가 항목의 개발시 성과 판단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임

⑶ 거점 기관의 경쟁력 제고 방안 마련

○ 거점기관인 테크노파크 자체의 시스템 경쟁력에 대한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만큼 사업의주관기관인 테크노파크의 기관직원 및 연구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

○ 기반구축의 경우 장비 인프라 구축에 사업비의 90%이상이 소요, 그만큼 장비에 대한 비중이 큼. 현재까지는 주로 인프라 구축에 상당한 사업비 지원이 이루어진 게 사실임

– 현재 인프라사업 중심의 사업지원체계를 인력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⑷ 필요인력 양성 체계 구축

○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에 참여 한 후 고용과 관련하여 가장 큰 애로 사항에 대해 주로 전문인력이나 연구개발 및 우수인력 확보 문제라고 응답하여 인력확보 문제를 가장 많이 지적

- 사업의 고용효과제고를 위한 필요인력 양성체계를 구축하고 기업에 대한 우수 인력이 지속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함
- 이와 관련하여 인건비 지원 정책 필요, 자금지원, 인력 고용 지원,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업체에 대한 지원, 개발 기술에 대한 사업화 지원 등을 적극 검토

○ 인력양성 사업의 경우 채용을 위한 홍보, 다양한 교육을 통해 업체에 맞는 교육을 선택, 인력채용시 인건비 지원 등에 대해 검토

<부록 Ⅰ>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 고용영향평가조사

1.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 고용영향평가조사

ID				

(지역산업기반구축사업, 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 기업지원서비스사업 참여 사업체 대상)

안녕하십니까?

노동부는 국가 및 지자체가 시행하는 각종 정책과 사업 등이 일자리 증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해당 정책(사업)이 고유목적을 달성함에 보다 고용친화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고용영향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본 설문조사는 2004~2009년 사이에 시행되었던 지역전략산업 육성사업의 「고용영향평가」를 위한 기초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것입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 시간을 내어 설문 작성에 성의껏 응해 주시면, 상기 연구를 위한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지역전략산업 육성사업: 지역의 전략산업육성을 위해 지식경제부가 주관하여 추진하는 국책사업으로 크게 인프라 구축, 기술개발, 인력양성, 마케팅 등 기업지원서비스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0년 5월

주 관 기 관: 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협 조 기 관: 지식경제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연 구 자: 성균관대학교 이해춘연구교수,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윤석천교수

※ 본 조사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사기관: (주)아이알씨** (150-871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4-8 극동VIP빌딩 400호)
▶ **담 당 자: 김서균 팀장 (T)02-6279-1920**
▶ **회 신 처: sgkim@irc.ne.kr (F)0505-909-8170**

※ 본 조사의 결과는 통계법 제33조에 의거하여 비밀이 보장되며, 설문에 대한 모든 응답과 개인적인 사항은 철저히 무기명으로 처리되고, 통계분석의 목적 이외에는 절대 사용되지 않습니다.

「통계법」

제33조 (비밀의 보호)
① 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②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립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된다.

응답자	사 업 체 명			
	응 답 자 명		직 책	
	전 화 번 호	( ) -		
	소 재 지	시(도) 구(시/군) 동(면) 번지		

※ LIST ID	※ 면접원	※ 검토자1	※ 검토자2	※ 검토자3

Ⅰ 사업체 일반현황

1. 귀사의 창업연도는 몇 년도 입니까? | | | | | 년도

2. 귀사의 연도별 종업원 현황

	2006년말	2007년말	2008년말	2009년말
정규직				
비정규직				
계				

3. 귀사의 연도별 매출액 현황

	2006년말	2007년말	2008년말	2009년말
매출액	억원	억원	억원	억원

4. 귀사의 주력 생산분야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매출액을 기준으로 주력 업종을 아래 표에서 하나만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업 종				
기간산업	11. 섬유	12. 의류	13. 신발	14. 석유화학	15. 철강
	16. 기계	17. 가전	18. 자동차	19. 조선	
지식기반 제조업	21. 전자정보기기		22. 반도체		23. 메카트로닉스
	24. 정밀화학		25. 생물산업		26. 정밀기기
	27. 신소재		28. 환경		29. 항공우주
지식기반 서비스업	31. 정보서비스		32. 비즈니스서비스		33. 문 화
	34. 관 광		35. 물 류		

5. 아래 각각의 세부사업 중에서 귀사가 참여했던 사업을 선택하여, 참여연도에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세부사업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1.지역산업 기반구축 사업 (인프라사업)	11. 4개 지역 2단계 지역산업 기반 구축사업						
	12. Post 4+9 지역산업기반구축 사업						
	13. 지역혁신산업기반구축사업 (인프라)						
	14. 세부사업 구분 못함						
2.지역산업 기술개발 사업	21. 지역산업 선도기술개발사업						
	22. 지역전략기획 기술개발사업						
	23. 지역연계기술 개발사업						
	24. 지역기반육성기반 기술개발사업						
	25. 세부사업 구분 못함						
3.기업지원 서 비 스 사업	31. 지역산업기술지원사업						
	32. 전략산업 마케팅 활성화사업						
	33. 전략산업연계 지식서비스산업 지원사업						
	34. 세부사업 구분 못함						
4.지역산업인력양성사업							

6. 위 5번 질문에서 참여하셨다고 응답하신 사업 중 가장 대표적인 사업을 한 가지만 적어주십시오.

11. 4개 지역 2단계 지역산업 기반 구축사업
12. Post 4+9 지역산업기반구축 사업
13. 지역혁신산업기반구축사업 (인프라)
21. 지역산업 선도기술개발사업
22. 지역전략기획 기술개발사업
23. 지역연계기술 개발사업
24. 지역기반육성기반 기술개발사업
31. 지역산업기술지원사업
32. 전략산업 마케팅 활성화사업
33. 전략산업연계 지식서비스산업 지원사업
34. 세부사업을 구분 할 수 없음 ▶ 문6-1

6-1. 위 6번에서 세부사업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다음 중 가장 대표적인 사업은 무엇입니까?

1. 지역산업기반구축사업(인프라사업) 2. 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 3. 기업지원서비스사업

7. 귀사가 문6에서 말씀하신 사업에 참여하여 거둔 성과가 무엇인지 성과의 종류별로 응답해주시고, 성과가 있었던 경우에 고용에 미친 영향이 어떤 것이었는지 응답해주십시오.

성과의 종류	해당유무	고용에 미친 영향 (좌측에서 성과가 있었다 응답한 경우)
1) 특허권	1. 성과있었음 ▶ 2. 성과없었음	1. 신규채용 2. 경력채용 3. 감원 4. 배치조정 5. 생산성증가 6. 교육훈련
2) 공정의 개선	1. 성과있었음 ▶ 2. 성과없었음	1. 신규채용 2. 경력채용 3. 감원 4. 배치조정 5. 생산성증가 6. 교육훈련
3) 신제품의 개발	1. 성과있었음 ▶ 2. 성과없었음	1. 신규채용 2. 경력채용 3. 감원 4. 배치조정 5. 생산성증가 6. 교육훈련
4) 매출의 증대	1. 성과있었음 ▶ 2. 성과없었음	1. 신규채용 2. 경력채용 3. 감원 4. 배치조정 5. 생산성증가 6. 교육훈련
5) 창업	1. 성과있었음 ▶ 2. 성과없었음	1. 신규채용 2. 경력채용 3. 감원 4. 배치조정 5. 생산성증가 6. 교육훈련

7_1. 6번에서 대표적인 사업을 "지역산업기반구축사업=인프라사업(보기 11~14번)" 이라고 응답한 경우, 귀사가 참여한 것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1. 장비 설치 및 대여 2. 창업보육

Ⅱ 지역전략산업 육성사업 목표의 적합성 및 실현가능성

8. 귀하는 지역전략산업 육성사업이 지역전략산업의 성장과 고용효과(인적자원개발, 인력양성, 고용유지 및 창출) 제고에 부합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다소 그렇다	매우 그렇다	응답란
1) 지역전략산업의 성장에 부합한다	1	2	3	4	5	
2) 고용창출 제고에 부합한다	1	2	3	4	5	

9. 지역전략산업 육성사업이 사업계획 또는 목표에 지역(또는 기업)의 고용효과(인적자원개발, 인력양성, 고용유지 및 창출)를 고려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사업목표에 고용효과를 매우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2. 사업목표에 고용효과를 다소 고려하고 있는 편이다
3. 사업목표에 고용효과를 제대로 고려하고 있지 않다
4. 사업목표에 고용효과를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
5. 잘 모르겠다

Ⅲ 지역전략산업 인력양성사업의 정책추진체계의 효율성 평

10. 지역전략산업 육성사업의 정책추진체계는 사업신청-심사-계약체결-사업시행-성과평가 과정입니다. 이러한 정책추진체계가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적합하지않다	적합하지 않다	그저 그렇다	적합하다	매우 적합하다	응답란
1) 사업의 신청	1	2	3	4	5	
2) 심사	1	2	3	4	5	
3) 계약체결	1	2	3	4	5	
4) 사업시행	1	2	3	4	5	
5) 성과평가과정	1	2	3	4	5	

11. 지역전략산업 육성사업의 지원형태, 지원방식, 지원기간, 지원자격 등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적절하지않다	적절하지 않다	그저 그렇다	적절하다	매우 적절하다	응답란
1) 지원형태	1	2	3	4	5	
2) 지원방식	1	2	3	4	5	
3) 지원기간	1	2	3	4	5	
4) 지원자격요건	1	2	3	4	5	

12. 지역전략산업 육성사업의 추진체계 내에 고용효과(인적자원개발, 인력양성, 고용유지 및 창출)를 제고하기 위한 실천적인 방안이 마련되어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1. 사업추진체계에 고용효과를 매우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2. 사업추진체계에 고용효과를 다소 고려하고 있는 편이다
3. 사업추진체계에 고용효과를 제대로 고려하고 있지 않다
4. 사업추진체계에 고용효과를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
5. 잘 모르겠다

Ⅳ 지역전략산업 육성사업 집행의 적절성

13. 지역전략산업 육성사업이 계획대로 잘 집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그저 그렇다 4. 다소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14. 지역전략산업 육성사업의 집행체계는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그저 그렇다 4. 다소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15. 정책집행과정에 고용효과(인적자원개발, 인력양성, 고용유지 및 창출)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그저 그렇다 4. 다소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Ⅴ 지역전략산업 육성사업의 성과관리 및 사후관리 평

16. 지역전략산업 육성사업의 성과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그저 그렇다 4. 다소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17. 지역전략산업 육성사업의 성과관리에서 고용효과(인적자원개발, 인력양성, 고용유지 및 창출)를 고려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1. 그렇다 2. 아니다 3. 잘 모르겠다

18. 지역전략산업 육성사업의 사후관리 및 책임관리체계는 효과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그저 그렇다 4. 다소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19. 지역전략산업 육성사업의 사후관리 및 책임관리체계에서 고용효과(인적자원개발, 인력양성, 고용유지 및 창출)를 고려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1. 그렇다 2. 아니다 3. 잘 모르겠다

Ⅵ 고용영향에 대한 종합의견

20. 지역전략산업 육성사업이 전반적으로 지역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다소 그렇다	매우 그렇다	응답란
1) 지역산업의 경쟁력 제고	1	2	3	4	5	
2) 고용효과(인적자원개발, 인력양성, 고용유지 및 창출) 제고	1	2	3	4	5	

21. 귀사에서는 지역전략산업 육성사업에 참여한 후 고용창출이 얼마나 증가하였습니까?

1. 고용창출 효과가 거의 없다
2. 5% 미만 고용이 증가하였다
3. 5-10%미만 고용이 증가하였다
4. 10-20% 미만 고용이 증가하였다
5. 20-30% 미만 고용이 증가하였다
6. 30% 이상 고용이 증가하였다

Ⅶ 지역전략산업의 고용효과제고를 위한 방안

22. 귀사에서 지역전략산업 육성사업에 참여한 후 고용과 관련하여 느낀 가장 큰 불편(애로)사항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가령, 우수인력 확보 등)

23. 지역전략산업 육성사업의 고용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현행 사업내용에서 어떤 제도적 개선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체적인 내용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소중한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부록 Ⅱ> 지역전략산업육성사업 고용영향평가조사

2. 지역전략산업육성사업 고용영향평가조사(인력양성사업 참여 사업체 대상)

ID				

안녕하십니까?

노동부는 국가 및 지자체가 시행하는 각종 정책과 사업 등이 일자리 증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해당 정책(사업)이 고유목적을 달성함에 보다 고용친화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고용영향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본 설문조사는 2004~2009년 사이에 시행되었던 지역전략산업 육성사업의 「고용영향평가」를 위한 기초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것입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 시간을 내어 설문 작성에 성의껏 응해 주시면, 상기 연구를 위한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지역전략산업 육성사업: 지역의 전략산업육성을 위해 지식경제부가 주관하여 추진하는 국책사업으로 크게 인프라 구축, 기술개발, 인력양성, 마케팅 등 기업지원서비스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0년 5월

주 관 기 관: 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협 조 기 관: 지식경제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연 구 자: 성균관대학교 이해춘연구교수,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윤석천교수

※ 본 조사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사기관: (주)아이알씨** (150-871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4-8 극동VIP빌딩 400호)
▶ **담 당 자: 김서균 팀장 (T)02-6279-1920**
▶ **회 신 처: sgkim@irc.ne.kr (F)0505-909-8170**

※ 본 조사의 결과는 통계법 제33조에 의거하여 비밀이 보장되며, 설문에 대한 모든 응답과 개인적인 사항은 철저히 무기명으로 처리되고, 통계분석의 목적 이외에는 절대 사용되지 않습니다.

「통계법」

제33조 (비밀의 보호)
① 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②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립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된다.

응답자	사 업 체 명			
	응 답 자 명		직 책	
	전 화 번 호	( ) -		
	소 재 지	시(도) 구(시/군) 동(면) 번지		

※ LIST ID	※ 면접원	※ 검토자1	※ 검토자2	※ 검토자3

Ⅰ 사업체 일반현황

1. 귀사의 창업연도는 몇 년도 입니까? [ ][ ][ ][ ] 년도

2. 귀사의 연도별 종업원 현황

	2006년말	2007년말	2008년말	2009년말
정규직				
비정규직				
계				

3. 귀사의 연도별 매출액 현황

	2006년말	2007년말	2008년말	2009년말
매출액	억원	억원	억원	억원

☐ **4. 귀사의 주력 생산분야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매출액을 기준으로 주력 업종을 아래 표에서 하나만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산업	지식기반제조업	지식기반서비스업
11. 섬유	21. 전자정보기기	31. 정보서비스
12. 의류	22. 반도체	32. 비즈니스서비스
13. 신발	23. 메카트로닉스	33. 문 화
14. 석유화학	24. 정밀화학	34. 관 광
15. 철강	25. 생물산업	35. 물 류
16. 기계	26. 정밀기기	
17. 가전	27. 신소재	
18. 자동차	28. 환경	
19. 조선	29. 항공우주	

5. 귀사가 지역전략산업 육성사업 중 인력양성사업에 참여한 연도는 언제인지 참여연도에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지역산업인력양성사업						

☐ **6. 귀사는 인력양성사업 이외의 지역전략산업 육성사업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까?**

1. 예 ▶ 문6_1　　2. 아니오 ▶ 문7

6_1. 아래 각각의 세부사업 중에 참여했던 사업을 선택하여, 참여연도에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세부사업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1.지역산업기반구축사업 (인프라사업)	11. 4개 지역 2단계 지역산업 기반 구축사업						
	12. Post 4+9 지역산업기반구축 사업						
	13. 지역혁신산업기반구축사업 (인프라)						
	14. 세부사업 구분 못함						
2.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	21. 지역산업 선도기술개발사업						
	22. 지역전략기획 기술개발사업						
	23. 지역연계기술 개발사업						
	24. 지역기반육성기반 기술개발사업						
	25. 세부사업 구분 못함						
3.기업지원서비스 사업	31. 지역산업기술지원사업						
	32. 전략산업 마케팅 활성화사업						
	33. 전략산업연계 지식서비스산업 지원사업						
	35. 세부사업 구분 못함						

6_2. 귀사는 위의 사업참여를 통해 창업하였거나 창업에 도움(기술개발에 의한 창업 아이템의 확보, 시장개척에 의한 창업, 인프라 투자로 창업보육센터의 이용, 고가기술설비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창업 등)을 받았습니까?

1. 예 2. 아니오

6_3. 응답하신 사업의 참여로 귀사는 인력을 채용했거나 또는 채용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구 분	채용한 인력 수	채용 계획 인력 수
인원 수	명	명

Ⅱ 인력양성사업 목표의 적합성 및 실현가능성 평가

7. 인력양성사업의 목표는 "지역 전략산업의 현장기술 인력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정착형 예비기술인력 양성" 입니다. 이러한 목표에 대해 아래 각 항목별로 평가해 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다소 그렇다	매우 그렇다	응답란
1) 목표가 적합하다	1	2	3	4	5	
2) 실현 가능하다	1	2	3	4	5	

8. 인력양성사업의 사업계획 또는 목표에 지역(기업)의 고용효과제고를 고려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사업목표에 고용효과를 매우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2. 사업목표에 고용효과를 다소 고려하고 있는 편이다
3. 사업목표에 고용효과를 제대로 고려하고 있지 않다
4. 사업목표에 고용효과를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
5. 잘 모르겠다

Ⅲ 지역전략산업 인력양성사업의 정책추진체계의 효율성 평

9. 인력양성사업의 정책추진체계는 사업신청-심사-계약체결-사업시행-성과평가 과정입니다. 이러한 정책추진체계가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적합하지않다	적합하지 않다	그저 그렇다	적합하다	매우 적합하다	응답란
1) 사업의 신청	1	2	3	4	5	
2) 심사	1	2	3	4	5	
3) 계약체결	1	2	3	4	5	
4) 사업시행	1	2	3	4	5	
5) 성과평가과정	1	2	3	4	5	

10. 인력양성사업의 지원형태, 지원방식, 지원기간, 지원자격 등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적절하지않다	적절하지 않다	그저 그렇다	적절하다	매우 적절하다	응답란
1) 지원형태	1	2	3	4	5	
2) 지원방식	1	2	3	4	5	
3) 지원기간	1	2	3	4	5	
4) 지원자격요건	1	2	3	4	5	

11. 인력양성사업의 추진체계 내에 고용효과(인적자원개발, 인력양성, 고용유지 및 창출)를 제고하기 위한 실천적인 방안이 마련되어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1. 사업추진체계에 고용효과를 매우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2. 사업추진체계에 고용효과를 다소 고려하고 있는 편이다
3. 사업추진체계에 고용효과를 제대로 고려하고 있지 않다
4. 사업추진체계에 고용효과를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
5. 잘 모르겠다

Ⅳ 인력양성사업 집행의 적절성

12. 인력양성사업이 계획대로 잘 집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그저 그렇다 4. 다소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13. 인력양성사업의 집행체계는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그저 그렇다 4. 다소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14. 정책집행과정에 고용효과(인적자원개발, 인력양성, 고용유지 및 창출)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그저 그렇다 4. 다소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Ⅴ 인력양성사업의 성과관리 및 사후관리 평가

15. 인력양성사업의 성과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그저 그렇다 4. 다소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16. 인력양성사업의 성과관리에서 고용효과(인적자원개발, 인력양성, 고용유지 및 창출)를 고려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1. 그렇다 2. 아니다 3. 잘 모르겠다

17. 인력양성사업의 사후관리 및 책임관리체계는 효과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그저 그렇다 4. 다소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18. 인력양성사업의 사후관리 및 책임관리체계에서 고용효과(인적자원개발, 인력양성, 고용유지 및 창출)를 고려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1. 그렇다 2. 아니다 3. 잘 모르겠다

Ⅵ 인력양성사업의 성과 평가

19. 귀사는 지역전략산업 인력양성사업의 어느 분야에 참여하였습니까?

1. 해외 및 타 지역 우수연구자 초빙(A형) ▶ 문19_1
2. 지역 내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기업에서 위탁교육(B형) ▶ 문19_1
3. 산학연 연계 One-Stop 현장인력 재교육(C형) ▶ 문19_2
4. 근로자를 대상으로 대학원 통합과정에 참여(D형) ▶ 문19_2
5. 지역간, 유사업종간 연계 강화 프로그램에의 참여(E형) ▶ 문19_2

19_1. 귀사가 지역전략산업 인력양성사업을 통해 최근 5년간 우수연구자와 지역 내 대학생 등을 신규 채용한 인력은 모두 몇 명입니까?

1. 5명 미만 2. 5~10명 3. 11~20명 4. 21~50명 5. 50명 이상

19_2. 귀사가 지역전략산업 인력양성사업을 통해 최근 5년간 교육시킨 재직자는 몇 명입니까?

1. 10명 미만 2. 10~29명 3. 30~59명 4. 60~99명 5. 100명 이상

20. 귀사는 지역전략산업 인력양성사업에 참여를 결정하기 위한 정보를 쉽게 구할 수 있었습니까?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그저 그렇다 4. 다소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21. 귀사는 지역전략산업 인력양성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관기관 등과 얼마나 자주 접촉하는지요?

1. 연간 2회 미만 2. 연간 3~4회 3. 월 1회 4. 월 2회 5. 월 3회 이상

22. 귀사는 지역전략산업 인력양성사업을 통해 교육된 인력의 질, 즉 직무능력이 어느 정도 향상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낮음 2. 낮음 3. 보통 4. 높음 5. 매우 높음

23. 귀사는 지역전략산업 인력양성사업을 통해 외부로부터 충분한 신규인력을 공급받았습니까?

1. 매우 미흡 2. 미흡 3. 보통 4. 만족 5. 매우 만족

24. 귀사는 귀사의 제품생산과 관련하여 지역전략산업 인력양성사업 이외의 다른 인력양성프로젝트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까?

1. 예 2. 아니오

25. 귀사는 지역전략산업 인력양성사업을 통해 얻은 전반적인 성과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1. 매우 미흡 2. 미흡 3. 보통 4. 만족 5. 매우 만족

26. 귀사는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귀사의 인력양성을 양성할 계획입니까?

1. 지역전략산업 인력양성사업에 참여 2. 다른 국책 인력양성사업에 참여
3. 사내 인력양성사업 별도 추진 4.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교육 추진

Ⅶ 고용영향에 대한 종합의견

27. 인력양성사업이 전반적으로 지역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않다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다소 그렇다	매우 그렇다	응답란
1) 지역산업의 경쟁력 제고	1	2	3	4	5	
2) 고용효과(인적자원개발, 인력양성, 고용유지 및 창출) 제고	1	2	3	4	5	

28. 귀사에서는 지역전략산업 육성사업에 참여한 후 고용창출이 얼마나 증가하였습니까?

1. 고용창출 효과가 거의 없다 2. 5% 미만 고용이 증가하였다
3. 5-10%미만 고용이 증가하였다 4. 10-20% 미만 고용이 증가하였다
5. 20-30% 미만 고용이 증가하였다 6. 30% 이상 고용이 증가하였다

Ⅷ 인력양성사업의 고용효과제고를 위한 방안

29. 귀사에서 인력양성사업에 참여한 후 느낀 가장 큰 불편(애로)사항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가령, 우수 인력 확보 등)

30. 인력양성사업의 고용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현행 사업내용에서 어떤 제도적 개선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체적인 내용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소중한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주관기관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위한 심층조사

ID				

안녕하십니까?

본 조사의 목적은 귀 2004~2009년 사이에 지역에서 시행되었던 지역전략산업 육성사업의 고용효과제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역전략산업 육성사업은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산업클러스터 형성을 활성화함으로써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혁신체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추진되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지역전략산업 육성사업 중 지역산업기반구축사업(인프라), 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 기업지원서비스사업, 지역산업인력양성사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 시간을 내어 설문 작성에 성의껏 응해 주시면, 상기 연구를 위한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2010년 5월

주 관 기 관: 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협 조 기 관: 지식경제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연 구 자: 성균관대학교 이해춘연구교수,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윤석천교수
조 사 기 관: 리서치플러스

※ 본 조사의 결과는 통계법 제33조에 의거하여 비밀이 보장되며, 설문에 대한 모든 응답과 개인적인 사항은 철저히 무기명으로 처리되고, 통계분석의 목적 이외에는 절대 사용되지 않습니다.

「통계법」

제33조 (비밀의 보호)

① 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②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립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된다.

응답자	기 관 명			
	응 답 자 명		직 책	
	전 화 번 호	( ) -		
	소 재 지	시(도) 구(시/군) 동(면) 번지		

※ LIST ID	※ 면접원	※ 검토자1	※ 검토자2	※ 검토자3

※표시 항목은 (주)아이알씨에서 기입하는 란입니다.

< 지역전략산업 육성 사업 현황 >

단위: 개

권역 및 지역		사업유형				계
		인프라	기술개발	인력양성	기술지원	
충청권	대전	3	4	5	7	19
	충남	5	4	5	4	18
	충북	5	4	5	5	19
호남권	광주	3	4	5	6	18
	전남	3	4	4	6	17
	전북	5	4	4	6	19
동남권	부산	5	4	5	4	18
	울산	3	4	5	6	18
	경남	5	4	4	4	17
대경권	대구	7	4	6	6	23
	경북	3	4	4	5	16
강원 제주	강원	6	4	5	7	22
	제주	3	4	3	5	15
	계	56	52	60	71	239

주: 각 사업주체의 수혜기업(기관)은 생략함.

○ 지역전략산업 육성사업은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산업클러스터 형성을 활성화함으로써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혁신체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추진되고 있습니다

○ 본 조사는 지역전략산업 육성사업 중 지역산업기반구축사업(인프라), 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 기업지원서비스사업, 지역산업인력양성사업의 고용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것입니다.

○ 고용영향 평가의 목적은 국가·지자체의 주요 사업·정책 및 법·제도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고용친화적 정책추진을 지원하는데 있으며 평가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정책의 고유목표 달성도 및 정책과 고용과의 연계성 검토 결과
둘째, 해당 정책으로 인해 발생하는 일자리 증감 수 및 질
셋째, 고용창출에 긍정적 영향을 확대시키기 위한 정책제언

○ Ⅰ~Ⅳ부분은 귀 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설문에 응답해 주시고, Ⅴ(지역전략산업의 고용영향 종합평가)부분에서는 전반적인 지역전략산업을 고려하여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Ⅰ 조사대상 기관 개요

1. 다음 지역전략산업 육성사업 중에 귀하께서 주로 관리하고 있는 사업에 ○표해 주시고, 귀 기관에서 그 사업을 수행한 기간을 적어주십시오.

사업	세부사업	주로 관리하고 있는 사업(○표)	귀 기관이 수행한 기간
1.지역산업기반구축사업(인프라사업)	11. 4개 지역 2단계 지역산업 기반 구축사업		년
	12. Post 4+9 지역산업기반구축 사업		년
	13. 지역혁신산업기반구축사업 (인프라)		년
2.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	21. 지역산업 선도기술개발사업		년
	22. 지역전략기획 기술개발사업		년
	23. 지역연계기술 개발사업		년
	24. 지역기반육성기반 기술개발사업		년
3.기업지원서비스 사업	31. 지역산업기술지원사업		년
	32. 전략산업 마케팅 활성화사업		년
	33. 전략산업연계 지식서비스산업 지원사업		년
4.지역산업인력양성사업			년

Ⅱ 지역전략산업 육성사업 목표의 실현가능성 평가

〈 목표의 적합성 및 실현가능성 〉

2. 귀하는 지역전략산업 육성사업이 지역전략산업의 성장과 고용효과(인적자원개발, 인력양성, 고용유지 및 창출)제고에 부합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다소 그렇다	매우 그렇다	응답란
1) 지역전략산업의 성장에 부합한다	1	2	3	4	5	
2) 고용창출 제고에 부합한다	1	2	3	4	5	

2_1. 위 문항에서 “부합하지 않는다” 에 응답한 경우,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용영향 목표 고려여부 〉

3. 지역전략산업 육성사업이 사업계획 또는 목표에 지역(기업)의 고용효과(인적자원개발, 인력양성, 고용유지 및 창출)를 고려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사업목표에 고용효과를 매우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 문3_1
2. 사업목표에 고용효과를 다소 고려하고 있는 편이다 ▶ 문3_1
3. 사업목표에 고용효과를 제대로 고려하고 있지 않다 ▶ 문4
4. 사업목표에 고용효과를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 ▶ 문4
5. 잘 모르겠다 ▶ 문4

3_1. 위 문항에서 고용효과를 고려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면, 사업계획 또는 목표에 구체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내용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 고용영향 목표 고려방안 〉

4. 귀하가 생각하기에 지역전략산업 육성사업의 목표에 고용효과(인적자원개발, 인력양성, 고용유지 및 창출)를 고려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그저 그렇다 4. 다소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4_1. 지역전략산업 육성사업이 지역이나 기업의 고용효과(인적자원개발, 인력양성, 고용유지 및 창출)제고를 위해서는 어떻게 사업의 목표나 계획을 설정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안을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Ⅲ 지역전략산업 인력양성사업의 정책추진체계의 효율성 평가

〈 정책추진체계의 목표부합성 〉

5. 지역전략산업 육성사업의 정책추진체계는 사업신청-심사-계약체결-사업시행-성과평가 과정입니다. 이러한 정책추진체계가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적합하지않다	적합하지 않다	그저 그렇다	적합하다	매우 적합하다	응답란
1) 사업의 신청	1	2	3	4	5	
2) 심사	1	2	3	4	5	
3) 계약체결	1	2	3	4	5	
4) 사업시행	1	2	3	4	5	
5) 성과평가과정	1	2	3	4	5	

5_1. 사업의 정책추진체계에서 개선이 가장 필요한 분야는 어느 분야이며, 어떻게 개선하는 것이 좋을지 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6. 지역전략산업 육성사업의 추진체계 내에 고용효과(인적자원개발, 인력양성, 고용유지 및 창출)를 높이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1. 사업추진체계에 고용효과를 매우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 문6_1
2. 사업추진체계에 고용효과를 다소 고려하고 있는 편이다 ▶ 문6_1
3. 사업추진체계에 고용효과를 제대로 고려하고 있지 않다 ▶ 문7
4. 사업추진체계에 고용효과를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 ▶ 문7
5. 잘 모르겠다 ▶ 문7

6_1. 위 문항에서 고용효과(인적자원개발, 인력양성, 고용유지 및 창출)를 고려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면, 사업추진체계에 고용영향을 설정하고 있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7. 귀하가 생각하기에 지역전략산업 육성사업의 추진체계에 고용효과(인적자원개발, 인력양성, 고용유지 및 창출)를 고려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그저 그렇다　4. 다소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8. 고용효과(인적자원개발, 인력양성, 고용유지 및 창출)제고를 위해 지역전략산업 육성사업의 추진체계를 어떤 식으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업의 선정시 고용효과를 반영하여 평가 등

〈 사업추진 내용의 적절성 〉

9. 지역전략산업 육성사업의 지원형태, 지원방식, 지원기간, 지원자격 등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적절하지않다	적절하지 않다	그저 그렇다	적절하다	매우 적절하다	응답란
1) 지원형태	1	2	3	4	5	
2) 지원방식	1	2	3	4	5	
3) 지원기간	1	2	3	4	5	
4) 지원자격요건	1	2	3	4	5	

10.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며 개선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개선이 필요한 내용 및 개선방안
1) 지원형태	
2) 지원방식	
3) 지원기간	
4) 지원자격요건	

11. 사업추진내용(지원형태, 지원방식, 지원기간, 지원자격 요건)이 고용효과(인적자원개발, 인력양성, 고용유지 및 창출)를 고려하여 설정되어 있습니까?

1. 예 ▶ 문11_1　　2. 아니오 ▶ 문12

11_1. 위 문항에서 "예" 라고 응답한 경우, 구체적으로 어떻게 고려하고 있는지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업의 지원요건시 고용효과가 높은 기업을 우대 등

Ⅳ 지역전략산업 육성사업의 성과관리 및 사후관리 평가

〈 사업성과의 활용 및 확산 〉

12. 지역전략산업 육성사업의 성과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전혀 그렇지 않다 ▶ 문12_1　　2. 그렇지 않다 ▶ 문12_1　3. 그저 그렇다 ▶ 문13
4. 다소 그렇다 ▶ 문13　　5. 매우 그렇다 ▶ 문13

12_1. 위 문항에서 잘 되고 있지 않다고 응답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며,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의견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13. 지역전략산업 육성사업의 성과관리에 고용효과(인적자원개발, 인력양성, 고용유지 및 창출)를 고려하고 있습니까?

1. 전혀 그렇지 않다 ▶ 문13_2　　2. 그렇지 않다 ▶ 문13_2　3. 그저 그렇다 ▶ 문13_2
4. 다소 그렇다 ▶ 문13_1　　5. 매우 그렇다 ▶ 문13_1

13_1. 위 문항에서 성과관리에 고용효과 평가가 고려되어 있다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13_2. 위 13문항에서 성과관리에 고용효과가 고려되어 있지 않거나 되어 있더라도 미흡하다고 생각한다면, 성과관리를 통해 고용효과(인적자원개발, 인력양성, 고용유지 및 창출)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의 가능성 및 구체적인 방안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Ⅴ 고용영향에 대한 종합의견

※ 여기서는 지역전략산업 육성사업의 전반적인 내용을 고려하여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지역전략산업 육성사업이 전반적으로 지역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고용효과제고에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않다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다소 그렇다	매우 그렇다	응답란
1) 지역산업의 경쟁력 제고	1	2	3	4	5	
2) 고용효과(인적자원개발, 인력양성, 고용유지 및 창출) 제고	1	2	3	4	5	

15. 지역전략산업 육성사업의 고용효과(인적자원개발, 인력양성, 고용유지 및 창출)를 제고함에 있어 애로사항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효과제고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내용
1.지역산업기반구축사업(인프라사업)	
2. 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	
3. 기업지원서비스사업	
4. 지역산업인력양성사업	

16. 다음의 지역전략산업 육성사업의 사업과정을 어떻게 조정하면 신규 고용창출이 가능하며, 고용이 증가할 수 있을지, 어떤 조정을 통해 기존 인력의 고용 안정성이 제고될 수 있는지에 대해 의견을 적어 주십시오.

(예: 사업 과정(계획-집행의 과정) 조정, 사업의 지원(참여)의 자격요건, 지원금 규모,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성과 평가 방식 등 기타)

	고용효과제고를 위해 가장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개선사항
1.지역산업기반구축사업(인프라사업)	
2. 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	
3. 기업지원서비스사업	
4. 지역산업인력양성사업	

17. 지역전략산업 육성사업의 고용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실천적인 방안을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7_1. 사업의 목표나 추진체계 또는 집행과정 및 성과관리에 고용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7_2. 고용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필요한 노동시장정책(교육훈련, 지역 내 인력양성, 빈일자리 채우기 등)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8. 고용효과(인적자원개발, 인력양성, 고용유지 및 창출)를 제고하도록 사업내용이 개선된다면, 현재에 비해 고용창출이 얼마나 증가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1. 고용창출 효과가 거의 없을 것이다.
2. 현재보다 고용창출이 5% 미만 증가할 것이다
3. 현재보다 고용창출이 5-10%미만 증가할 것이다
4. 현재보다 고용창출이 10-20% 미만 증가할 것이다
5. 현재보다 고용창출이 20-30% 미만 증가할 것이다
6. 현재보다 고용창출이 30% 이상 증가할 것이다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소중한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